

KWDI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이명진 · 최슬기

2011

연구보고서-5-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연구수행기관 : 한국조사연구학회

연구책임자 : 이 명 진 (고려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최 슬 기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보조자 : 안 소 영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박 기 태 (하와이대학교 박사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

1. 연구총서 시리즈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011-5	가족의 미래와 여성·가족정책전망(I)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5-1	미래환경스캐닝을 통해서 본 가족환경변화	한 국 행 정 연 구 원
2011-5-2	국내외 가족정책의 쟁점과 가족환경변화	한 국 가 족 학 회
2011-5-3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한 국 조 사 연 구 학 회

2. 참여연구자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장혜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혜영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한국행정 연구원	서용석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다혜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원)
	한국가족학회	윤홍식 (인하대학교 교수)	류연규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신경아 (한림대학교 교수) 윤성호 (원광디지털대학교 교수) 이숙진 (젠더연구소) 안세아 (인하대학교 박사수료)
위탁 연구기관	한국조사 연구학회	이명진 (고려대학교 교수)	최슬기 (이화여자대학교 연구교수)

연구요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압축적인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쳤다. 서구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불과 수십 년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변동 또한 넓은 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구조의 다양화 및 가구의 규모·기능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수의 감소,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 해체 추세의 증가 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은 위기를 넘어 해체까지 언급될 정도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다양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족의 미래에 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으로 한국 사회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미래의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1)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이론적 연구 성과 분석
-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미래 예측을 위한 방법론적 연구 성과 및 사례 분석
- 국외 사례 검토

2) 객관적 자료 분석

- 인구통계자료 및 주요 연구 대상 코호트 분석
- 객관적인 인구구조와 가족환경을 포함한 인과 모형을 구성

- 인구구조 예측에 사용된 기존의 추세치를 활용하는 방식과 각종 관련 변수를 포함하여 예측방법론(forecasting model) 활용

3) 주관적 자료 분석

-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조사를 실시
-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

4) 예측방법과 시나리오기법 결과 검토 및 정책방안

- 2030년 전후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나. 연구방법

1) 문헌연구

-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예측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유사 국외 사례 연구
- 기존의 추세법과 시나리오 방법론 고찰

2) 전문가조사

- 조사대상: 인구 및 가족 관련 전문가 96명 (유효표본)
- 조사방법: 인터넷 조사
- 조사일정: 2011년 9월-10월

3) 장래인구가구추계 연구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기반으로 인구구조와 가족구조 추계
- 코호트요인법을 사용하여 장래인구추계 실시

4) 시나리오 기법 연구

- 시나리오 기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가 조사 실시

- 전문가 조사결과를 기초값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 실시
-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정리

다. 연구의 기대효과 및 제한점

-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환경의 변화를 예측하여 장기적·차별적 가족 정책 수립에 필수적 정보 제공
- 가족 변동 추동의 새로운 요인 발견 및 활용으로 정책적 방향을 검토
- 가족 변화 예측을 위한 다양한 미래연구 방법론의 검토 및 활용
- 국내외 미래연구 검토 및 가족변동에의 시사점 도출/적용
- 인구·가족 변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조망

3. 연구 결과

가. 선행 연구

한국 사회의 인구구조와 가족구조의 변화의 중요 차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출산율의 감소이다. 산업화 및 도시화 수준, 교육 수준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초혼연령의 상승 등으로 낮은 출산력이 지속되고 있다. 두 번째는 노년인구의 증가이다.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노령인구의 절대적 규모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감소로 전체 인구에서 노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고 있다. 세 번째는 가족 형태의 다양화이다.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 가족의 증가 등 비전형적인 가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앞선 두 가지 경향과 연결되어 좀 더 복잡한 결과로 나타난다. 1인 노년가구의 급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 국외 사례: 일본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베이비붐 기간(1947-1949) 이후부터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97년부터 소자화(小子化)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그리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미혼자녀와 부부를 전형으로 하는 부부제 가족으로의 변화가 나타나 독신 노인이나 고령자 부부 가구가 급격

히 증가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와 함께 일본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이다. 일본에서 국제결혼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족 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자녀의 교육문제 등 다양한 가족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 장래인구가족추계와 가족의 미래

1) 세대규모의 축소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는 한동안 지속된다.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 중 연령대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50세로 868,684명에 이른다. 가장 인구수가 작은 연령은 55세로 662,739명이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8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연령대는 29세, 37~42세, 45세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규모가 작아지는 양상은 20년 후인 2030년에 더욱 심화된다. 2030년에는 14세 인구가 398,576명으로 30만 명대에 접어들게 되고 0세 인구는 348,204명에 불과하게 된다. 이때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연령대는 60세로 842,127명이다.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한 연령층에 70만 명 이상의 세대규모로 한국 사회를 지탱했던 성인세대들이 2030년에는 장년층과 고령층에 접어들게 든다. 그리고 2030년에는 평균적인 한 연령층의 규모가 30대는 65만 명, 20대는 45만명, 10대는 40만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2) 결혼긴장 문제의 확산

세대규모의 축소에 따라 국민연금, 의료보장 등 노인 복지부담 증가와, 신규 노동력의 부족 문제뿐 아니라 가족 내 관계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세대규모의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의 한 예로는 결혼긴장을 들 수 있다. 2010년처럼 결혼적령기 연령이 남자 32세, 여자 29세로 유지된다면, 적령기 남성은 자신들의 인구규모보다 작은 여성 인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적령기 남녀끼리만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2030년에는 적령기 남성중 18%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0년을 넘어가면서 곧이어 발생할 결혼긴장

문제는 2020년경 잠시 완화되었다가 이후엔 다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이 문제는 출산·사망과 같은 인구요인의 변화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결혼연령 규범의 변화 내지 완화,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3) 가구 수의 유지와 증가

장래가구수는 2030년까지는 증가속도는 완화되지만 절대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2010년 2.7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2030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7,339,422가구이었던 총가구수는 2030년에는 20,468,97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수의 감소는 1세대 부부가구, 1인 가구와 같은 소가족화 현상과 연결된다. 2010년에 전체 가구 중 1세대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 1인 가구는 23.9%였다. 2030년이 되면 전체 가구 중 1세대 부부가구는 20.5%, 1인 가구가 24.4%가 된다. 1세대 부부가구, 1인 가구 모두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세대 부부가구에 비하여 1인 가구의 증가는 크지 않은데 이는 연령대별 1인 가구의 변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0년에 전체 1인 가구 중 22.2%를 차지했던 25-34세 가구는 2030년에는 13.9%로 줄어든다. 절대수치에서도 2010년 917,597가구에서 696,741가구로 줄어든다. 그 대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인 가구수가 2010년 1,066,365가구에서 2030년에는 2,145,817가구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2010년 1인 가구가 결혼 전 젊은 세대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2030년에는 고령층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시나리오 기법과 가족의 미래

1) 전문가조사 결과와 시뮬레이션 결과

시나리오 기법은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혼합한 주관적인 접근법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값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족과 인구 관련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기초값을 기반으로 다수의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나리오 기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

다. 무엇보다도 미래 가족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구구조 관련 변수가 선택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선행연구 혹은 인구추계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전문가가 선택한 인구구조 관련 주요 변수는 이주민, 고령화, 혼인율, 이혼율이다. 그리고 가족환경의 변화는 몇 가지 영역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인 영역은 라이프스타일, 가족의례, 가족의식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음식문화이다. 가족의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결혼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가족관계의 중심이다.

2) 인구가족구조 변화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교적 소수의 시나리오로 수렴해 볼 수 있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는 이주민의 증가, 고령화 증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족환경 중에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음식문화에서 나타난다.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식생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족의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결혼의례이다. 집안보다는 결혼당사자를 중심으로 하는 결혼의 비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가족관계의 중심이다. 부부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중심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4. 정책적 제언

가. 총인구수와 연령구조의 변화

- 1) 노령층 일자리와 여가활용 기회 창출
- 2) 돌봄 서비스, 연금제도 개선
- 3) 기존 교육기관을 노장년층 재교육기관으로 전환

나. 성별 불균형, 저출산

- 1) 여성의 혼인율 제고: 여성 고용과 보상의 평등, 고용의 유연성 확대
- 2) 남성의 사회진출 시기 촉진

- 3) 국제결혼 지원 및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 4) 기존부부 임신, 출산 지원 확대, 출산 전후 휴가·휴직 확대

다. 가족 구성의 변화

- 1) 노년층과 1인 가구 지원 정책 (주택, 복지 정책, 행정체계 등)
- 2) 미혼, 비혼 남녀를 위한 여가와 문화 프로그램 확대
- 3) 노년층과 1인 가구의 심리적 지원과 유대 강화 프로그램 확대
- 4) 노년층과 1인 가구의 라이프스타일 지원 사업 (시설 배치 변경 등)
- 5) 노년 1인 가구 지원 정책 수립시 여성 비율 적극 고려

목 차

I. 가족환경의 변화와 미래	1
1. 가족환경의 변화	3
가. 한국 사회의 변동과 가족	3
나. 저출산	5
다. 노령화	11
라. 가족 다양성 증가	13
2. 가족환경의 미래 예측	22
가. 객관적 기법: 장래인구가족추계	23
나. 주관적 기법: 시나리오 기법	28
II. 국외 사례: 일본	31
1. 저출산	33
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33
나. 저출산 현황	35
2. 고령화	38
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38
나.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41
3. 다문화가족	43
가. 이주민의 증가	43
나.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45
4. 소결	48
III. 장래인구가족추계와 가족의 미래	51
1. 추계 방법론	53
가. 추계 방법론의 특징	53

나. 현재 한국 가족의 상황	55
다.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66
2. 추계 결과	68
가. 향후 20년간 장래인구추계(2010년-2030년)	68
나. 향후 20년간 장래가구추계(2010년-2030년)	79
3. 소결	82
IV. 시나리오기법과 가족의 미래	85
1. 시나리오 기법 소개	87
가. 시나리오 기법의 정의와 특성	87
나. 시나리오 기법의 종류와 소개	88
2. 인구가족구조 시나리오 기법 수행 결과	98
가. 시나리오 기법 수행 틀	98
나. 전문가조사와 시뮬레이션 결과	101
V. 토의와 정책적 제안	109
1. 토의	111
2. 정책적 제안	115
■ 참고문헌	119
■ Abstract	127

표 목 차

<표 I-1>	한국과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의 변화	6
<표 II-1>	주요국의 고령화 현황	40
<표 II-2>	일본의 고령화 현상과 노년부양비	42
<표 II-3>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수(2008년)	44
<표 III-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58
<표 III-2>	성별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62
<표 III-3>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된 기준인구 자료 및 가정 요약	66
<표 III-4>	장래가구추계의 기법 및 주요 특징	67
<표 III-5>	2010년~2030년 성별 인구추계	69
<표 III-6>	평균 초혼연령	74
<표 III-7>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수	76
<표 III-8>	부양비(dependency ratio)	79
<표 III-9>	가구수	80
<표 III-10>	1세대 부부가구의 연령대별 구성(가구주의 연령 기준)	80
<표 III-11>	1인가구의 연령대별 구성	81
<표 IV-1>	BASICS 교차분석	93
<표 IV-2>	주요 변수 분류 및 도출 방식	96
<표 IV-3>	상호영향관계 분석표 예시	97
<표 IV-4>	인구가족구조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기법 수행 단계	99
<표 IV-5>	가족환경변화 영역 우선순위	102
<표 IV-6>	가족환경변화 요인의 세부영역	103
<표 IV-7>	가족환경변화 요인 우선순위	104
<표 IV-8>	인구학적 구조의 하위영역의 적합 정도	105
<표 IV-9>	인구구조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	106

<표 IV-10>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의례의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106
<표 IV-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의식의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107

그 림 목 차

[그림 II-1]	평균초혼연령의 경향	34
[그림 II-2]	일본의 연도별 출생수 및 합계출산율	37
[그림 II-3]	일본의 인구비율 변화와 고령화율 전망	39
[그림 II-4]	일본의 국제결혼 추이	46
[그림 III-1]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56
[그림 III-2]	1970년-2010년 한국 사회 합계출산율 추이	57
[그림 III-3]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가정에 영향을 받는 연령구간	61
[그림 III-4]	성 연령별 사망확률(2009년 기준)	63
[그림 III-5]	2010년-2030년 성, 연령별 20년 생존율	64
[그림 III-6]	생명표 산출 과정도	65
[그림 III-7]	인구피라미드(2010년)	71
[그림 III-8]	인구피라미드(2015년)	71
[그림 III-9]	인구피라미드(2020년)	72
[그림 III-10]	인구피라미드(2025년)	72
[그림 III-11]	인구피라미드(2030년)	73
[그림 III-12]	인구구성비(남녀전체)	77
[그림 III-13]	인구구성비(남자)	78
[그림 III-14]	인구구성비(여자)	78
[그림 IV-1]	T.A.I.D.A 진행 과정	89
[그림 IV-2]	경향 도출을 위한 유형화 작업	90
[그림 IV-3]	인과 고리: 2030 미래한국예측 사례	91
[그림 IV-4]	BASIC 진행 과정	93
[그림 IV-5]	트렌돌로지(trendology) 연구절차 개요도	97
[그림 IV-6]	시나리오 기법 산출물	100
[그림 IV-7]	상호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논리 관계도	100

[그림 IV-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예시)	101
[그림 IV-9]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환경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108

I

가족환경의 변화와 미래

1. 가족환경의 변화	3
2. 가족환경의 미래 예측	22

1. 가족환경의 변화

가. 한국 사회의 변동과 가족

한국 사회는 단기간에 압축적인 산업화·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서구에서 수백 년에 걸쳐 이룬 변화를 불과 수십 년에 경험하였다. 이러한 광범위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가족의 변동 또한 넓은 범위에서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구조의 다양화 및 가구의 규모·기능의 변화, 가족을 구성하는 구성원 수의 감소, 전통적인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 해체 추세의 증가 등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와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인해 더욱 가속되었다. 한국 사회의 가족은 위기를 넘어 해체까지 언급될 정도로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권태환·김태현·최진호, 1995; 김정석, 2003; 통계청, 2010).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통적 가구형태에 속하였던 확대가족형 가구 비율의 감소이다. 1975년도에는 2세대 가구의 비율이 거의 70%에 가까워 가장 보편적인 가족 형태를 이루었다. 그러나 점차 부부 가구 및 1인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2000년대에 들어 2세대 가구의 비율은 60%대로 감소하였다. 가장 최신 자료인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세대 가구 비율은 2005년 16.2%에서 지난해 17.5%로 1.3%포인트 증가했지만 2세대 가구는 55.4%에서 51.3%로 4.1%포인트 줄었고 3세대 이상 가구는 7.0%에서 6.2%로 감소했다. 이처럼 가구분화가 계속 진행됐으나 핵가족 비율은 61.6%로 2005년(65.0%)보다 3.4%포인트 줄었다. 물론 전체 51%에 달하는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어 2세대 가구가 최근까지도 한국의 주요한 가족 형태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부모 모두를 포함하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둘째, 비정형가족¹⁾의 비율의 증가도 주목할 만하다. 비정형가족에는 한부모가족, 조부모와 손자녀가족, 1인 가구, 비혈연가구 등 다양한 가족과 가구

1) 비정형 가족은 비정상(abnormal)의 개념이 아니다. 기존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이고 일반적으로 믿어져왔던 (조)부모와 자녀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아닌 형태가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 설명할 수 있다.

4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형태가 속해있는데, 이러한 비정형가족의 비율은 1975년 18.8%였으나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에는 전체 가구의 4분의 1 수준인 24.7%에 이르렀다(통계청, 2010).

이러한 비정형가족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1인 가구는 1980년에는 4.8%였으나 2000년에는 그 3배인 15.5%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 이어져 2005년에는 20.0%, 2010년에는 23.9%로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노년층에서 1인 가구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2005년에는 20대가 21.4%로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는 70세 이상이 19.2%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홀로 사는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0).

그런데 이러한 가족변화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거시적인 요인과 더불어 직접적으로 한국의 가족 변화를 초래한 구체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역학관계 및 사회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아온 가족변동의 단일한 인과요인을 찾기는 어렵다.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변화를 평면적, 단편적으로 논의하는 것 또한 난제이다. 가족변동의 정확한 개념과 범위를 규정하는 것 또한 어려우며 가족의 안팎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변인과 그 영향력의 계량화 또한 어렵다. 이는 현재의 가족변화를 초래하는 개인적이고 사회구조적인 변동요인이 가족에 미치는 상호모순적인 영향력들을 모두 고려할 때에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김두섭 외, 2005). 가족의 변동은 거시적인 사회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가족 구성원들의 의식과 가치관, 일상생활 경험의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구조로서의 가족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가족을 동시에 살펴보지 않는 경우 가족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어려울 것이다(김혜영, 2007).

현재 가족 변화와 가장 관련이 깊은 환경변화의 특징으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가족의 다양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평균적인 출산수준, 출산력의 감소는 단순한 인구학적, 인구변동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다. 낮은 출산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범위

2) 한국 가족의 관계, 기능변화, 세대관계의 변화는 흔히 복합적이어서 그 의미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박경숙, 2003).

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친다. 출산력의 저하는 사망력의 저하와 상호작용을 하여 장기적인 인구 추세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 형태와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은 높은 수준의 인구고령화(population aging)이다. 낮은 수준의 출산력은 소자녀, 핵가족 형태의 가구 비율을 높였다. 아울러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증가, 1인 가구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다.

나. 저출산

1) 저출산 추이

한국 사회의 출산율 감소는 가족계획의 영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방향의 가족계획 정책으로 인해 출산이 장려되고 있음에도 출산율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1970년대 4.50 수준이었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83년부터는 인구의 대체수준인 2.1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에는 1.3이하로 떨어져 초저출산국가가 되었다. 2005년 한국 사회는 1.08이라는 사상 최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였고, 출생아의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에는 1960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7만 명의 신생아가 탄생하였다. 가장 최근인 2009년에는 1.15, 2010년에는 1.22를 기록하였다. 현재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은 1980년대 중반에 기록했던 인구대체수준 이하를 보이고 있으며, 2009년의 경우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여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총인구는 2020년 4,990만 명을 정점으로 하여 점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 같은 극적인 변화는 한국이 1980년도 중반부터 고출산에서 저출산으로 출산력 변천을 완료하였음을 의미한다(김두섭 외, 2002). 1960년의 6.0에 달하였던 고출산 상태는 30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에 저출산 상태로 이행되었다. 이는 한국의 산업화 도시화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저하 및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경향 또한 매우 압축적이고 그 속도가 빠름을 의미해

6 ●●●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세계적으로 독특한 사례로 볼 수 있다.

〈표 I -1〉 한국과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의 변화

(단위: 명)

구분	1970년	1980년	1983년	1990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한국	4.53	2.83	2.06	1.59	1.47	1.08	1.12	1.25	1.19	1.15
OECD 평균	2.71	2.14	1.97	1.86	1.65	1.62	1.65	1.68	1.71	-

자료: OECD. 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OECD. 2010. *OECD Factbook 2010*.

2010년 하반기 이후 월별 출생아 수는 조금씩 증가하여 2010년의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1.15보다 약간 높은 1.22였다. 2011년에 들어서도 출생아 수는 증가하여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였다. 이는 계속적으로 나타났던 출생아 수의 하향변화 추세가 반전된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변화가 일시적인지, 혹은 장기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2008년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여파로 인해 2009년 한국의 전체적인 경기상황은 좋지 않았다. 소비지출이 감소하였고 출생아의 수가 감소하였으나, 2010년 경기 회복에 의해 부부들이 미루었던 출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같은 변동 양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단기적이든 구조적이든 출산율의 하한점을 확인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 및 개인적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즉 초혼 연령의 증가, 전체적인 혼인율 감소, 기혼여성의 출산력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출산율 저하요인을 밝히려면 현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결혼 지연 현상 및 혼인율 감소의 원인,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원인을 확인해야 한다.

2) 저출산 원인

가) 여성의 교육향상, 임금률 상승 및 사회진출 증가

결혼의 지연 및 감소, 출산율의 감소와 같은 사회현상의 공통적 원인은 여성의 교육향상, 임금수준 상승 및 사회진출 증가로 볼 수 있다. 20-39세 여성의 평균 교육연수는 1980년 8.8년에서 2000년 12.9년으로 급증하였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의 교육연수는 같은 기간 10.3에서 13.1로 증가했다(여성가족부, 2005). 또한 고등학생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1981년 28.4%였던 것이 2005년 80.8%로 엄청난 증가를 보였다. 절대적인 교육연수의 증가는 남녀 모두에게 결혼을 늦추는 기제로 작용한다.

여성 교육의 절대적·상대적 향상에 힘입어 여성의 실질임금 또한 증가하였다. 1980년 월평균 26만원 수준이었던 여성의 실질임금은 2004년 112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동일한 시기 남성 임금의 44% 수준에서 66%수준으로 인상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임금의 절대적·상대적 상승은 여성의 노동참여를 높이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높인다. 한국의 20~30대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90년대에는 20~24세 젊은 여성의 노동공급은 매우 높고, 결혼 후 출산적령기인 25~29세 여성의 노동공급은 매우 낮다. 30~39세의 여성은 노동시장 재진입으로 인해 25~29세 연령대의 여성에 비하면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보였다. 타 연령대에 비해 25~29세 연령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은 편으로 변화하였다.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25~29세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에 초혼 연령이 27세 정도이고 꾸준히 상승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20-24세 여성의 출산 감소는 이 연령대 여성의 결혼 지연에 의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25-29세 여성의 급격한 출산 감소는 결혼 지연 및 급증한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에 장애가 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이 왕성한 여성의 시기가 다소 변화를 보였다 하더라도, 출산 시기를 전후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매우 낮다. 그리고 추후 재진출이 이루어지는 'M'자형의 노동공급 추세는 시간에 따라 변함이 없다.

결혼과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는 기제로 작용하기에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 및 자아실현의 가치증대를 통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다. 미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는 초혼 및 출산 연령을 높여 낮은 수준의 출산율에 영향을 준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과제는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적 보충 장치의 마련이다. 노동시장 참여와 출산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면 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자녀 출산 및 양육과 노동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이 늘어 선진국형 노동공급 형태로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나) 결혼가치(gains to marriage)의 하락

Becker의 이론과 같이 남녀가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가사노동과 직장노동으로 특화하여 결혼의 가치를 증대시킨다면, 여성의 노동공급 증대는 노동 특화(specializing) 감소와 결혼가치의 하락을 가져온다(Becker, 1997; 설광언 외, 2006에서 재인용). 따라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결혼의 지연 및 혼인율 감소를 가져온다. 한국 사회에서는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가족을 형성한 이후 대부분의 출산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출산의 하락은 결혼의 지연 및 전체 혼인율의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결혼 지연, 결혼 감소 및 이혼 증가, 출산 감소는 결혼으로 인한 보상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Regalia and Rios-Rull(2001)은 배우자의 잠재소득을 결혼으로 인한 이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만약 성별 임금 차이가 줄어들면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의 잠재소득을 굳이 얻어야 할 결혼유인이 줄어든다. 즉, 여성은 남성의 소득수준과 결혼의 질 등을 감안하여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금의 성별 격차가 줄어들고, 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재에는 여성이 결혼의 유익성을 낮게 평가하기 쉽다. 이로 인해 결혼을 더욱 미루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송혜림 외(2009)는 경제위기로 인해 청년실업, 임금수준이 하락하여 결혼의 준비자금 마련이 어려워 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결혼자금의 부족 결

혼 후 가족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2008년도 전체 결혼 건수는 감소세로 들어섰으며, 출산율 또한 점차 하락하고 있다. 경제위기는 결혼과 출산 모두에 영향을 미치고, 가족의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일상적·세대적 재생산이라는 개별 가족에서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가족기능의 혼란 및 왜곡, 자원배분에 대한 갈등, 세대문제, 남녀 문제는 점차 심화될 것이다.

다) 가족정책 부재

여성의 교육 증가 및 임금수준 향상은 출산 및 자녀부양으로 인한 여성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최근 나타난 여성교육수준 향상 및 고용수준, 실질임금수준 향상은 여성의 출산의욕을 저하시켰다. 우리보다 앞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 및 출산력 저하를 경험한 선진국은 양성평등을 기본철학으로 하여 다양한 출산장려 가족정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여성의 결혼, 출산, 양육의 기회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시켜줄 정책적 장치가 미비한 편이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출산친화적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한국 사회에서는 두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Becker, 1997; 설광언 외, 2006). 첫째, 유자녀 가구의 순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선진국 역시 유자녀 가구의 순소득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지만 자녀가 하나인 경우의 순소득은 그다지 감소하지 않다가 둘 이상의 가구에서 크게 줄어든다. 반면 한국 사회의 경우는 자녀가 하나인 경우부터 순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하기 시작함으로써 자녀가 생활수준의 저하 또는 상대적 빈곤까지도 초래하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한다.

둘째, 한국 사회 맞벌이 부부는 순소득 면에서 홑벌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유리하지 않다. 여러 선진국의 경우 같은 가구 소득을 벌어들이다라도 맞벌이의 경우가 홑벌이에 비해 유리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일하는 젊은 여성의 결혼가치를 감소시키는 원인

이 될 수도 있다.

라) 교육비 증가

여성이 결혼 이후 출산하는 자녀의 수를 줄이는 것은 자녀 양육의 질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다. 자녀의 수는 그 가격과 더불어 질과 양을 고려해야 할 영역으로 인식된다(Becker, 1997; 설광언 외, 2006). 자녀의 질과 양에 대한 트레이드오프(trade-off)를 감안해서 보았을 때 저출산으로 대변되는 자녀 양의 감소는 질적 증가를 위한 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유사하게 교육비의 증가는 자녀의 양육비 증가를 뜻한다. 따라서 양육의 질적인 상승을 위해 자녀 수 감소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과열된 사교육비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의 교육비가 저출산의 원인이자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

1970년대에는 출산율의 감소와 더불어 가계소득에서 자녀에 주로 투자되는 식료품비와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사교육비 부담을 1977년을 시점(GDP 대비 0.36%)으로 살펴보기 시작하면 1980년 0.96%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1980년 과외금지조치 이후로 1980년대 GDP 대비 0.5%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자녀수의 감소와 소득증가로 인해 생필품인 식료품비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반면 자녀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비의 비중은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후 공교육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중등 교육에서의 사교육비의 증가와 더불어 대학교육의 비용 역시 교육비 비중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1990년대 이후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3년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2.3%에 도달했다. 대학진학률이 급증하고 대학의 등록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으로써 고등교육 비용이 교육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교육비 증가와 교육기간 연장으로 인한 교육비 지출기간 증가한 것도 자녀 1명 당 교육비를 크게 증가시켰다. 높은 수준의 대학진학비율 역시 가계의 교육비 지출을 늘려 자녀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다. 노령화

한국 사회는 이미 2000년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며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2026년에 20.8%로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통계청, 2006). 또한 통계청의 2008년 완전생명표에 따르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의 기대수명은 80.1년으로, 10여 년 만에 1999년의 기대수명 75.6세에 비해 4.5세 늘어난 수치이다. 이와 같은 경향은 기대수명에 영향이 큰 60~80대 고령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노년기가 생애주기에서 차지하는 기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노령화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빠른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인구노령화는 인구구조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말한다. 인구의 불균형은 복합적으로 다양한 사회 영역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저출산국가에서 노인의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노인은 생애주기적 특성상 의료보호, 생활보호,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 연령층에 비해 높다. 점차 증가하는 노인의 숫자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부양비 급증의 문제가 있다. 노인인구의 부양비는 2016년 8.2에 도달하여 이때부터 유소년부양비(8.1)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노년부양비는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 72.0에 이를 전망이다. 이에 비해 유년부양비는 2005년 39.4에서 계속 감소하여 2050년에는 노년부양비의 1/4 이하인 16.8%로 낮아질 것이다. 이는 유소년부양비가 저출산 현상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데 비해 노년부양비는 노인인구의 증가세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인인구에 대한 총부양비는 계속 증가하여, 2050년에 88.8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최준욱·전병목, 2003). 실제로 15-64세의 경제활동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중을 나타내는 노인부양비는 예측 차원이 아닌 실제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만약 출산율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낮아지고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될 경우 노인인구의 생산가능인구에 대한 의존 수준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아울러 노인인구의 증가속도와 동시에 사회보장지출 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노인인구의 사망률 저하는 기대여명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다. 반면 노인들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맞물려 지속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져 생산가능인구 개개인의 높은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비단 개인의 수준뿐만이 아니라 국가수준의 노인부양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대내적인 사회경제의 활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대외적으로 국가경쟁력을 고양시키는 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연령층 1인당 사회보장 부담비용의 증가는 세대 간 갈등을 일으켜 사회통합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노인의 가족관계 변화 중 독거노인 및 부부단독형 노인 가구가 증가하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이가옥 외, 1994; 권태환·박영진, 1995; 박재간·모선희·원영희, 1996). 노인 단독거주율이 급격히 증가하며 자녀와의 동거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에서 노인가구의 ‘탈가족화’ 및 ‘핵가족화’현상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태환 외(1995)에 따르면 1990년 65세 이상 노인 중 노년 1인 가구 및 노부부끼리 사는 비율이 도시와 농촌에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도시 거주자 중 남성노인의 24.9%, 여성노인의 15.1%가 노인단독 및 노부부 가구였다. 농촌 거주자 중 남자노인의 41.7%, 여성노인의 31.4%가 노인단독 및 노부부 가구였다. 2000년의 센서스에 기초해 보면 1인 가구 혹은 노인부부가구 비율이 도시에서는 42.5%, 농촌에서는 62.6%로 집계되었다(김정석, 2003).

이와 같은 변화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학문적·정책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가족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노령화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노인 가구에 대한 연구는 거주형태의 차이에 입각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와의 동거경향은 노인의 혼인상태, 학력, 경제수준, 건강상태, 거주지, 자녀와 노인의 노후 부양관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이가옥 외, 1994; 유성호, 1996; 모선희, 1999). 자녀와의 동거는 물질적 안녕 뿐 아니라, 노후의 생활만족, 심리적 안녕, 자녀와의 애정적 결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결국 노인가구의 탈가족화나 핵가족화 현상은 가족관계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라. 가족 다양성 증가

1) 가족 다양성 증가 추이와 요인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은 전통적·보수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가족 불안정 또는 가족위기를 나타내는 한 징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김승권, 2005). 즉, 다양한 가족의 출현은 가족해체의 증가, 공동체 붕괴, 도덕적 무질서화의 전조 등의 문제적 시각으로만 접근하여 해결노력이 필요한 사회적문제로 보았다. 그렇지만 근대적·진보적 입장에서는 전통적 개념의 ‘가족 틀’을 타파하고 주관적 측면에서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경우 ‘가족’으로 보는 다양한 가족(families)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가족의 다양성은 가족을 둘러싼 환경, 사회, 문화적 맥락 변화의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또한 동시에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가족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변성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가족이 환경에 적극적 또는 수동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정의 및 규정은 학계·학자에 따라 다양하여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유형 변화는 가족의 해체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변적 과도기적 산물이거나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경향을 가졌다. 그러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가족유형들(동거가족, 독신가족, 무자녀가족, 공동체가족 등)은 주로 개인들의 능동적인 선택에 의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진다. 더욱이 생활양식의 변화로 인해 맞벌이 부부, 주말부부 및 기러기 가족 등은 급속한 사회의 변동 및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자율적·선택적인 변화 경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는 최근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가족의 유형을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주로 핵가족, 확대가족, 직계가족)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사회적 조건과는 다른 환경에서 가족이 생성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다양한 가족 출현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김승권, 2005 재인용). 첫 번째로 사회적 요인을 들 수 있다. 한국 사회보다

먼저 산업화 과정을 먼저 경험한 서구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는 도시화, 핵가족화를 촉진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는 과거 전통적 가족관이었던 집단·가족주의적 가치관을 퇴색시켜 가족 가치관 내에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크게 자리를 잡게 한다.

일례로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젊은 연령층 인구의 이동은 농촌지역의 극단적 남초현상을 초래함으로써 결혼이주자를 통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을 촉진하였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1996년 15,946건에서 1999년에는 10,57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25,658건에 이르렀다. 외국인과의 결혼은 한국 남성과 외국여성 사이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배우자를 국내에서 찾기 어려운 일부 한국 남성들이 결혼업체를 통해 중국동포 및 동남아시아권 여성들과 결혼하는 현상에 기인한다. 따라서 과거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출신 혹은 한국국적의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외국출신의 가족원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타 문화에서 편입된 가족원과 새로운 상호교류를 경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경험하는 문화적 갈등과 부적응 문제 등은 가족갈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이는 일부 농촌 남성들과 이주 여성들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문제로 간주되어야 한다. 산업화·도시화가 가족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를 넘어 새로운 사회문제와 문화현상까지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둘째로 가치관적 요인이 있다. 가치관은 사회의 공동의식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는 사회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각 개인의 가치관은 속한 집단의 신념, 가치, 규범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한 사회의 가족가치관은 가족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바람직성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이다. 따라서 이것은 가족에 대한 관점이자 행동의 경향을 촉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각 개인의 가치관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인간의 행동 및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과거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가족의 가치관과 대비되는 사회 변화에 의한 가치관은 가족에 대한 가치관에도 영향을 준다.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가족과 관련한 가치관으로는 혼인·자녀·부부관계·가족부양·여성의 자아 등이 있다. 과거 우리 사회는 보편혼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결혼이라는 사회제도에 대하여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감소하고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근거라고 하겠다.

또한 가족해체의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이혼의 급증에는 이혼 및 재혼과 관련한 사회의 인식이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혼을 보다 수용하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또한 구세대에 비해 젊은 층은 재혼에 있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혼인가치관의 변화는 가족형성, 가족의 지속여부, 가족구성원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을 초래하여 다양한 가족의 출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자녀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모의 가치관 변동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가족변화의 원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화 이전의 전근대적 사회에서 자녀는 가계계승, 노동력의 창출, 노후부양기대 등에 의해 매우 중요시되었다. 그러나 근대 산업화 사회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가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기 시작하였다. 또한 부부 중심의 가족생활이 강조되어 소자녀관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자녀가치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전통적인 자녀가치관에서 자녀선호도에 따라 자녀를 선택하는 부부중심의 가치관으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는 향후 무자녀·부부중심으로 구성된 핵가족이 주요 가족형태로 굳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자녀가 없어도 상관없다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부부간의 평등한 자녀양육 및 가사분담 등에 관한 성역할관의 변화와 부부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가치관의 변화는 여성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은 여성일수록 본인의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러한 여성일수록 자기개발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으므로 취업을 통해 이에 대한 보

상과 함께 자기의 이상 및 만족을 이루려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결혼 및 자녀부양으로 인한 기회비용을 부담하려는 의향이 약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한 여성의 경우에도 자기 일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경제적 여건·필요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즉 여성도 가계소득을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결혼생활이 여성의 사회적 역할 및 자아실현과 병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가족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가치관의 영향이 크다.

교육을 받은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것은 가족형태 및 가족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는 가사분담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며 출산에 의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등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여성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부인의 취업은 가족의 경제적 지원기능 뿐만 아니라 자녀출산, 양육분담 및 노인부양, 부부간의 권력배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욱이 최근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부모부양에 대한 태도 변화와 결합하여 가족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의 교육과 경제활동 참여가 노부모와 동거하며 직접적으로 부양의 기능을 하는 확대가족의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핵가족의 고도화와 노인부부가족 및 노인독거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세 번째로 다양한 가족의 출현의 배경요인으로서 인구학적 요인에는 초혼연령 상승, 혼인 감소, 소자녀 선호, 중년세대의 조기사망, 평균수명 연장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여성의 초혼연령 상승은 높은 수준의 교육열망 및 젊은 여성의 취업 기회 확대, 그리고 자아실현 욕구 등에 기인한다. 초혼·초산연령이 상승하는 동시에 독신자의 증가로 인해 미혼인구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는 특히 남정보다 여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젊은 여성이 늘어나고 있다.

혼인의 감소 또한 초혼연령 상승 및 미혼율의 증대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결국 가족형성을 의미하는 혼인을 지연시키거나 기피하는 개인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혼인건수는 감소추세로 조혼인율은 1980년 10.6을 최고로 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나타내면서 2000년에는 7.0까지 낮아졌고, 2003년에는 6.3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에서 중장년층의 사망률은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으로, 미혼자녀를 둔 가족의 핵심인 중장년층 부모의 사망은 한부모가족을 발생시키는 등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동시에 평균수명의 연장은 노인가족원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핵가족화 추세와 연결해 보면 점차 노년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결혼연령 차이를 약 3세로 보았을 때 여성의 평균수명이 남성보다 일반적으로 약 6~7세 높기 때문에, 남편의 사망 후 여성노인 혼자서 사는 기간이 약 9~10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이 중심이 되는 한부모가족 및 남편과의 사별 후 홀로 살아가는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 같은 새로운 유형의 가족에서 초래되는 다양한 사회현상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가족적 요인이 있다. 여기에는 앞에서 언급한 여성교육수준 향상, 여성경제활동참가 증대, 이혼가족 증대, 재혼가족 증대, 국제결혼 증가 등이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향상 및 경제활동참가는 여성의 이미 언급하였듯 여성의 양성평등적 의식 증대를 통해 가족형태의 변화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여성의 사무관리직, 전문직에의 취업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측면의 성역할 모형이 됨으로써 자녀의 삶에 있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혼율의 증가도 중요한 요인이다. 한국 사회의 혼인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이혼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혼건수만 보더라도 1975년 16,453건에서 2003년에는 167,096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인구 천 명당 이혼건수를 집계하는 조이혼율을 살펴보면 1970년 0.4이던 것이 1985년 1.0을 상회하여 2000년에 2.5, 그리고 2003년에는 3.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의 감소와 함께 작용하고 있다. 이혼의 증가는 한국 사회의 혼인행태가 전통적인 가족관념, 즉 안정적인 가족을 견지하기 보다는 과거보다 불안정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경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 사회에서는 혼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재혼이 빈번해지며 최근 재혼가정은 1년에 약 6만 4천 가구가 발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부부가족 중 부부 모

두가 초혼인 경우가 1990년에는 89.3%, 2000년에는 82.0%, 2003년에는 77.7%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재혼인 경우는 1990년의 10.7%에서 2000년의 18.0%, 2003년의 22.3%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한국가족이 다양화되는 과정을 여러 요인을 통하여 설명하였다. 물론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된 요인들은 미래의 한국 사회에서 발생할 다양한 가족의 출현배경으로 볼 수 있다. 다양한 가족관 및 가족형태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사회의 변화·발전에 따라 한국 사회의 전통적·공동체적 가족주의 가치관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으로 변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가족유형의 다양화 및 그 속도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 상황의 변동과 같은 거시적 변화 역시 개인의 가치관 및 행동에 영향을 미쳐 가족형성과 가족구조에 큰 변동을 주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경제적 어려움과 출산에 대한 반응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거시 사회변동에 더 큰 민감성을 가지고 사회의 규범이 아닌 개인의 선택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의 경우, 독립심의 증가로 인해 성인이 된 후 부모의 부양대상이 되고자 하는 태도가 상당히 감소하였다.³⁾ 이와 같이 서구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한국 사회에서는 새로운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부모의 자녀양육책임은 서구 사회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주로 자녀의 양육책임이 끝나는 때가 대학 졸업 시까지 또는 취업 시까지, 심지어는 자녀결혼 후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은 맞벌이가족, 주말부부가족, 기러기가족, 그리고 무자녀가족 등의 변화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⁴⁾

3) 젊은 세대의 경우, 개인의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취업난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할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모의 곁에 머물며 그들에게 의존하는 소위 ‘캥거루 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주의적 가치관과 상당히 대립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라는 요인에 있어 변동이 발생한다면 기존의 학자들이 예측한 가족변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4) 물론 이러한 변화가 진정한 가족다양성의 증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한국가족은 가족규모와 범주가 축소되고 가족구성원리가 변화하고 있으나 일부계층에서는 여전히 개인보다는 집단으로서 가족을 강

2) 다양한 가족의 형태

가) 다문화가족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는 다양한 가족 유형으로 다문화가족이 있다.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한 외국인과 한국인 배우자 그리고 자녀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은 2000년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의 수는 2001년 10,006명에서 2006년 30,208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불과 5년 이내에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한국은 과거부터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타 인종, 타 국적의 사람과 혼인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다.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결혼은 전체 결혼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외국인과의 결혼의 대부분은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 비율은 매우 낮았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일반적인 국제결혼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2000년대를 기점으로 크게 증가한 국제결혼은 소위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경제의 재편이 초래하는 계층의 양극화와 농촌을 비롯한 지역사회의 주변부화와 깊은 관련성이 있다. 경제체제의 양극화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중심부와 주변부의 격차는 심화되어 왔다. 특히 결혼시장에서 지위가 높지 않은 주변화된 한국남성, 즉 도시 하류층과 농촌의 남성들은 한국보다 낮은 경제 수준의 국가에서 신부를 맞이하기 시작하였다. 결혼이 용이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재생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 나타난 현상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증대는 농촌남성 혹은 하류층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계층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즉 국

조하기 때문이다. 부부보다는 자녀관계의 비중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가족변동의 성격규명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백진아, 2007). 뿐만 아니라 형태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가구구성은 오히려 지극히 단순화되고 가족범주 역시 크게 축소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가족다양성이 감소된다는 주장 또한 없지 않다(함인희, 2008).

제결혼은 저소득층 혹은 중간계층이지만 한국여성들과의 초혼이 어려운 초·재혼 남성들이 내국인과의 결혼보다 적은 비용으로 인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미 국제 결혼한 이들 가족의 빈곤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2005년도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제결혼 가정의 52.9%가 최저 생계비이하의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 2005). 또한 전남과 광주 인근지역의 국제결혼가족의 경우 역시 월평균 가구소득이 100만 원 이하가 48.9%, 150만 원 이하의 가구를 모두 합하면 전체 다문화 가족의 80%가 차상위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김오남, 2006).

또한 2004년의 경우 농어촌 혼인의 27.7%, 2005년에는 35.9%, 2006년에는 41%가 국제결혼일 만큼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이 농촌총각과 외국인 여성간에 일어나고 있다(양순미, 2006). 더욱이 이들의 결혼은 사설 중개업자나 종교단체, 친구나 친척의 소개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중개업자에 의한 결혼의 경우 맞선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이 극히 짧아 서로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불충분한 상황에서 결혼이 성립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개 결혼 자체가 금전적 거래의 형식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외국에서 온 신부들은 이질적인 문화, 민족의 차이에 더해, 이주 여성과 결혼한 남성들의 경제적 불안정성은 결혼생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즉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수준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불안정성으로 결혼 시기를 늦췄거나 여전히 주변부적 위치에 속한 남성들이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이 갖는 문화적 이질성과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모순적 구조로 인해 이들의 결혼 및 가족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국제결혼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이들의 이혼율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 건수는 2007년 1,866건에서 2004년 3,400건, 2006년 6,280건, 2007년 8,828건으로 급증하였다(김두섭·이명진, 2007).

여성가족부(2009)는 2009~2020년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인구 규모를 제시하고 있다. 2009년 266,774명이었던 것이 2020년에는 653,554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결혼이민자 수가 2009년 167,090명에서 2020년 350,862명으로 늘어나고, 결혼이민자의 자녀수는 각각 99,684명에서 302,692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2009년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의 진입 단계에 있었다면, 2020년에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수가 증가할 뿐 아니라 국내 이주 기간이 장기화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다문화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혼이민자 유입의 증가와 동시에 결혼이민자 집단의 높은 출산력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나) 1인 가구

끝으로 살펴볼 것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1인 가구이다. 전국 수준에서 볼 때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핵가족은 2000년 전체 가구의 48.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전체 가구의 41.1%까지 감소하였으며, 2030년경에는 전체 가구의 약 1/3 정도만이 전통적인 핵가족의 형태를 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1인 가구는 1980년 총 가구 수(일반가구)의 4.8%에 불과했다. 90년 9.0%, 2000년 15.5%, 2005년 20.0%, 2010년 23.9%(414만 2천 가구)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05년의 경우에는 2000년과 비교하여 42.5%나 급증하였다. 그 가운데 여성 1인 가구는 총 1,753,000 가구로 약 55.3%를 차지하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0.8%(978,000가구)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20대 21.4%(679,000가구), 30대 19.9%(629,000가구), 40대 15.0%(474,000가구)의 순으로 나타난 바 있다(김혜영 외, 2007). 1인 가구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가구형태는 단연 노년 1인 가구이다. 이는 5가구 중 1가구 이상은 1인 가구로 구성되었음을 의미하여 1인 가구는 지속적으로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다) 노인 가구

노인부부가족이나 노인 1인 가구는 일시적이거나 과도기적 현상이 아닌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2008). 노인가족의 발생은 한국의 빠른 산업화 및 도시화, 핵가족화 및 개인주의적 가치관에 의해 촉진

되었다. 특히 80세 이상 고령노인의 절대적 증가는 노인독신가족의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제적, 보건의료적,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고령화는 타 국가에 비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노인가구의 증가는 곧 부모자녀관계의 변화와 연동될 수 있다. 적어도 과거와 같은 부모부양방식, 즉 부모나 자녀세대 모두에게 있어 동거를 통한 일상적 봉양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더욱이 생산중심적인 경제체제에서 노동의 중심부로부터 밀려날 수밖에 없는 노인인구의 증가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노인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독거노인의 80%내외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노년 1인 가구의 증가는 곧 여성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성차별적 노동시장상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성노인 인구들의 어려움이 증대될 것이다. 사회보장시스템의 많은 부분이 노동시장의 참여도와 기여도에 준해 설계되었기 때문에, 여성노인들은 상대적으로 노후를 보장받기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기반약화는 부모세대의 부양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녀 돌봄의 기능 또한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들의 자녀가 그들 부모세대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일례로 08년 11월 25일 발표된 사회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노후생계는 ‘가족과 정부·사회가 같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가 43.6%로 ‘가족’(40.7%)을 앞지르고 있다(통계청, 2008). 이들은 누가 어떻게 보살피며, 더욱 길어진 이들 노년기 삶의 질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2. 가족환경의 미래 예측

이러한 인구구조와 가족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가족 정책과 차별되는 새로운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 이 연구에서는

인구 및 가족구조 변화의 방향에 대한 심층적인 예측을 시도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향후 인구·가족구조 변화를 전망하고 특히 가족 핵심 구성원인 여성의 삶을 동시에 조망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국내외 미래연구 검토 및 가족변동에의 시사점 도출/적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족 변화 예측을 위한 미래연구 방법론으로 객관적 기법과 주관적 기법을 동시에 검토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변동 추동의 새로운 요인 발견 및 활용으로 정책적 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가. 객관적 기법: 장래인구가족추계

각종 공·사 연구기관에서 인구 구조와 가족환경의 변화와 관련한 연구는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인용하고,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답습하는 방법론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독창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인구구조와 가족환경의 변화를 예측한 경우에도 그 방법론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타 연구자들의 연구결과 재현을 불가능케 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전문적인 기법을 사용하였음에도 서술이 미흡하거나 단순추계기법을 이용하거나 몇몇 요인에 대하여 미약한 근거를 가지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의 일부 연구를 대상으로 인구구조와 가족환경의 변화 예측과 관련된 일부 선행 연구를 검토·평가하고자 한다.

최근의 인구 변화는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까지 변화시킬만한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정확한 장래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관한 추계의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정책수립을 위한 정확한 인구·가족 추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정확한 인구 추세 전망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는 인구추계 결과의 정확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정책 입안의 과정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구·가족정책의 방향을 이탈시킬 수 있다.

이같이 인구·가족 추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는 인구·가족 추계 방법론에 대한 정리는 부족했다. 또한 방법론에 대한 문헌 역시 부족했으며, 방법론에 대하여 다루더라도 인구변동을 초래하는 다양한 가

정들을 가장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호트요인법(Cohort-Component Method)에 적용하는 시나리오 기법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최신의 인구 추계 기법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김태현, 2006; 우해봉, 2010).

미래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가 그러하듯 인구 예측 역시 피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문제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 인구추계에 있어 발생하는 불확실성의 문제는 상당부분 기준연도 정보의 부정확성과 같은 인구 정보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이와 동시에 인구 추계의 불확실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구변동을 일으키는 요인들의 미래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라 하겠다.

인구변동 요인의 연구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인구이동의 자율성과 그에 대한 추계의 어려움이 인구 추계에 있어 불확실성으로 언급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 인구이동은 순환적인 패턴을 보일뿐 아니라 일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난다. 따라서 전국적 인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충분히 보정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 국민이 정부의 전산망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인구이동의 자율성이 인구추계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단순 인구이동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그 불확실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가입 연령대 가정의 출산력이 거시적 사회구조에 상당한 수준에서 종속되어 있기에 단층 추계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같이 인구 변동을 초래하는 요인들 자체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인구추계 결과 역시 불확실성을 갖는 것은 자명하다.

1) 추계 시나리오 기법

인구추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은 서로 상이한 두 가지 연구흐름을 유지하였다. 먼저 추계 시나리오 기법은 인구추계에 수반된 불확실성을 처리하는데 있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예측치와 동시에 다양한 복수의 예측치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국내의 인구 추계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고·중·저 발생 가정에 기초한 복수의

시나리오 제공은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방식이라 하겠다.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공할 수 있어 인구 추계상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인구 변동 요인과 관련한 상이한 가정들을 코호트요인법에 적용함으로써 국가의 공식적 인구추계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시나리오 기법이 다양한 시나리오의 제공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시나리오 기법은 확률적 해석이 불가능하다. 예측의 대상이 되는 변수의 범위와 변동발생의 확률을 제공함으로써 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우해봉, 2010). 그러나 시나리오 기법은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에 더하여 다양한 스토리를 제공하기에 예측 확률의 제공을 하지 못한다(우해봉, 2010). 시나리오들간의 확률적 차이보다는 연구담당자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그 실현가능성이 결정되기에 불확실성의 양화가 불가능하다.

둘째, 시나리오 기법은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대와 전 추계기간에 동일한 동태율을 가정하고 있어 인구변동 요인들의 값이 서로 완벽히 관련이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우해봉, 2010). 이처럼 사회의 거시적 변동에 따른 미시적 변화의 가능성을 간과함으로써 추계기간 동안 개별 인구 변동 요인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에 급격한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또한 인구변동 요인들이 서로 완벽히 관련이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요인들간의 다양한 조합을 예측 과정에서 놓칠 수 있다.

세 번째로 시나리오 기법은 인구 변동 요인들에 대하여 유연하지 못한 가정을 함으로써 확률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우해봉, 2010).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실현 개연성이 가장 높은 중위 가정에 더하여 고위와 저위 가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추계에 사용된 가정을 타 추계에도 그대로 활용함으로써 인과적 관련이 없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한다.

2) 확률적 기법

인구추계 기법 중 불확실성을 처리하는 또 다른 방식은 확률적 접근이다. 확률적 접근은 시나리오 기법과 달리 불확실성의 통계적 측정에 집중하여,

인구의 변동에 있어 범위와 확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우해봉, 2010). 최근 확률적 인구 추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은 확률적 인구추계가 인구 변동을 초래하는 인구 변동 요인들의 동태율을 확률 변수로 취급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우해봉, 2008).

가) 전문가 판단법

전문가 판단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건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에 기초하여 예측구간의 확률을 계산한다. 비록 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이 실제 인구 변동 요인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활용하기에 불확실성 평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문가들의 평가가 과거 추세의 지속에 기반하고 있기에 상당한 신뢰도를 갖는다.

전문가 판단법은 일정 기간에 걸친 인구 변동에 대해 미리 설정된 예측구간을 전문가 패널에게 자문받은 후 추계 기간 동안 변동의 궤적을 도출한다. 전문가 판단법의 예측이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문의 객관성을 높이고 최종 가정의 정확한 설정을 위해 제 3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재검토 과정을 거친다(우해봉, 2010).

전문가 판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화 및 미예측 사항들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식에 의존하기에 상대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대한 소요 작아 과거 추세 자료가 부족한 경우 확률적 예측에 있어 유용한 대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의 구성에 따라 그 결과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이 예측치를 하향안정하여 예상하는 보수성과 해당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상이함이 없는 비차별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

둘째, 전문가들의 주관성에서 오는 문제로 추정치들의 예측구간의 신뢰 수준 차이가 있다. 즉, 동일한 가정·데이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전문가가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 상이한 예측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실제 추세 가운데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우해봉, 2010). 사회 현상의 초기, 가시성이 낮은 경우 전문가는 현상의 영향

을 간과할 가능성이 크며 사회현상을 대체할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엔 비로소 인식·수정할 수 있다.

나) 과거 예측 오차 분석법

과거의 예측 오차를 향후 인구 추계에 활용하는 방법은 과거 인구추계에서 발생한 오차들을 미래 예측에 사용하는 것이다. 과거 예측 오차 분석법은 이미 1980년대 초에 소개되었으며, 최근 세계 인구와 국가의 인구추계에 활용되었다(우해봉, 2010)

과거 예측 오차 분석법은 과거의 자료를 활용하기에 확정된 예측치를 그대로 사용한다. 이 방법론의 특징은 미래의 예측 오차의 분포가 과거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여 현 인구추계에 대입하여 예측구간을 구성한다. 그러나 과거의 예측 오차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한적으로 존재하기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과거의 예측 오차를 인구 추계에 사용하는 방법은 과거 오차와 동일한 일련의 과정이 발생함을 가정하기에 미래의 변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과거 예측 오차 정보가 적고 단기간이라는 문제가 있다. 둘째로, 과거의 예측 오차가 현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인구변동을 초래하는 요인은 일정한 패턴을 갖지 않은 채 임의적으로 변동한다. 즉, 과거의 정형화된 오차 요인을 현재에도 적용하는 것은 감소·증가한 과거의 잣대로 현재와 미래를 평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다) 코호트요인법

본 연구의 인구추계에서 사용되는 코호트요인법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기준인구를 토대로 각 출생연도별 집단(동일 코호트)에 대하여 출생, 사망, 국제이동 등 인구변동분을 추정·연장하여 연도별 인구를 만들어 나가는 기법이다. 출생, 사망, 국제이동과 같은 인구변동분을 추정하기 위해 최근까지의 인구행태가 미래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예상할 수 있다시피 이 같은 가정은 사회문화 및 경제적 변동, 정책의 변

화 등으로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추정해 둔 추계 인구수는 실제 인구수와 다를 수 있게 된다. 그런 차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작성되는 다양한 통계들 중 추계인구가 실제인구에 가장 근접한 인구라 평가할 수 있다. 1인당 GDP, 저출산 정책 등 대부분 통계지표에는 추계인구를 적용하고 있으며 OECD, UN 등 국제기구에 제공되어 국가간 비교되는 인구 역시 ‘추계인구’가 활용되고 있다. 코호트 요인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이후 코호트요인법 활용을 통한 인구·가족 추계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나. 주관적 기법: 시나리오 기법

최근에 다양한 형태의 미래연구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와 가족 구조의 변화, 정보화, 다문화사회 등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빠른 속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변화는 범위와 속도 증가 같은 양적인 측면에서만 머물지 않는다. 사회 변화의 질적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사회변화의 결과의 강도가 그 규모나 영향력 측면에서 훨씬 커지고 있다.

이에 다양하고 중요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적인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적절한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현황에 대한 파악은 사전 파악과 사후 파악이 있을 수 있는데 최근에 들어 변화의 양상과 결과를 보다 선도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미래연구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미래연구방법론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것이 시나리오 기법이다. 시나리오 기법은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50년대 영국의 Rand Corporation의 Herman Kahn이 국방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나리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1960년대에 미국의 국방성이 국제적 군사 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Contingency War Plan’의 수립에 시나리오 기법을 응용하였다.

시나리오 기법의 가장 특징은 미래예측에 있어서 단선적 예측을 배제하고, 복수의 미래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언급되었다. 예를 들면, 마이클 포터는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에 나타날 수 있

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춘 상태에서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Porter, 1985). 또한 쉬바르츠(Schwartz, 1991)는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우리는 무언가 미래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래에 변화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 수 있다고 보았다(Schwartz, 1991). 한편, 쇠마커(Schoemaker, 1995)는 시나리오 기법을 발생가능한 미래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숙련된 전문적 방법론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기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시나리오 기법은 ‘복수’의 미래를 제시한다. 시나리오 기법에서 가정하는 미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단선적 예측이나 규범적으로 바라는 비전과는 다르다. 둘째, 시나리오 기법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제시함으로써, 하나의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risk)을 감소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시나리오 기법은 복수의 조건을 포함시켜 그 조건에 따른 대응전략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 셋째,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의 모습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연구와 전략 연구를 연계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 수행한다. 넷째, 시나리오 기법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생산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대화, 논쟁, 토론을 중요시 한다. 다섯째,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는 연구자의 질적인 판단이 중요하다. 연구자들은 시스템의 요소들을 서로 결합시켜 주는 플롯이나 논리적인 구조를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된 시스템의 각 영역에서 미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두 세 개의 대안적 시나리오가 형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대표적인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구체적인 시나리오 산출에 적용하고자 한다. 국외 시나리오 기법으로는 T.A.I.D.A., MICMAC, BASICS 등을 검토하고자 하며, 국내 시나리오 기법으로는 KITAIP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나리오는 전문가 조사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하고자 한다.

II

국외 사례: 일본

1. 저출산	33
2. 고령화	38
3. 다문화가족	43
4. 소결	48

1.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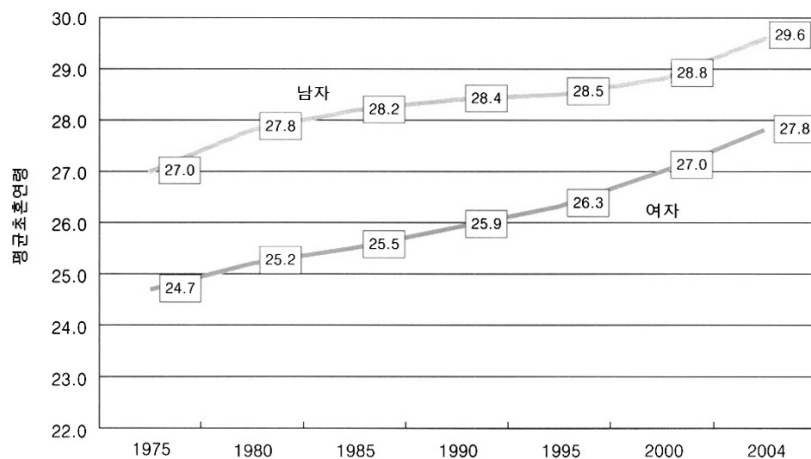
가. 가족가치관의 변화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관은 임신과 출산관련 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의 방식과 가족구성원의 개별적인 행위 등에 영향을 주게 된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는 가족가치관에 대한 변화의 결정적인 원인이며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개인주의적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가속화시켰다. 전통적 가족이 부자관계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이라고 한다면 현대가족은 부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그에 따르는 생활양식과 가족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승권, 2005). 가족가치관의 변화로 인해 결과적으로 가족의 모습도 핵가족화 경향을 띠게 되면서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가족이 증가한다. 자녀의 수가 적어지고 자녀가 없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가구원수도 줄어 들었다. 또한 가족관계의 중심이 확대가족 간의 관계에서 부부와 소자녀화 경향으로 인해 촌과 형제자매가 없는 친족관계가 나타나면서 친족관계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이복순 외, 2010).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핵가족이 늘어나고 전통적인 확대가족이 사라짐에 따라 가족이 공동체라는 전통적 가족관이 퇴색하였다. 또한 산업사회 이전에는 결혼이 경제적·정치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가문 간의 정치경제적 결합을 의미했다(Coonts, 2005). 그러나 산업화 이후에는 전통적 결혼관의 쇠퇴와 개인주의적 경향으로 인해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여 결혼을 필수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상대적 가치가 증가하였다. 결혼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이혼할 수 있고, 행복을 위해 재혼도 할 수 있다는 경향이 높아져 결혼, 이혼, 재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였다(김승권, 2001; 김승권, 2005).

일본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의 장기정체현상으로 인해서 실업율이 높아져 젊은이들이 사회경제적으로 독립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게 되었다. 저출산의 또 다른 이유로는 여성의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Nagase, 2006; 김명중, 2006). 여성의 고학력화와 취업의 증대로 인한 경제력 향상은 여성들에게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기존의 가치관

을 선택의 항목으로 바뀌게 되는 요인이 되면서 미혼화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80년대 이후 25-34세의 남녀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노동후생성의 조사에 따르면, 남성은 취업의 유무나 취업 형태가 결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취업을 하거나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결혼을 기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송태민, 2010). 미혼화의 증가와 함께 초혼연령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인의 평균초혼연령은 지속적으로 높아져서 1975년 남자 27세, 여자 24.7세에서 2004년에는 남자 29.6세, 여자 27.8세로 나타났다(김명중, 2006).



자료: 김명중, 2006. p.72 재인용

[그림 II-1] 평균초혼연령의 경향

만혼화의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만혼화에 의해 출산시의 모친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첫째아이와 둘째아이의 출산이 1975년에는 각각 25.7세와 28세로 나타났으며, 2004년에는 각각 28.9세와 30.9세로 상승하였다. 또한 미혼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30-34세의 미혼율이 1975년 14.3%로 나타났고 2000년에는 42.9%로 상승하였다(김명중, 2006). 또한, 2005년 내각부의 조사에 의하면 자녀의 이상적인 수와 현실적 자녀수에 대한 질문에 이상적인 자녀수를 3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실적인 자녀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1%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자녀수와 현실자녀수에 대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다(內閣部, 2005b). 이러한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과 관련된 가족가치관은 출산률 변화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저출산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Nagase, 2006).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에 의해 저출산의 경향이 증가하였다. 과거 농경사회에서의 자녀는 노동력 창출, 가계 계승, 노후 부양에 대한 기대 등으로 인해 중요시되었으나 산업사회에서는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에 대한 강조와 자녀가 부부의 자녀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등으로 인해 소자녀관이 형성되어 자녀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한사회의 출산율은 미혼률의 정도와 기혼여성의 출산수준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구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김승권, 2001).

이처럼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가족의 변화를 야기하는 동시에 가족 개개인의 의식도 변화시켜 지속적인 저출산과 소자녀관의 정착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승권, 2005). 일본의 저출산 원인은 만혼화와 미혼화의 증가와 그에 따른 부부의 출생력의 저하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성의 고학력화,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의 증대,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 등의 요인들이 있다(內閣部, 2004).

나. 저출산 현황

일본에서의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낳는 부모 세대의 감소나 출생률의 저하에 따라 새롭게 출생하는 아이의 수가 감소하는 소자화(小子化) 현상을 의미한다. 국제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적 인구 대체 합계출산률⁵⁾은 2.1로 추계되고 있으며, 일본은 이보다 낮은 2.07에서 2.08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출생률 저하는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시작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직후 베이비붐을 일으켜 1940년대 후반에는 출생수가 년 간 약 270만 명이 되었다(송태민, 2010).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베이비붐 기간(19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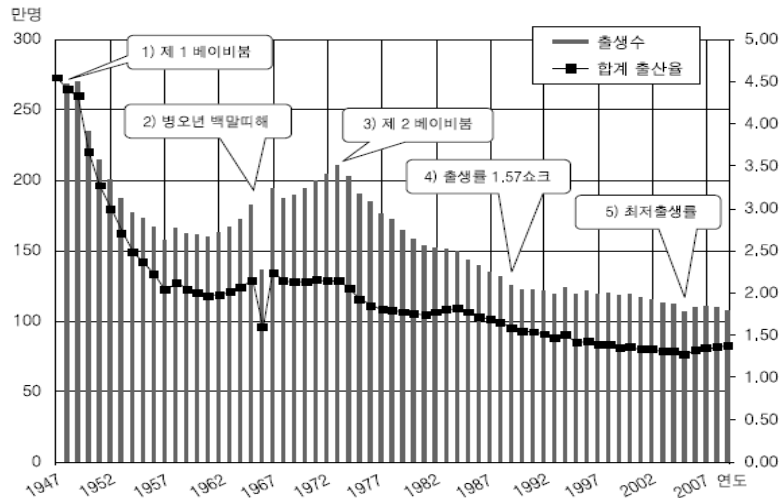
5) 합계출산율(TFR: Total Fertility Rate): 여성 한 명이 평생 낳게 될 평균 자녀 수(송유미·이제상, 2011.)

1949)의 출산율은 1947년 4.54로 높은 출생률을 보였으나 1957년 2.04로 급격한 속도로 감소였다(Retherford and Ogawa, 2005). 이것은 1948년까지 일부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은 피임·중절·불임수술이 불법이었으나 1948년 우생보호법에 의해 부분적으로 인정이 되고, 1949년 ‘경제적 이유’의 중절이 인정되었고, 전쟁 이후의 복구 등의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송태민, 2010).

또한, 1950년대와 1960년대에도 혼인건수와 결혼율 감소로 인해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인해 여성고용율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 만혼화 경향이 증가하여 출산율은 더 감소되었다(Retherford and Ogawa, 2005). 1980년대에는 출산률이 더 하락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여성의 교육수준 증가로 인한 고용기회의 확대로 성 평등의식이 높아져서 여성들이 결혼을 연기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1989년이 출산율이 1.57까지 내려간 ‘1.57쇼크’를 경험하게 되면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였다(황해범, 2006). 정부는 일과 양육 그리고 양육에 대한 공적 지원을 강조하는 엔젤플랜(1995-1999)을 통해 저출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구조조정으로 인해 출산률은 더욱 감소하였다(Ogawa, 2003).

1990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출생률의 저하가 이루어졌고, 1997년부터 소자화(小子化)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2003년에는 출생수가 112만명까지 감소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총인구수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송태민, 2010). 2005년 출산율은 과거 최저인 1.26명이었으나, 2006년부터는 출생수와 합계출산율이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2007년에는 출산율이 1.34로 증가하였다.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경기회복과 기업의 실적 개선에 따라 고용이 안정되어 20-30대의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

경제붕괴 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면서 젊은 남녀들이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결혼을 연기하거나 출산을 포기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고용환경개선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이 증가하였으나(이삼식, 2007). 2009년 이후 경기불황, 비정규 고용에 따른 노동환경의 저하 등 사회전반적으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출생률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송태민, 2010).



자료: 송태민. 2010. p.102 재인용

[그림 Ⅱ-2] 일본의 연도별 출생수 및 합계출산율

오일쇼크 이후의 출산율 저하는 국가를 일정하게 유지해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치환수준인 2.08을 밑도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드러내었다(공병호, 2002). 일본의 출생률 감소의 요인은 만혼화, 미혼화이며, 직접적 원인은 만산화 경향으로 인한 여성 한명당 생애 출산수의 감소이다. 만산화의 배경으로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노동력과 노동의식이 향상되어 여성의 취업기회가 많아짐으로 인한 변화이다.

만혼화의 경향은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빠르게 진행되었고, 만혼화로 인하여 자녀의 출생 연령이 오르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만산화로 이어졌다. 결혼 후 첫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평균기간이 1970년은 1.81년이었고, 2008년에 이르러서는 2.15년으로 길어졌다. 2009년 내각부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갖지 않은 요인으로 ‘경제적 부담의 증가’가 76.4%로 가장 많았고, 2순위로 ‘일과 생활·육아의 양립으로 43.9%를 차지하였고, 3순위는 ‘출산 연령, 아이를 가지는 연령’으로 42.7%의 순으로 나타났다(송태민, 2010).

일본의 저출산율에는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자녀양육비용, 경제 불황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이 영향을 미쳤다. 출산율 저하는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인구를 감소시켜서 세대 간 부양을 중심으로 하는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와 정부의 정책 계획에 영향을 주게 된다(김명중, 2006).

일본정부는 저출산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1994년 엔젤플랜을 시작으로 1999년 신(新)엔젤플랜(2000-2004), 2004년 신신(新新)엔젤플랜(2005-2009)을 5년 주기로 발표하였다. 엔젤플랜은 양육에 대한 공적보조를 강조하여 교육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였고, 신(新)엔젤플랜은 육아휴가법과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서 소득대체수준을 높이고,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까지 증가시켰다. 또한 아동수당 대상을 3세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확대하였다. 2003년에는 차세대육성지원대책추진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와 기업이 자체적으로 아동양육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2004년에는 아동수당대상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신신(新新)엔젤플랜을 통해서 아동보육지원과 성(性)평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기업의 보육 시설 장려, 취업 경험기회 확대 등을 마련하였다(이삼식, 2007; 황해범, 2006). 최근에는 2005년 일본 인구의 감소를 계기로 하여 저출산 정책의 방향을 인구정책 대응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경제적 대응으로 변화하고 차세대 육성, 일·가정 양립, 청년 자립 등에 대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도 일·가정 양립 정책의 현장 및 행동지침에 참여하는데 합의함으로써 저출산문제에 동참하고 있다(신윤정,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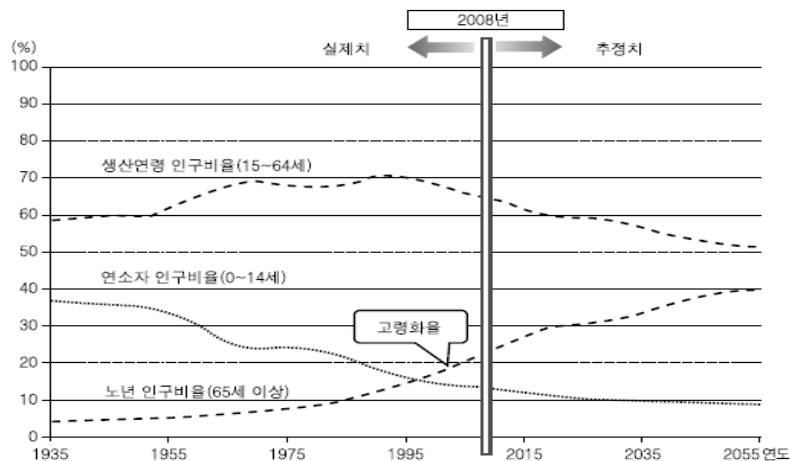
2. 고령화

가.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일본은 평균수명, 고령자수, 고령화 속도의 측면에서 세계 제일의 고령화사회이다.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1980년대까지는 하위 수준이었고, 1990년대에는 중위권 수준이었으며, 2005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어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였다(송태민, 이중순, 2010). 일본에서는 1935년 고령화율이 4.7%로 낮은 수준이었으나 1950년에서 1979년까지 출생률의 저하로 인해 고령화율이 높아져 1970년에 고령화율이 7.1%가 되어 ‘고령화사

회)로 진입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출생률의 감소와 사망률의 저하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고령화율이 상승되어 1994년에는 14.1%가 되어 ‘고령사회’로 (차홍봉, 2007; 김현진, 2004), 2005년에는 20.2%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었고, 2010년 고령화율은 22.7%에 들어섰다(이정남, 윤철재, 2010).

일본의 인구는 최초의 국세조사를 실시하였던 1920년에 5,596만 명이었으며,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7년에는 1억 명을 넘어섰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2006년 1억 2,774만 명 이후 2007년부터 인구감소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차홍봉, 2007). 일본 총무성은 2008년 9월의 추계인구를 통해 70세 이상의 인구가 2,017만 명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서게 되면서 최고치를 갱신하였음을 보고하였다. 2009년 고령화율은 22.8%로 인구 5명 중 약 1명이 65세 이상의 고령자이고, 10명 중 1명이 75세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송태민, 이중순, 2010), 2020년에는 고령자 인구가 약 3,590만명으로 예상되어 고령화율은 28.9%에 달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고, 2050년에는 36.9%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송태민, 이중순, 2010; 정기룡, 2010).



자료: 송태민·이중순, 2010. p.103 재인용

[그림 II-3] 일본의 인구비율 변화와 고령화율 전망

- 6) 국제연합(UN)에서는 고령화율이 7% 이상이 되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김현진, 2004).

고령화의 직접적 원인은 사망률과 출생률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일본에서 합계출산율은 1930년은 6.8, 1950년 5.5, 1970년 3.3, 1985년 2.5으로 전 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소자녀화(小子女化) 현상이 보편적이 되었다. 전근대사회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으로의 사회변동은 사회의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근대사회에서 여성들의 학력수준이 높아지고 사회진출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출산률은 감소하고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어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고령자의 비중이 높은 사회에 이르게 되었다(전광희, 1992). 이러한 현상은 일본, 미국, 유럽 등의 나라와 동일하지만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이 길게는 115년에서 짧게는 40년이 걸린 선진국가들에 비해서 일본은 24년이 걸려서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었다(Rebick and Takenaka, 2006; 차홍봉, 2007).

〈표 II-1〉 주요국의 고령화 현황

	고령화구분 도달 연도			도달 소요기간	
	고령화사회 (7%)	고령사회 (14%)	초고령사회 (20% 이상)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일본	1970	1994	2006	24	12
한국	2000	2018	2026	18	8
미국	1942	2014	2030	72	16
독일	1932	1972	2010	40	38
프랑스	1864	1979	2019	115	40

자료: 정기룡. 2010. p.43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참고.)

일본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령자와 관련된 복지정책은 1874년 최초의 공적규제인 홀구규칙을 시작으로 1963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세계 최초로 노인과 관련된 법을 시행하였다. 1970년에는 ‘고령자사회’로 진입하여 고령자와 관련된 의료, 복지, 연금 등 다양한 정책들이 발전되었다(이정남, 윤철재. 2010).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1980년대에 들어서는 구체적으로 고령화에 대해 대응하기 1985년 7월 ‘장수사회대책관계각료회의’를

설치를 시작으로 하여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을 연구한 결과 1995년에는 ‘고령사회대책기본법’이 성립되었다(김현진, 2004).

1997년에는 ‘개호보험법’이 성립되어 ‘고령자에 의한 서비스 선택 및 계약화’ 등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이 시행되면서 고령자에 대한 의료·복지제도는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초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0년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을 시작으로 ‘2000년 골드플랜21’, ‘2000년 개호보험제도 시행 및 2005년 개호보험제도 개혁’, ‘2006년 의료제도 개혁’, ‘2008년 고령자 의료확보에 관한 법률 및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시행’ 등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이정남·윤철재, 2010).

나. 고령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

고령화사회가 가족의 존재양식에 가져오는 영향은 가족주기의 변화에 따른 부부의 존재양식과 부양문제이다(전광희, 1992). 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에서 노인은 생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 지혜를 가진 존재로서 그 위치와 역할이 확보되어 있었고, 오늘날에 비해서 평균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희소가치를 인정받으며 자녀들에게 보호를 받아 왔다(고명자, 2007).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족구조의 변화와 함께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령자 1인 또는 고령자 부부의 가구가 증가하였다(전광희, 1992).

일본에서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1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5명 정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나 2차 세대대전 이후 출생률의 감소, 핵가족화의 진전, 단독가구의 증가 등 가족구성원의 변화와 함께 1985년에는 3.1명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자녀부부나 친족과 동거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도 1960년에는 87%로 나타났으나 1985년에는 66%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동거율의 감소경향은 도시가 더 크게 나타나지만 도시와 농촌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전광희, 1992).

1960년대 고도성장기를 거치면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가족생활도 크게 변화되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샐러리맨 가정이 증가함으로써 3세대 동거를 전형으로 하는 직계제 가족에서 미혼자녀와 부부를 전형으로 하는 부부제 가족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게

되는 형태가 증가하게 되어 노인이 혼자 살거나 노부부만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함께 증가하게 되었다(고명자, 2007).

서구사회와는 달리 일본 전통사회는 장남이 부모와 동거를 하며 부양을 하였기 때문에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자녀와의 동거율이 감소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가 급증하면서 고령자와 가족과의 단절감이 더 커지게 된다. 나이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의 단절은 단순히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관행과 새로운 가족형태의 충돌로 인한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명자, 2007).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노인들의 경우, 서구 유럽의 복지국가에서는 높은 수준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일본에서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복지서비스를 ‘효’라는 명분으로 가정에 맡김으로써 노인과 가족의 고통, 의료비에 대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난다(고명자, 2007).

그리고 고령화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노인인구의 부양관계를 설명하는 노년부양비⁷⁾도 변화하였다. 노인부양비는 1950년 8.3이었던 것이 1970년에는 10.3으로 증가하였고, 2000년에는 25.5, 2005년에는 30.0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이러한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50년에는 6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생산연령인구와 노인인구도 1970년에는 10:1, 2000년에는 4:1로 나타났으며, 2050년에는 1.5:1로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노인에 대한 부양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다(차홍봉, 2007).

〈표 II-2〉 일본의 고령화 현상과 노년부양비

년도	고령화율 (65세 이상)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30	4.8	8.1	13.0
1950	4.9	8.3	13.9
1970	7.1	10.3	29.4

7) 15세부터 64세사이의 생산연령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차홍봉, 2007)

년도	고령화율 (65세 이상)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1990	12.1	17.3	66.2
1994	14.1	20.2	86.1
1997	15.7	22.7	102.0
2000	17.4	25.5	119.1
2005	19.9	30.0	143.2
2030	29.6	50.0	262.8
2050	35.7	66.6	330.8

* 2005년부터는 인구추계 수치임.

자료: Japan Aging Research Center. 2003. *Aging in Japan*.

2차 세계대전 후 단독고령자세대와 부부만의 세대가 크게 증가하였고, 3세대 동거세대는 감소하였다. 노부부의 단독가구가 증가하면 노부부의 생계유지, 질병의 간호, 독신노인의 문제 등 다양한 복지수준에서 위태되어진 문제가 발생한다. 일본의 노인들은 타국가에 비해 자녀나 손주와 함께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부양기간이 늘어나고 여성의 사회진출 등으로 인해 가족관계가 변화하면서 전통가족에서 고유의 역할로 여겨진 노인부양의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이다(고명자, 2007).

3. 다문화가족

가. 이주민의 증가

일본에서는 1978년부터 정주를 목적으로 한 난민 유입을 시작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와서 노동력 부족현상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추진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계 브라질 등 남미 출신 등의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을 시작

으로 1983년의 정부의 유학생 10만 명 계획, 농촌지역에서의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인구가 급증하였다(이원경, 2010). 1990년대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시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1985년에 외국인등록자 수는 약 85만 명이었으며, 1990년에는 약 108만 명, 2000년에는 약 169만명, 2006년에는 약 208만 명이었으며, 2008년에는 약 220만 명이 되면서 총인구의 1.74를 차지하였다(강란혜, 2009; 한영혜, 2007). 2009년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8년에 비해 조금 감소한 총인구의 1.71%인 2,186,121명을 차지하고 있다(이원경, 2010).

2008년을 기준으로 외국인 등록자의 국적 수는 190개국이며, 그 중 중국인이 29.6%(655,37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한국·조선인이 26.6%(589,239명), 브라질이 14.1%(312,582명), 필리핀이 9.5%(210,617명), 페루가 2.7%(59,723명), 미국 2.4%(52,683)이다(이재분 외, 2010) (<표 II-3> 참조).

〈표 II-3〉 국적별 외국인 등록자수(2008년)

(단위: 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중국	487,570 (24.7%)	519,561 (25.8%)	560,741 (26.9%)	606,889 (28.2%)	655,377 (29.6%)
한국·조선	607,419 (30.8%)	598,687 (29.8%)	598,219 (28.7%)	593,489 (27.6%)	598,239 (26.6%)
브라질	286,557 (14.5%)	302,080 (15.0%)	312,979 (15.0%)	316,967 (14.7%)	312,582 (14.1%)
필리핀	199,394 (10.1%)	187,261 (9.3%)	193,488 (9.3%)	202,592 (9.4%)	210,617 (9.5%)
페루	55,750 (2.8%)	57,728 (2.9%)	58,721 (2.8%)	59,696 (2.8%)	59,723 (2.7%)
미국	48,844 (2.5%)	49,390 (2.5%)	51,321 (2.5%)	51,851 (2.4%)	52,683 (2.4%)
기타	288,213 (14.6%)	296,848 (14.8%)	309,450 (14.8%)	321,498 (14.9%)	337,205 (15.2%)
합계	1,973,747	2,011,555	2,084,919	2,152,973	2,217,426

자료: 이재분 외. 2010. p.97

21세기 세계화의 과정은 다국적 기업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가속화시키고, 경제적 동기에 의한 이주노동자나 결혼이주자 등 노동자 계층의 이동도 증가시켰다(이원경, 2010). 1980년대까지만 해도 재일외국인 중 한국·조선 국적자가 85%였으며, 그 대부분이 구 식민지 출신자인 ‘재일조선인’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외국인의 양적 증대와 함께 재일 외국인의 인구 구성이 다양해 졌으며, 뉴커머(new comer)⁸⁾ 외국인의 정주화가 증가하는 등의 재일외국인 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즉, 단신자 중심에서 가족 단위 체제로의 이행,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과 어린이의 증가,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교육, 그리고 사회 진출 등의 뉴커머 외국인의 생활실태가 크게 변화되었다(한영혜, 2007).

나.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족

일본은 1970년대 이후 농촌사회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남성들이 증가하면서 198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신부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결혼이주자와 ‘혼혈’이 인구의 일정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역의 문화변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박동성,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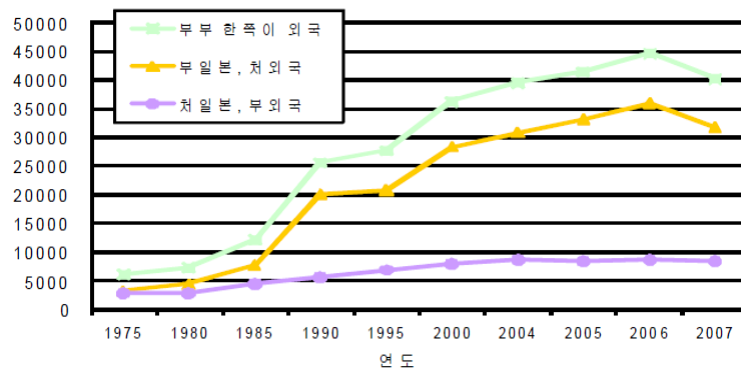
1980년대에는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이 증가하였다. 노동자로 온 중국과 필리핀 여성이 장기적으로 체류함에 따라서 국제결혼이 증가하였으며(Morgan and Hoffmann, 2007; 이원경, 2010), 농촌지역의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마가타현을 시작으로 “일본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추진되면서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국제결혼의 비율은 1980년에는 전체결혼의 0.9%였으나 1990년 3.5%, 2007년 2008년은 5.1%로 증가해 왔다(이원경, 2010).

일본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도시보다는 농촌의 비중이 크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기본적인 구성은 기존의 일본인 가족과 외국인인 결혼이주자 그리고 이 부부의 자녀로 이루어지며, 이

8)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구 식민지 출신자를 ‘올드커머(old comer)’ 그 이후에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뉴커머(new comer)’로 구분하며, 뉴커머는 1960년대 이후의 국제화의 과정에서 일본에 입국한 사람을 말한다(한영혜, 2007).

들 가족구성원은 일반적으로 일본인, 외국인, 혼혈이라는 성격의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된다(이재분 외, 2010).

일본에서의 국제결혼의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7년에 와서는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Ⅱ-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일본인 부인과 외국인 남편의 결혼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나 1985년의 시기를 기점으로 일본인 남편과 외국인 부인의 결혼건수는 급증하였다. 이것은 이후에 농촌의 결혼하지 못한 남성들을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결혼이민정책을 표방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이 급증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에 한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다(이선주 외, 2010).



자료: 이선주 외. 2009. p.88

[그림 Ⅱ-4] 일본의 국제결혼 추이

‘일본인 배우자 등’의 체류 자격에 의해 체류하고 있는 신규 외국인의 국제결혼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혼인은 36,969건이며, 그 중에서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가 8,249건이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28,720건이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한국·조선이 2,107건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이 1,445건, 중국이 1,005건, 영국이 363건, 브라질이 322건, 필리핀이 165건에 이른다.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는 중국이 12,218건이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이 7,290, 한국·조선이 4,558건, 태국이 1,338건, 브라질이 290건, 미국이 215건, 페루가 116건이다(이재분 외, 2010).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이다. 정부는 이주민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이주민과 내국인이 서로를 인정하고 적응할 수 있게 다양한 정책들을 모색해왔다(Biles et al, 2008).

일본의 다문화정책은 공식적으로 ‘다문화공생’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총무성이 발표한 다문화공생의 의미는 ‘국적과 민족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한영혜, 2007; 이선주 외, 2010).

일본의 다문화정책의 특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지방정부가 다문화공생정책을 독자적으로 정책비전과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다문화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방정부는 다문화공생 사업을 위해 민관협력 형태로 국제교류협회를 다수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조현미, 2009; 김정진, 2010).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전반에 걸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외국인 주민시책의 체계화와 종합화를 추진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제교류협회에서는 외국인간의 네트워크 지원, 일본어 교육, 상담활동 등 외국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總務省, 2006). 이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다문화공생 정책을 채택한 것은 2005년이며, 최근에는 ‘다문화공생 추진플랜’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총무성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다문화공생 시책과 재계의 다문화사회 입장 표명 등에 영향을 받아 2006년에는 다문화사회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이선주 외, 2010).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외국인과 일본인 주민들이 지역에서 생활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문화나 관습의 차이 등에서 오는 갈등이 나타나고(이유진, 2010),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이 갖는 가족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자녀의 교육문제 등 다양한 가족문제들이 발생하여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서비스의 전문화를 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김정

진, 2010).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 주거, 취직, 의료·보건·복지 등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하여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이선주 외, 2010).

4. 소결

지금까지 일본사회의 저출산·고령화 그리고 국제결혼과 다문화가정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선진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 고출생·고사망에서 저출생·저사망으로의 인구변화를 겪었다. 일본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저출산과 고령화의 증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사회변동은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왔다. 미혼화와 만혼화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저출산과 소자녀화의 결과를 가져와 단기적·장기적 인구구조와 가족의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여성의 고학력화, 혼인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육아에 대한 부담감의 증대, 경제적 불안정의 증대 등으로 인해 만혼화와 미혼화의 경향이 증가하였다. 또한,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 자녀양육비용, 경제불황과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등은 저출산율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면서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베이비붐 기간(1947-1949) 이후부터 출산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997년부터 소자화(小子化) 사회에 들어서게 되었다. 부부와 미혼자녀 중심의 가족이 증가하였고, 소자녀화의 영향으로 사촌의 부재가 나타나는 등 친족관계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리고 2005년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미혼자녀와 부부를 전형으로 하는 부부제 가족으로의 변화가 나타나 독신 노인이나 고령자 부부 가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감소되고 혼자 사는 노인이나 노인부부 가구가 급증하면서 전통가족에서 고유의 역할로 여겨진 노인부양의 기능의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노인들은 실질적인 생활의 문제와 고령자와 가족과의 단절감이 커지는 등 생활적

이고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이러한 경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증가와 함께 일본의 가족구조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이다. 일본에서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거주하게 된 것은 1980년대이다. 이 시기는 이주노동자 증가와 함께 국제결혼이 증가하면서 일본사회의 가족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일본에서 국제결혼은 198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함께 다문화 가족 해체의 문제와 이혼, 재혼, 자녀의 교육문제 등 다양한 가족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사회에서 나타난 가족환경의 변화는 한국 사회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국은 2005년 합계출산률이 세계최저 수준인 1.08로 나타나 저출산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증가로 인해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가족구조의 변화도 함께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속적인 출산력의 감소로 인한 부양인구의 감소와 빠른 고령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Ⅲ

장래인구가구추계와 가족의 미래

1. 추계 방법론	53
2. 추계 결과	68
3. 소결	82

1. 추계 방법론

가. 추계 방법론의 특징

장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 기법이라고 함은 자료, 방법, 가정이 명백하여 다른 연구자가 반복 실시하여 검증할 수 있는 방법론을 의미한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예측되는데 인구추계와 가구추계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인구추계는 성별, 연령별 인구수를 예측하는 것이며, 가구추계는 인구추계 정보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특성, 가구원수 등 가구특성별 가구수를 예측하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인구 정보는 추계와 예측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추계는 projection을, 예측은 forecast를 번역한 용어이다. 두 가지 모두 미래를 전망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추계라고 하였을 때에는 특정 가정·조건에 기반하여 미래를 바라본 것을 말한다. 즉 추계는 미래와 얼마나 들어맞느냐는 정확성보다는 특정 가정·조건이 점차 현실화되었을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데 방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예측은 여러 추계 중 미래에 실제 일어날 개연성이 가장 높은 예측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추계의 옳고 그름은 계산과정 상에서 오류가 있었는가를 통하여 판단되는 반면, 예측은 예측된 미래 인구정보와 실제 발생한 기록간의 간격으로 판단된다.

추계와 예측의 구분은 가정·조건에 대한 이해 필요성에서 실질적인 의미 차이가 있다. 추계는 특정 가정·조건을 기반한 것이므로 어떠한 가정·조건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가정·조건이 얼마나 현실적합성이 있는지,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을 때 추계가 개연성 높은 예측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장래인구추계나 이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하는 장래인구추계도 예측이 아니라 추계에 해당한다. 즉 명시된 가정·조건에 기반한 미래 인구를 산출해내는 조건부 시산작업인 셈이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예측력이 없다면 추계의 의의는 상당부분 감소될 수밖에 없다.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조건의 예측력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

다. 과거 통계청의 공식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출생에 대해서 세 가지(중위, 고위, 저위), 사망과 이동에 각각 한 가지씩 하여 총 3개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2006년도에는 여기에 출생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을 하나 더하여 4개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인구추계를 발표하였다.

가정·조건을 상정하는 새로운 기법으로 확률론적 추계법(stochastic forecasting)이 있다. 이는 과거의 출산, 사망, 이동 자료를 시계열 모델링을 하고, 이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이때 모델로 추정된 추세뿐 아니라, 불확실성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장래인구추계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확률론적 추계법에도 단점은 있다. 우선, 장래추세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 출산력 추세가 빠르게 변화하였고, 신뢰도 높은 시계열자료의 축적기간이 짧다는 현실적 한계로 인해 시계열 모델의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

장래인구추계는 향후 50년 내지 100년까지도 내다보는 장기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 세대를 넘어서는 장기 전망은 그 정확도가 떨어져서 사용에 주의를 요한다고 알려져 있다. 2006년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서도 시산결과의 오남용을 우려하여 2050년까지만 공표하였다.

이에 반하여 단기 전망은 그 정확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향후 10-20년의 상대적으로 가까운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추계에서도 불확실성이 야기할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법으로 연령대별로 불확실성의 정도를 구분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향후 20년 이내의 경우, 인구이동이 없다고 가정하면 20세 이상의 성인인구수에서 출산의 영향은 없고 사망에 의해서만 변화하게 된다. 이중에서도 20-50세 인구는 현재의 매우 낮은 사망률(2010년 남성 연령대별로 0.2%~1.8%)을 고려하면 향후 사망률의 개선 정도와 큰 관련 없이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50세 이후는 사망률 개선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0-20살 인구는 출산과 사망 모두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장은 먼저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된 코호트요인법에 대한 설명, 추계에 사용된 가정·조건에 대한 설명, 가구주율법에 의한 가구추계에 대한 설명으로 추계방법론을 다룰 것이다. 이후에는 인구와 가구 추계 결과를 각각 분석하는 결과분석이 뒤따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계 결과가 지니는 함의와 이번 추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토의로 구성된다.

나. 현재 한국 가족의 상황

한국 사회와 UN을 비롯 대부분의 국가나 기관에서 인구추계에 사용하는 방법은 코호트요인법이다. 코호트요인법은 특정 연도의 성 및 연령별 기준 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장래 인구변화를 성 연령별로 구분하여 산출하는 방식이다. 고려하는 인구변동요인으로는 출생, 사망, 인구이동이 있다. 성 및 연령별 인구 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인구총수를 시계열 자료로 모델링 하는 방법들에 비해 자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그러나 장래인구를 구성하는 성 연령별 인구수와 그 구성비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코호트요인법의 장점이 있다.

[그림 III-1]에서 보듯이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은 t 년 성 연령별 인구에 인구변동요인을 고려하여 $t+1$ 년의 성 연령별 인구를 산출하는 방식을 취한다. 구체적으로 아래 식과 같은 인구균형방정식을 성 연령별로 의거해 계산하게 된다.

인구균형방정식 (Balancing Equation of Population Change)

$$P(t) = P(t+1) - B(t, t+1) - D(t, t+1) + I(t, t+1) - O(t, t+1)$$

$P(t)$: t 년의 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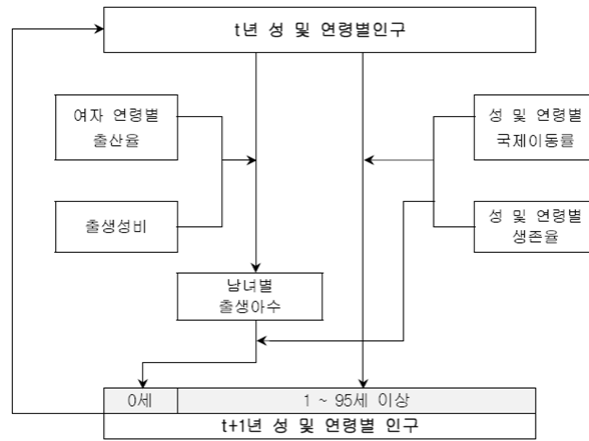
$P(t+1)$: $t+1$ 년의 인구

$B(t, t+1)$: $t \sim t+1$ 년 동안의 출생아수

$D(t, t+1)$: $t \sim t+1$ 년 동안의 사망자수

$I(t, t+1)$: $t \sim t+1$ 년 동안의 국제 입국자수

$O(t, t+1)$: $t \sim t+1$ 년 동안의 국제 출국자수



자료: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2005-2050

[그림 Ⅲ-1] 코호트요인법에 의한 인구추계 과정

1) 기준인구

인구추계의 시작점이 되는 연도의 인구를 기준인구라고 한다. 인구추계는 연령별로 이전 인구에 출생을 더하고(0세만 해당), 사망을 차감한 후 순이동을 더하는 방식으로 가공된다. 이러한 추계가 시작되기 직전연도의 인구가 기준인구가 된다. 이 기준인구가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되었는가는 인구추계의 정확성을 담보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기준인구는 매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준거로 하여 작성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정확도를 기하지만,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조사명부, 이동중이거나 거처가 불분명한 경우, 조사원이나 응답자가 상주인구 개념 등 조사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경우 등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은 주민등록정보 등 다양한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오차를 보정하게 된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가 11월 1일 기준으로 측정되는 반면, 기준인구는 한해의 중앙지점인 연앙인구를 기준으로 하기에 시점 조정에 따른 보정도 이루어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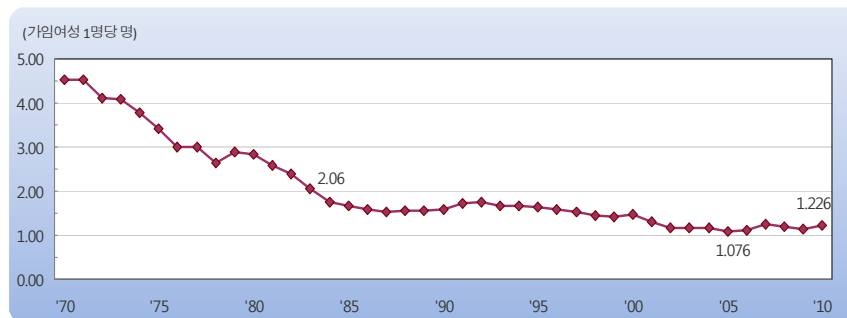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준인구는 2010년에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해 조사된 2010년 11월 기준 내국인 인구이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센서스 자료를 활용된다. 행정자료의 습득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하여 보정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외국인 자료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제이동에 대한 가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내국인만으로 자료는 한정하였다.

2) 출산 가정

[그림 III-2]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 사회의 합계출산율 변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70년 4.0명을 넘었던 합계출산율은 감소세를 지속하면서 1983년 처음 대체출산율 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미만으로 내려오게 된다. 80년대 중반부터 십여 년간은 1.7명 부근에서 합계출산율은 소폭 등락을 거듭하면서 매우 완만한 감소세를 보인다. 2000년부터 출산율을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2002년에는 1.17명이라는 기록적인 낮은 수치를 기록한 뒤 2010년 1.23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최근의 출산율 변화 추이는 <표 III-1>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합계출산율은 1.226명으로 2009년 1.149명보다는 소폭 증가하였다. 가장 출산율이 높은 연령층은 2000년대 초까지는 20대 후반이었으나 2006년부터는 30대 초반으로 올라갔다.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출산율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있는 추세이다. 20대 초반의 출산율은 2000년까지만 해도 여성 천명당 38.8명이었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여 2005년 이후에는 16~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30대 후반의 출산율은 2000년 17.2명에서 증가하여 2010년에는 32.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자료: 통계청, 2010. 출생 보도자료

[그림 III-2] 1970년-2010년 한국 사회 합계출산율 추이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은 동유럽과 남유럽에서 과거엔 보기 힘들었던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Kohler와 그 동료들이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상황을 의미한다(Kohler et. al. 2004). 한국 사회의 경우, 2001년 처음 초저출산을 기록한 후 2010년 현재까지도 못 벗어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며 발생하는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출산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계출산율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낮게 나타나며, 반대로 출산이 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높게 나타난다. 1980년대 미국의 대체출산율 이하의 저출산과, 동유럽과 남유럽의 초저출산의 상당부분은 이러한 출산시기변화(Tempo Effect)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Ⅲ-1〉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명당 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A)	2010 (B)	B-A
합계출산율		1.467	1.297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6	0.077
연령 별 출 산 율	15-19세	2.5	2.2	2.6	2.5	2.3	2.1	2.2	2.2	1.7	1.7	1.8	0.1
	20-24세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6	16.5	-0.1
	25-29세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79.7	-0.7
	30-34세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4	11.6
	35-39세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32.6	5.3
	40-44세	2.5	2.4	2.4	2.4	2.4	2.4	2.6	3.1	3.2	3.4	4.1	0.7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0

자료: 통계청. 2010. 출생 보도자료.

출산을 미루는 상황이 정체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일정수준의 출산율 반등은 가능하다. 1990년대부터 스페인,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5개국에서 초저출산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200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들 대부분 국가에서 출산율

이 반등하여 지금은 1.3명 보다 높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유지되고 있다 (Goldsetein et. al. 2009). 출산율 반등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으로는 앞서 말한 출산지연이 멈춘 것이 주요하게 지적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출산지연 현상이 정체되거나 사라진다면 일정수준 출산율 반등도 가능할 것이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한국 사회 변화가 가져온 출산기피 현상과 현재의 초저출산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는 실업을 증가시켰고, 비정규직을 확대시켰다. 또한 경제위기 상황이 항구화됨으로써 경제주체들의 선택을 보수화시켰다. 여성은 더 이상 남성의 소득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직접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위험을 분산시키고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여성의 고학력화와 함께 맞물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국적 상황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는 출산을 기피하게 만드는 효과도 가져왔다.

과거 양육을 함께 책임지던 가족공동체 문화가 소가족형태로 바뀌면서 자녀의 영유아기에 특히 과중한 육아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보육시설이 빠르게 증가되고 있으나 여전히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자녀양육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들이 속속 사회화되어 시장에서 제공됨으로써 육아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나 동시에 비용부담을 늘이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경쟁적인 교육환경에 따른 자녀 교육비용의 급속한 증가와 맞물려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 결혼에서부터 출산 육아의 어려움은 점점 심화되어가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사회의 출산율 반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출산율을 가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초저출산을 먼저 경험했던 외국 사례 대부분에서 출산율 반등이 있었다고 우리나라에서도 출산율 반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기는 쉽지 않다. 설사 출산율 반등이 가능하더라도 그 시점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2006년도에 통계청이 공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중위 가정에서는 2030년 이후에 합계출산율 1.28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았다. 기간출산율을 코호트출산율로 변환 후 로그감마분포모형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였으며 이를

다시 기간출산율로 환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 수치는 2010년 현재의 출산율 수준과 매우 근접해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 수준이 향후 20년간 지속되리라고 가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출산율 반등도 악화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에서 현재의 출산율 수준이 당분간 지속되리라는 가정은 나름의 신빙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추계는 가정·조건에 기반한 시산임을 고려하면 이해하기 쉬운 가정을 제시함으로써 추계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향후 출산율이 변화하였을 때 현 수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추계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구변동요인인 사망 이동과 달리 출생은 0세에서만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t 년도의 특정연령대 인구는 $t+1$ 년이 되면 시점 t 의 인구에 출생자를 더하고 사망자를 뺀 순이동을 더하면 산출이 된다. 그런데 출생자는 0세에서만 발생하므로 실제로는 0세를 제외하면 사망과 이동만 고려하여도 계산이 가능하다.

[그림 III-3]에서 보듯이 향후 20년간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생의 영향을 받는 구간은 회색으로 표기된 부분만 해당한다. 추계 첫해는 0세만 해당되지만 이후 한해가 지나갈 때마다 1세씩 영향을 받은 연령구간이 늘어간다. 이에 따라 2030년 기준 20세 미만의 인구는 출생가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20세부터 이후 연령대의 인구는 출생가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출생가정은 한세대 이내의 단기간을 추계대상으로 삼을 경우 가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연령구간이 성인세대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여자
0세																					
1세	207,079	-	-	-	-	-	-	-	-	-	-	-	-	-	-	-	-	-	-	-	-
2세	222,907	207,019	-	-	-	-	-	-	-	-	-	-	-	-	-	-	-	-	-	-	-
3세	228,944	222,458	206,973	-	-	-	-	-	-	-	-	-	-	-	-	-	-	-	-	-	-
4세	208,124	226,905	222,420	206,938	-	-	-	-	-	-	-	-	-	-	-	-	-	-	-	-	-
5세	204,746	208,096	226,875	222,390	206,910	-	-	-	-	-	-	-	-	-	-	-	-	-	-	-	-
6세	221,463	204,722	208,072	226,849	222,365	206,886	-	-	-	-	-	-	-	-	-	-	-	-	-	-	-
7세	227,718	221,440	204,701	208,050	226,825	222,341	206,865	-	-	-	-	-	-	-	-	-	-	-	-	-	-
8세	232,392	227,696	221,419	204,682	208,030	226,803	222,320	206,845	-	-	-	-	-	-	-	-	-	-	-	-	-
9세	265,050	232,371	227,676	221,399	204,663	208,012	226,783	222,300	206,826	-	-	-	-	-	-	-	-	-	-	-	-
10	298,119	265,026	232,350	227,655	221,379	204,645	207,993	226,763	222,280	206,808	-	-	-	-	-	-	-	-	-	-	-
11	284,563	298,091	265,001	232,328	227,634	221,358	204,625	207,973	226,741	222,259	206,788	-	-	-	-	-	-	-	-	-	-
12	300,008	284,533	298,059	264,973	232,304	227,610	221,335	204,604	207,951	226,717	222,236	206,767	-	-	-	-	-	-	-	-	-
13	316,575	299,973	284,500	298,025	264,943	232,277	227,584	221,309	204,580	207,927	226,691	222,210	206,743	-	-	-	-	-	-	-	-
14	318,397	316,534	299,935	284,463	297,986	264,908	232,247	227,554	221,280	204,554	207,900	226,662	222,181	206,716	-	-	-	-	-	-	-
15	320,357	318,948	316,485	299,888	284,419	297,940	264,867	232,211	227,519	221,246	204,522	207,868	226,636	222,147	206,684	-	-	-	-	-	-
16	321,543	320,888	318,889	316,426	299,833	284,367	297,885	264,818	232,168	227,477	221,205	204,484	207,830	226,585	222,106	206,646	-	-	-	-	-
17	322,257	321,474	320,829	318,820	316,358	299,768	284,306	297,821	264,761	232,118	227,428	221,158	204,440	207,785	226,536	222,058	206,601	-	-	-	-
18	330,447	322,178	321,395	320,750	316,281	299,695	284,236	297,748	264,696	232,061	227,372	221,103	204,380	207,734	226,480	222,004	206,551	-	-	-	-
19	317,031	330,359	322,093	321,310	320,665	316,197	299,615	284,161	297,669	264,626	232,000	227,312	221,045	204,336	207,679	226,420	221,945	206,496	-	-	-
20	296,440	316,941	330,265	322,001	321,218	320,574	318,567	316,107	299,530	284,080	297,584	264,551	231,933	227,247	220,982	204,278	207,620	226,356	221,881	206,437	-
21	295,359	296,347	316,841	330,161	321,099	321,117	320,473	318,466	316,007	299,435	283,990	297,491	264,467	231,860	227,175	220,912	204,213	207,554	226,294	221,812	206,372
22	279,750	285,258	296,241	316,728	330,044	321,705	321,003	320,359	318,353	315,895	299,329	283,889	297,385	264,374	231,778	227,095	220,834	204,141	207,481	226,204	221,733
23	281,606	279,637	285,142	296,121	316,600	329,910	321,655	320,873	320,229	318,224	315,767	299,208	283,774	297,265	264,267	231,684	227,003	220,744	204,058	207,397	226,113
24	286,894	281,478	279,509	285,012	295,987	316,456	329,760	321,508	320,727	320,083	318,079	315,623	299,072	283,645	297,129	264,146	231,579	226,900	220,644	203,965	207,302
25	294,373	286,752	281,339	279,371	284,871	295,840	316,299	329,597	321,349	320,568	319,925	317,922	315,467	288,924	283,505	296,982	284,016	231,464	226,787	220,535	203,864
26	317,118	294,821	286,604	281,194	279,227	284,725	295,688	316,136	329,427	321,184	320,403	319,760	317,758	315,305	298,770	283,359	296,829	283,880	231,345	226,670	220,421
27	349,512	316,953	294,668	286,455	281,047	279,082	284,577	295,534	315,972	329,256	321,017	320,237	319,594	317,593	315,141	298,614	283,211	296,675	263,742	231,225	226,553
28	377,177	349,325	316,784	294,510	286,302	280,897	278,933	284,424	295,376	315,803	329,080	320,845	320,065	319,423	317,423	314,972	298,455	283,080	296,516	263,601	231,101
29	397,364	376,866	349,129	316,606	294,345	286,142	280,740	278,777	284,265	295,211	315,626	328,896	320,665	319,886	319,244	317,245	314,796	298,288	282,901	296,350	263,454
30	394,333	397,134	376,747	348,927	316,423	294,174	285,976	280,577	278,615	284,100	295,039	315,443	328,705	320,479	319,701	319,059	317,061	314,613	298,115	282,737	296,178
31	379,307	394,696	396,895	376,521	348,718	316,233	293,980	285,804	280,409	278,448	283,930	294,862	315,254	328,508	320,287	319,509	318,868	316,871	314,424	297,936	282,568
32	344,453	379,078	394,455	396,653	376,291	348,505	316,040	293,819	285,630	280,238	278,278	283,757	294,882	315,062	328,307	320,082	319,314	318,673	316,678	314,233	297,754
33	352,011	344,239	378,841	394,211	396,407	376,058	348,289	315,844	293,636	285,453	280,064	278,105	283,581	294,500	314,866	328,104	319,893	319,116	318,475	316,482	314,038

[그림 Ⅲ-3]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산가정에 영향을 받는 연령구간

출산에서 한 가지 더 가정을 세워야 할 부분은 출생성비이다. 한해 출생아수는 성비에 따라 남자와 여자로 분류되어 추계에 포함되게 된다. 과거 한국 사회는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불균형이 심각했던 시절이 있었다. 여자아이 100명당 남자아이수로 계산되는 출생성비는 1980년대부터 불균형이 심화되어 1990년에는 116.5까지 올랐다. <표 Ⅲ-2>에서 보듯이 2000년대 이후에도 셋째 자녀 이상의 성비에서는 심각한 불균형이 보인다. 그러나 2010년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서는 각각 106.4와 105.8 자연성비에 근접해 있

다. 자연성비에서 남아 출생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다. 전체 출생아에서 셋째 자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줄어들면서 전체 출생성비 또한 자연성비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출생성비는 2010년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출생성비가 자연성비에 근접하였고, 향후 성비불균형이 다시 도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여긴 까닭이다.

〈표 Ⅲ-2〉 성별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단위: 천명, 여아 100명당 남아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출생아수	634.5	554.9	492.1	490.5	472.8	435.0	448.2	493.2	465.9	444.8	470.2
남 아	332.6	289.5	257.8	255.5	245.7	225.7	232.2	254.0	240.1	229.4	242.9
여 아	301.9	265.4	234.3	235.0	227.1	209.3	216.0	239.2	225.8	215.5	227.3
전 체*	110.2	109.1	110.0	108.7	108.2	107.8	107.5	106.2	106.4	106.4	106.9
첫째 자녀	106.3	105.5	106.5	104.9	105.1	104.8	105.7	104.5	104.9	105.1	106.4
둘째 자녀	107.4	106.4	107.3	107.0	106.2	106.5	106.0	106.0	105.6	105.8	105.8
셋째 자녀 이상	144.2	141.5	141.4	136.9	133.0	128.5	121.9	115.7	116.7	114.3	110.9

* 출산순위 미상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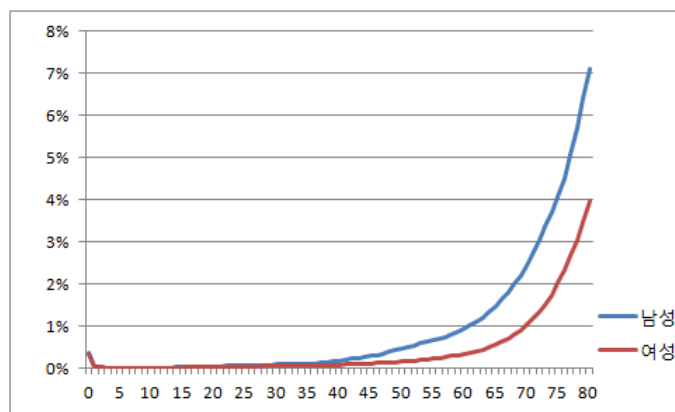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10. 출생 보도자료.

3) 사망 가정

미래에 출산이 감소도 증가도 가능한 반면 기대수명은 향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6년도 장래인구추계에서 통계청은 리-카터모형(Lee-Carter Model)을 사용하여 연령별 사망확률을 추정하였다. 리-카터모형은 연령별 사망률을 몇 개의 계수로 분해하고 그중 시기에 따른 변화는 하나의 변수로 모형화함으로써 time-series modeling을 용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단, 75세 이상 고령층은 과거자료 부족에 따른 한계로 브라스 로짓모텔 (Brass logit model)을 사용하였다. 또, 0세 및 1-4세 구간은 리-카터 모형을 사용하였을 경우 사망확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2050년 일본의 사망확률 자료로 가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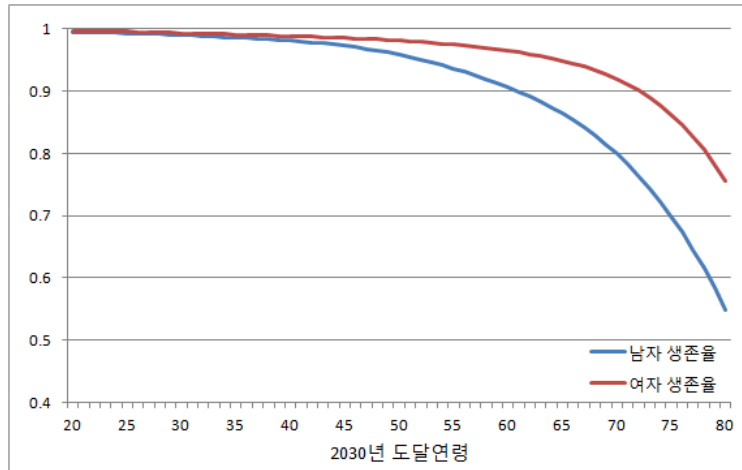
2009년 통계청이 공표한 완전생명표에 의거한 성 연령별 사망확률은 [그림 Ⅲ-4]와 같다. 0세의 사망확률은 남자가 0.37%, 여자는 0.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1~2세 구간은 남녀 공히 0.03%로 줄어든다. 보통 사망확률은 출생 직후가 가장 높고 1-4세 구간도 다른 연령대보다는 높은 편이나 이후엔 매우 낮게 유지되다가 장년층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사회의 경우 사망확률이 매우 낮은 편이어서 0세 구간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뿐 1-4세 구간이라고 특별히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확률이 0.1%를 넘어서는 시점은 남자는 33세이며 여자는 43세이다. 1%를 넘어서는 시점은 남자는 61세이고, 여자는 70세이다.

이 연구에서는 2009년 사망확률이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향후 사망력 개선으로 인한 기대수명 증대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 다가올 미래보다 사망확률을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즉 현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사망확률을 가정하는 것은 고령층 인구규모를 과소 예측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사망확률이 이미 충분히 낮아진 한국 사회에서 사망확률의 개선효과는 고령층을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매우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령층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체 인구수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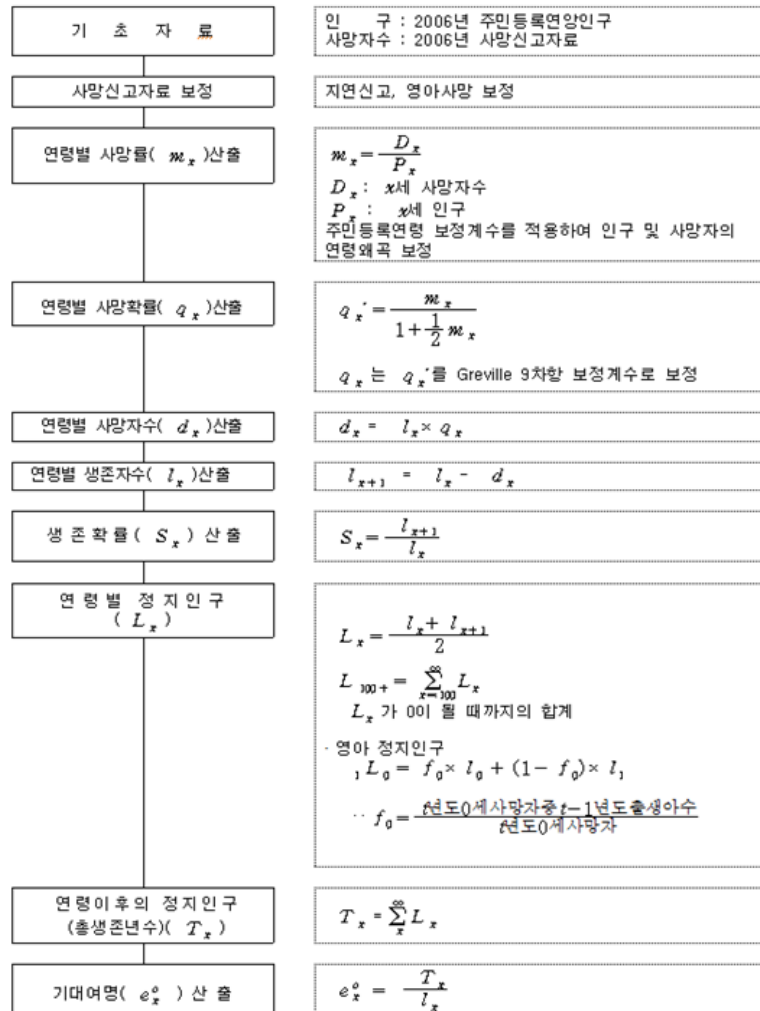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9, 완전생명표

[그림 Ⅲ-4] 성 연령별 사망확률(2009년 기준)



[그림 III-5] 2010년-2030년 성, 연령별 20년 생존율

[그림 III-5]는 2010년부터 2030년까지 2030년 기준 20세에서 80세 인구의 20년 생존율을 성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2010년에 10세이었던 사람이 2030년에 30세가 될 때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남자는 99.03%, 여자는 99.35%이다. 즉 향후 생존율의 개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1% 미만 에 해당하는 규모 이내에서의 움직임에 불과하다. 생존율이 95%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2030년 기준 남자는 53세, 여자는 65세이다. 마찬가지로 생존율이 90%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은 남자는 61세, 여자는 73세가 이에 해당한다. 인구추계에 사용된 성 연령별 생존율은 통계청에서 2009년도에 공표한 완전생명표에 나타난 사망확률로부터 계산되었다. 그 계산방식은 [그림 III-6] 생명표 산출 과정도에 요약되어 있다.



자료: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 2005-2050.

[그림 Ⅲ-6] 생명표 산출 과정도

4) 이동가정

9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하거나 국내에 입국한 사람은 인구이동의 대상자로 간주하게 된다. 2006년도 장래인구추계에서 통계청은 최근 5년간 성 및 연령별 국제이동률의 평균치가 향후에도 지속되리라고 가정하였다.

국제이동은 그 규모가 증대하리라고 예상되지만 앞서 출산과 사망과 달

리 가정을 세우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첫째,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 인구이동은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는데 최근 유입이 더 많은 것으로 상황이 반전되었다. 또한 2004년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와 중국 및 구소련 등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방문취업체 등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유입이 크게 늘고 있다. 또한 2004년부터는 전체 혼인건수의 10%를 넘어설 만큼 결혼이민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변화는 정책적 영향을 크게 받는다. 즉 정책적 목표에 따라 과거 추세와 상관없이 외국인의 유입은 크게 변화될 수 있다. 고용허가제 또한 고용기간 관련 제도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 셋째, 출산 사망에 비해 이동은 자료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이동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외국인의 추가적인 유입이 기대된다면 이러한 가정은 장래 인구규모를 과소 예측할 위험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Ⅲ-3〉 장래인구추계에 사용된 기준인구 자료 및 가정 요약

항 목		내 역
기준인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변동요인별 가정	출산	2010년도 연령별 출산율이 향후 20년간 지속
	사망	2009년도 사망확률에 기초한 생존율이 향후 20년간 지속
	이동	순국제이동은 “0”

다.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장래가구추계는 인구추계와 그 기반이 되는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족보다는 가구 개념을 사용하게 된다. 가족이 부부를 중심으로 혈연자가 주거를 같이하는 생활공동체를 일컫는다. 이에 반하여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도 구분되는 개념이다.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는 측면에서 ‘가족’과도 구분된다. 인구주택총조사가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 자료를 활용한 장래가구추계도 가족이 아닌 가구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07년도에 공표된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는 가구주율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가구주율(Headship Rate: 성 및 연령별 인구 중 가구주가 되는 비율)의 과거추이를 수학적 궤도를 이용해 장래에 연장하여 가구 유형별 가구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가구주율법은 미국의 국가자원기획위원회가 1930년 미국 센서스를 토대로 실시한 이후 각국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다. 장래가구추계의 다양한 방법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주율법을 채택하여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나타난 가구주율이 향후 20년간 지속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를 실시하였다. 2010년에 30대가 20년후 50대가 되었을 2030년에 2010년 50대와 동일한 경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구유형을 구성하리라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이 연구에서 시행한 장래가구추계에서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변화될 가구 구성에 대한 경향성은 고려하지 않았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보다는 2010년의 가구 구성에 대한 경향성이 유지되었을 경우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구 구성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전체 가구 수뿐 아니라 심화되어가고 있는 소가족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부부가구와, 1인가구를 가구의 연령별로 추계하여 제시하였다.

〈표 Ⅲ-4〉 장래가구추계의 기법 및 주요 특징

기 법	주요특징
가구주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 연령 및 기타 특성별 추계인구에 가구주율을 적용하여 가구를 추계 • 가구주율은 각 그룹별 가구주수를 그 그룹별 인구로 나누어 구함 • 가구구성 및 주거특성까지 적용이 가능
확장가구주율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계과정에서 직접 가구구조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특히 가구원의 특성)를 사용하여 가구주율법을 보완 • 먼저 가구주 연령 행렬의 평균연령 변수 형태에서 가구크기 및 다른 변수로 총화한 후, 가구주 및 가구원 비율을 계산하여 가구의 연령 및 가구원의 연령별로 횡단면표로 작성

기 법	주요특징
개인특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형태의 가구에 거주하는 개인의 특성을 기초로 추계 • 연령 성과 같은 개인의 특성으로 분리된 추계인구에 특성 행렬을 적용 • 크기 구성 등 가구특성과 특성행렬을 예측하는 기법이 관건
전이행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형태별로 개인 특성의 흐름을 나타내는 전이행렬에 의해 추계 • 전이행렬에 대한 이탈에는 특정기간 내에 개별가구 상태의 변화에 대한 추적이 필요 • 전이행렬을 기준연도의 분포에 적용하고, 표준 인구추계에서 파생된 총한계를 조정하여 가구를 추계
생명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상태와 가족구성에 대한 복합 생명표를 이용 • 생명표 설계에는 전이확률이 필요 • 가구수는 추계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추계방법(특히 전이행렬법)과 연계되어 사용될 때 가치가 있음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자료에 의한 시뮬레이션 • 특정 전이를 결정하기 위해 Monte Carlo 표본 이용 • 출생, 사망, 혼인, 이동과 같은 사건에 대해 조건부 확률을 추계

자료: Bell et al. 1995; 김형석. 2002.

2. 추계 결과

가. 향후 20년간 장래인구추계(2010년-2030년)

인구추계 결과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제시된다. 첫 번째는 인구총수의 변화, 두 번째는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 마지막으로는 연령별 상대인구 크기의 변화이다.

1) 인구총수의 변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의거한 내국인 인구는 47,990,761명이다. 남자는 23,840,896명이고 여자는 24,149,865명으로 여자가 308,969명 더 많다. 출생성비에 의해 태어날 때는 남자가 더 많지만 이후 여자의 생존율이 더 높아져서 여자 인구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한국 사회 인구가 가장 많은 정점에 달하는 시점은 2019년이다. 이때 전체 인구는 48,834,814명으로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게 된다. 성별로 최고점을 나누어 살펴보면 남자는 2018년

24,191,223명으로 정점을, 여자는 그보다 2년 늦은 2020년 24,657,009명을 정점으로 기록하게 된다.

2011년 인구증가율은 0.3%에 불과하고 2014년부터 0.2%, 2016년부터 0.1%를 나타나게 된다. 감소세는 2021년부터 -0.1%를, 2025년부터 -0.2%를, 2030년에는 -0.4%를 나타나게 된다. 인구가 정점을 기록하고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변곡점을 눈앞에 둔 시점이라 인구변화율은 미미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20년 이후 이러한 감소세는 점차 가속이 붙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5〉 2010년~2030년 성별 인구추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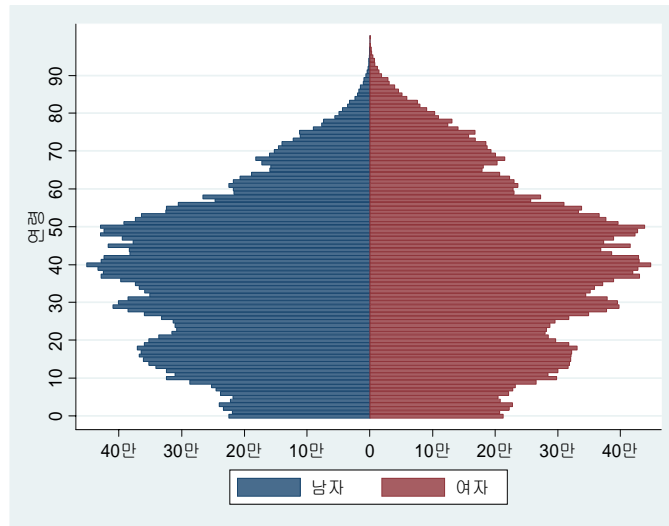
연도	전체인구	남자인구	여자인구
2010	47,990,761	23,840,896	24,149,865
2011	48,176,594	23,926,327	24,250,267
2012	48,342,476	24,001,454	24,341,022
2013	48,486,088	24,065,083	24,421,005
2014	48,605,355	24,116,136	24,489,219
2015	48,699,076	24,153,989	24,545,087
2016	48,767,248	24,178,640	24,588,608
2017	48,811,075	24,190,691	24,620,384
2018	48,832,715	24,191,223	24,641,492
2019	48,834,814	24,181,560	24,653,255
2020	48,820,055	24,163,046	24,657,009
2021	48,790,568	24,136,758	24,653,810
2022	48,747,750	24,103,394	24,644,356
2023	48,692,147	24,063,219	24,628,928
2024	48,623,390	24,016,012	24,607,378
2025	48,540,493	23,961,223	24,579,270
2026	48,442,060	23,898,092	24,543,969
2027	48,326,637	23,825,840	24,500,797
2028	48,192,589	23,743,600	24,448,989
2029	48,038,020	23,650,392	24,387,629
2030	47,861,035	23,545,248	24,315,786

2)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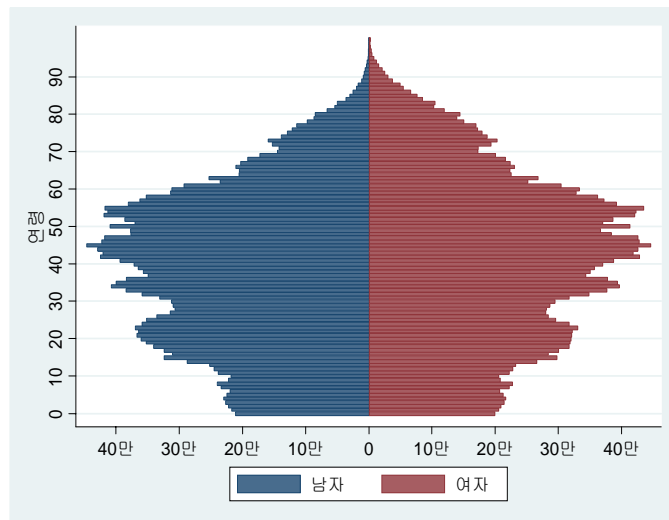
연령별 인구수의 변화 양상은 인구피라미드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인구피라미드는 좌우에 남녀별 상하에 연령별 인구수를 표현한 그래프로 인구연령구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해준다.

한국 사회는 1960년까지만 해도 밑변이 넓은 피라미드형이었으나 2010년은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층 감소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큰 종형태를 띠고 있다. 막대 하나하나를 각 연령별 인구의 절대크기를 보여준다. 연령별 인구크기는 각 연도에 태어난 출생자수에 이후 생존율과 국제이동이 영향을 미쳐 결정된다. 생존율은 완만히 변화해 왔고, 이동을 무시할 수 있다면 각 연령별 크기는 출생자 수에 따라 그 크기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출생자수는 시기에 따라 크게 변화해왔는데 이는 시대적 사회경제적 환경요인과 부모세대의 크기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경제적 환경요인의 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2010년 인구피라미드에서 50세 부근에 남자 40만 명 이상의 거대 인구집단은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세대로 당시 있었던 베이비붐의 영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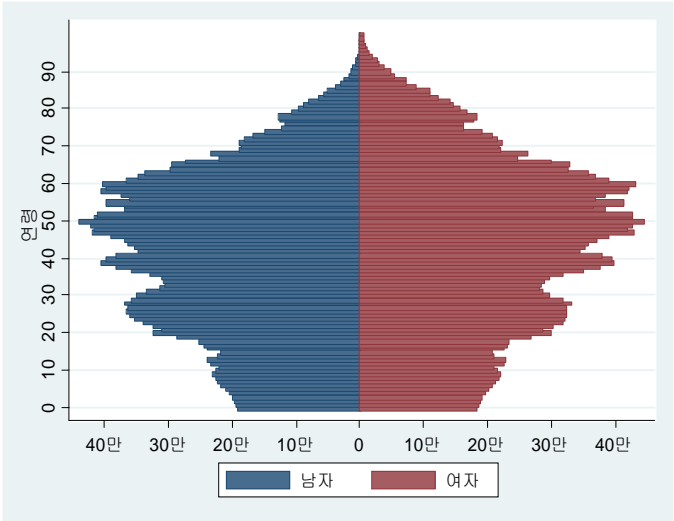
또 다른 요인은 부모세대의 크기이다. 출생아수는 연령별 출산율에 가임기 연령별 여성인구수를 곱하여 산출된다. 즉 출산율이 일정하더라도 가임기 여성인구수가 늘어나면 출생아수는 증가할 수 있다. 30세 부근에서 남자 40만 명 이상의 거대 인구집단은 베이비붐 에코세대로 베이비붐세대를 부모로 두었기에 자녀 세대의 규모도 커진 것이다. 한국 사회는 남자를 기준으로 40만 명 이상을 동일 연령대로 둔 세대는 베이비붐 에코세대를 마지막으로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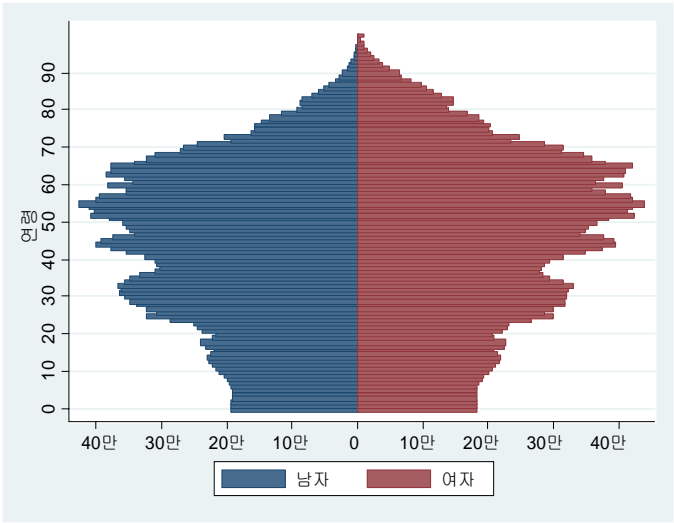
[그림 Ⅲ-7] 인구피라미드(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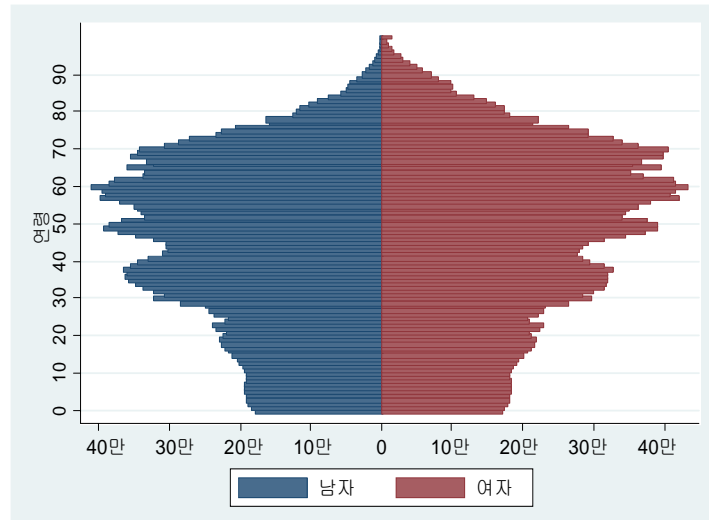
[그림 Ⅲ-8] 인구피라미드(2015년)



[그림 Ⅲ-9] 인구피라미드(2020년)



[그림 Ⅲ-10] 인구피라미드(2025년)



[그림 Ⅲ-11] 인구피라미드(2030년)

합계출산율 2.1명인 대체출산율 이하에서는 자녀세대는 부모세대보다 적은 규모로 태어나게 된다. 한국 사회가 대체출산율보다 낮아진 것이 1983년 이후이니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보다 작아지기 시작한 것은 이미 25년이 넘 어섰다. 이러한 변화는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합계 출산율 1.1~1.3명 수준에서 자녀세대는 부모세대의 60% 정도만 재생산된다. 이는 인구피라미드 변화양상을 통해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71년 출생인 2010년 39세는 백만 명이 함께 태어났었다.

2010년 80만 부근인 부모세대로부터 자녀는 437,452명이 태어났다. 현재의 출산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한 2020년에 출생아수는 374,047명으로 감소 하고 다시 2030년에는 348,20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생아수의 감소는 부모세대의 감소가 예기되어 있어 향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기준 50세, 40세, 30세 부근에 위치한 거대 인구집단(동일 연령대 80만 이상)과 18세에 위치하고 있는 준거대 인구집단(동일 연령대 70만 이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증감없이 인구집단은 감소세만을 나타 내고 있다. 2010년에 미성년이었던 이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에는 설사 출산 율이 증가하더라도 출생아수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인구피라미드는 거대한 고령층의 인구가 특징이 될 것이다. 2030년에 가장 큰 연령코호트는 남녀 공히 60세로 남자는 409,678명, 여자는 432,450명에 달한다. 2010년이 청장년층 위주의 사회였다면 2030년은 장년층과 젊은 고령층 위주의 사회로 재편될 것이다.

또한 연령별 인구수와 관련해서 주목을 받아야 할 인구집단은 성별 결혼 적령기 인구규모이다.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는 남자와 여자의 인구수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 ‘결혼긴장’이라 불리우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표 III-6> 참조)에 따르면 2010년 평균초혼연령은 남성 31.8세, 여성 28.9세로 2.9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평균초혼연령은 해가 갈수록 늦춰지고 있지만 남녀 간의 나이차는 3살 터울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결혼과 관련된 규범이 아직은 강고하게 남아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

〈표 III-6〉 평균 초혼연령

(단위: 세)

년도	평균 초혼연령		
	여 성	남 성	남녀차이
1990	24.8	27.8	3.0
1991	24.8	27.9	3.1
1992	24.9	28.0	3.1
1993	25.0	28.1	3.1
1994	25.1	28.2	3.1
1995	25.3	28.4	3.0
1996	25.4	28.4	3.0
1997	25.7	28.6	2.9
1998	26.0	28.8	2.8
1999	26.3	29.1	2.8
2000	26.5	29.3	2.8
2001	26.8	29.5	2.8
2002	27.0	29.8	2.8

년도	평균 초혼연령		
	여 성	남 성	남녀차이
2003	27.3	30.1	2.9
2004	27.5	30.5	3.0
2005	27.7	30.9	3.2
2006	27.8	31.0	3.2
2007	28.1	31.1	3.0
2008	28.3	31.4	3.1
2009	28.7	31.6	2.9
2010	28.9	31.8	2.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각년도

<표 III-7>은 결혼적령기 남녀 인구만을 따로 떼어내 크기를 비교한 것이다. 결혼적령기 연령을 2010년 자료와 같이 남자 32세, 여자 29세로 설정한 뒤 적령기를 앞뒤 1년씩 남자는 31~33세로, 여자는 28~30세로 정하였다. 적령기 직전은 적령기 이전 3년으로(남자의 경우 28~30세; 여자의 경우 25~27세), 적령기 직후는 이후 3년으로(남자의 경우 34~36세; 여자의 경우 31~33세) 설정하였다. 2030년까지 이러한 적령기에 대한 기준은 변화가 없다고 했을 때 남녀 적령기 인구 규모가 서로 상응하는지 살펴보았다.

2010년은 적령기 남자인구보다 여자인구가 소수이지만 72,698명 더 많은 상태였다. 그러나 적령기 전후로는 남자인구 규모가 더 많은 상태이었다. 2015년에는 적령기 남자인구는 1,074,275명인데 반하여 여자인구는 861,213명에 불과해 적령기 남자인구 중 20%는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 이때는 적령기 전후 인구로도 남자 인구가 더 많아 완충지대를 찾기도 어렵다. 결혼긴장은 2020년 잠시 완화되어 적령기 남녀 인구가 거의 일치하게 되는데, 이후 2025년엔 적령기 남자인구의 13%, 2030년에는 18%가 짝을 못 찾는다.

이러한 결혼긴장의 발생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첫째는 과거 1990년대에 남아선호로 인한 출생아 성비불균형에 의한 것이다. 둘째는 인구감소의 빠른 진행이다.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이 여성보다 더 늦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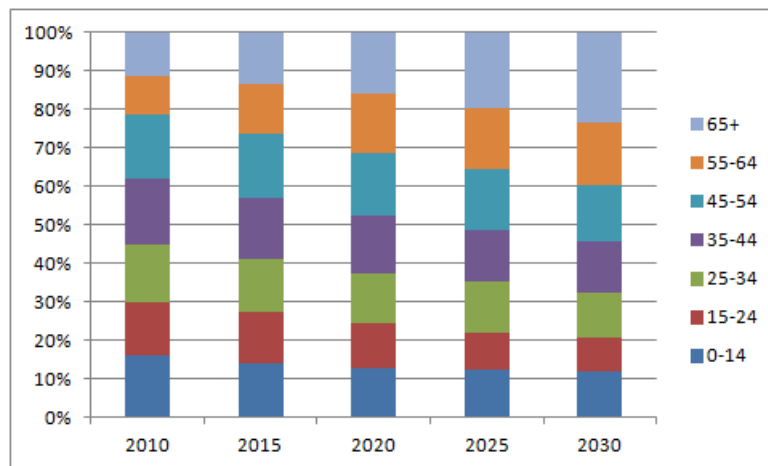
상황에서 빠른 인구감소가 진행되었을 경우엔 상대적으로 결혼적령기의 남성 인구규모가 여성 인구규모보다 많게 된다. 2030년 30세 이하 인구크기엔 연령대별로 증감이 없이 단조롭게 감소세가 계속되므로, 2030년 이후엔 결혼기간이 변함없이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표 Ⅲ-7〉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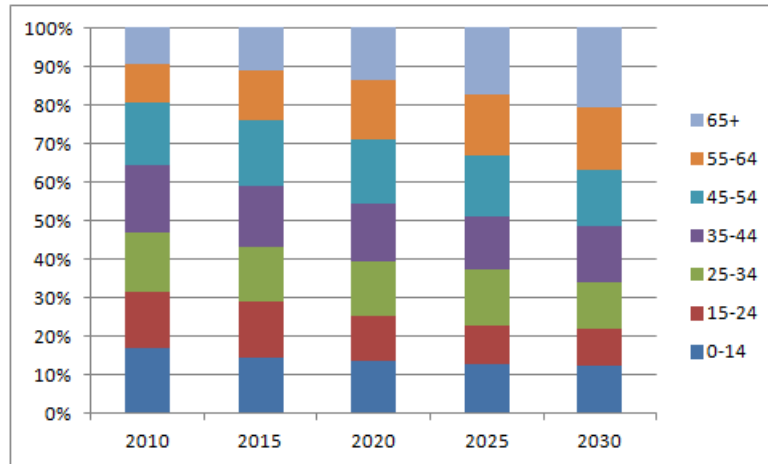
2010년	남자	여자	남자 - 여자	적령기 남자 대비 초과분 비중
적령기 직전	1,197,617	961,603	236,014	0.20
적령기	1,096,776	1,169,474	-72,698	-0.07
적령기 직후	1,139,932	1,075,771	64,161	0.06
2015년	남자	여자	남자 - 여자	적령기 남자 대비 초과분 비중
적령기 직전	930,311	859,647	70,664	0.08
적령기	1,074,275	861,213	213,061	0.20
적령기 직후	1,191,891	1,040,796	151,095	0.13
2020년	남자	여자	남자 - 여자	적령기 남자 대비 초과분 비중
적령기 직전	1,076,963	961,345	115,618	0.11
적령기	953,947	939,745	14,201	0.01
적령기 직후	949,778	842,271	107,506	0.11
2025년	남자	여자	남자 - 여자	적령기 남자 대비 초과분 비중
적령기 직전	1,047,572	878,955	168,616	0.16
적령기	1,093,495	951,276	142,218	0.13
적령기 직후	1,037,845	967,704	70,140	0.07
2030년	남자	여자	남자 - 여자	적령기 남자 대비 초과분 비중
적령기 직전	857,123	650,838	206,285	0.24
적령기	966,201	790,733	175,468	0.18
적령기 직후	1,068,138	894,359	173,779	0.16

3) 연령별 상대 인구크기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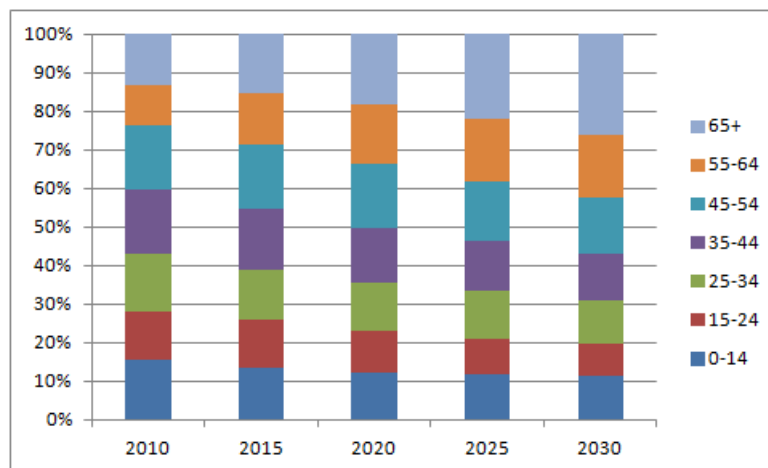
인구의 변화는 그 절대크기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령구성비의 변화도 중요하다. [그림 Ⅲ-12]은 전체인구를 100으로 보았을 때 연령구성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남녀전체로, 다시 성별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연령구간은 15세 미만의 유소년층, 15-24세의 학령층,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의 청장년층, 6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나뉘어 있다. 남녀전체로 보았을 때 201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5-44세 집단으로 전체의 17.2%에 달한다. 유소년층은 16.2%인 반면 고령층은 11.3%이었다. 2030년을 향해 가면서 유소년층 인구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한다. 2030년이 되면 유소년층은 11.8%로 줄어든 반면 고령층은 23.5%로 증가한다. 2010년 고령층 인구비중에 비교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2030년에 고령층을 제외하고 가장 큰 인구집단도 55-64세로 전체의 16.1%에 해당한다.



[그림 Ⅲ-12] 인구구성비(남녀전체)



[그림 Ⅲ-13] 인구구성비(남자)



[그림 Ⅲ-14] 인구구성비(여자)

성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고령층이다. 2010년에는 남자인구의 9.2%만이 고령층에 해당하였는데 2030년에는 20.8%가 고령층이 된다. 생존율이 더 높은 여자인구에서 고령층의 비중은 더 높게 나타난다. 2010년에 여자인구의 13.4%가 고령층이었는데 2030년에는 26.2%가 고령층에 해당한다.

〈표 Ⅲ-8〉 부양비(dependency ratio)

(단위: %)

	2010	2015	2020	2025	2030
유년부양비	22.4	19.1	18.1	18.0	18.1
노년부양비	15.6	18.4	22.3	29.0	36.3
부양비	38.0	37.5	40.4	47.0	54.4

젊은 연령층의 감소와 고령층의 증가는 부양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표 Ⅲ-8 참조>). 부양비는 생산가능연령인구(15-64세)에 대한 유년층 인구(0-14세)와 노년층 인구(65세 이상)의 합의 백분비이다. 2010년에 유년부양비가 22.4%로 노년부양비 15.6%보다 더 컸고 전체 부양비는 38.0%였다. 2015년에는 노년부양비는 증가하지만 유년부양비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전체 부양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하여 37.5%를 기록하리라 예상된다. 이후 유년부양비는 18% 부근에 정체되어 있으나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36.3%에 이르러 전체 부양비도 54.4%에 다다른다.

나. 향후 20년간 장래가구추계(2010년-2030년)

장래가구수는 2010년 17,339,422가구에서 2020년까지는 해마다 약 20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증가세는 해마다 10만 가구 규모로 둔화되어 2030년에는 20,468,970가구가 될 것이다. 가구원수는 2010년 2.77명에서 2015년에는 2.62명으로 다시 2020년은 2.5명으로 줄어들 것이다. 2025년에는 2.4명으로 2030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가구원수의 감소는 부모나 자녀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부부가구수의 증가와 1인가구수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세대 부부가구는 2010년 전체 가구 중 15.4%를 차지했으나 계속된 증가세를 통해 2030년에는 20.5%에 다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절대규모에서도 1세대 부부가구는 2010년 2,671,616가구에서 2030년 4,190,729가구로 두배 가까이 증대가 기대되었다. 1인가구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2010년 전체 가구 중 23.9%에서 2030년에는 24.4%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절대규

모로는 2010년 4,142,165가구에서 2030년에는 5,000,120가구로 백만 가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표 Ⅲ-9〉 가구수

	가구수			1세대 부부가구수		1인가구수	
	전체	남자가구주	여자가구주		%		%
2010	17,339,422	12,841,928	4,497,494	2,671,616	15.4%	4,142,165	23.9%
2015	18,588,934	13,750,428	4,838,505	3,080,529	16.6%	4,426,027	23.8%
2020	19,553,525	14,425,131	5,128,394	3,498,503	17.9%	4,695,012	24.0%
2025	20,192,529	14,862,264	5,330,266	3,900,889	19.3%	4,879,517	24.2%
2030	20,468,970	14,992,826	5,476,144	4,190,729	20.5%	5,000,120	24.4%

<표 Ⅲ-10>은 1세대 부부가구의 연령대별 구성을 보여준다. 가구의 연령은 가구주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였다. 1세대 부부가구는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처음부터 자녀가 없이 지낸 경우 보다는 성년이 된 자녀가 분가한 후 부부만 남게 된 가구들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는 1세대 부부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가 39.1%였던 반면 2030년에는 55%가 된다.

〈표 Ⅲ-10〉 1세대 부부가구의 연령대별 구성(가구주의 연령 기준)

	2010	2015	2020	2025	2030
합계	2,671,616	3,080,529	3,498,503	3,900,889	4,190,729
24세 미만	6,356	7,072	6,439	4,887	4,523
25-34	317,943	297,827	286,547	299,698	257,579
35-44	217,743	203,374	190,239	174,863	179,173
45-54	406,396	421,976	419,940	402,032	369,527
55-65	677,527	868,685	1,047,084	1,081,885	1,075,397
65세 이상	1,045,651	1,281,594	1,548,253	1,937,525	2,304,530

	2010	2015	2020	2025	2030
24세 미만	0.2%	0.2%	0.2%	0.1%	0.1%
25-34	11.9%	9.7%	8.2%	7.7%	6.1%
35-44	8.2%	6.6%	5.4%	4.5%	4.3%
45-54	15.2%	13.7%	12.0%	10.3%	8.8%
55-65	25.4%	28.2%	29.9%	27.7%	25.7%
65세 이상	39.1%	41.6%	44.3%	49.7%	55.0%

소가족화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인 1인가구도 크게 증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표 Ⅲ-11 참조). 2010년에 1인가구는 65세 이상에서 1,066,365가구가 존재하였고 동시에 25-34세 집단에서 917,594가구가 있어 고령층과 기혼전 젊은 청년가구에 1인가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인 가구 대비 구성비를 보아도 25-34세가 22.2%, 65세 이상이 25.7%에 해당해 전체 1인가구의 절반이상이 이 두 집단에 해당한다.

2030년까지 전체 1인 가구 규모는 증가하지만 흥미롭게도 1인가구는 고령층에서 크게 증가하고 젊은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된다. 2030년이 되면 전체 5백만 1인가구 중 25-34세는 696,741가구로 전체의 13.9%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반하여 65세 이상이 2,145,817가구로 42.9%에 달하고, 55-64세 1인 가구까지 더하면 그 비중은 절반이 넘는 59.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표 Ⅲ-11〉 1인가구의 연령대별 구성

	2010	2015	2020	2025	2030
합계	4,142,165	4,426,027	4,695,012	4,879,517	5,000,120
24세 미만	320,810	350,667	316,454	244,611	228,095
25-34	917,594	833,015	832,678	837,902	696,741
35-44	677,516	636,107	590,460	538,147	537,209
45-54	638,103	657,433	654,320	617,629	570,614
55-65	521,777	671,979	799,383	824,430	821,643
65세 이상	1,066,365	1,276,825	1,501,716	1,816,798	2,145,817

	2010	2015	2020	2025	2030
24세 미만	7.7%	7.9%	6.7%	5.0%	4.6%
25-34	22.2%	18.8%	17.7%	17.2%	13.9%
35-44	16.4%	14.4%	12.6%	11.0%	10.7%
45-54	15.4%	14.9%	13.9%	12.7%	11.4%
55-65	12.6%	15.2%	17.0%	16.9%	16.4%
65세 이상	25.7%	28.8%	32.0%	37.2%	42.9%

3. 소결

이 연구에서 실시한 장래인구추계와 장래가구추계는 예측(forecast)이 아니라 추계(projection)임을 주의해야 한다. 추계는 특정 가정·조건에 기반하여 미래를 계산한 것이다. 따라서 추계의 미래 예측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가정·조건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기준 인구로 삼아 출산은 2010년 현재 수준의 사망률은 2009년의 것이 향후 20년간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를 실시하였다. 추계결과에 따르면, 1955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인 베이비붐 세대(2010년 현재 46~55세에 해당)가 2030년에는 66~75세로 모두 65세 이후의 은퇴연령에 해당하게 된다. 2030년에는 백 만명 가량 감소한 6,550,393명으로 여전히 전체 인구의 14%에 해당할 만큼 상당 규모를 유지하게 된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연령대는 한동안 지속된다.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 중 연령대별 인구수가 가장 많은 연령은 50세로 868,684명에 이른다. 가장 인구수가 작은 연령은 55세로 662,739명이다. 베이비붐 세대 이후로 80만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연령대는 29세, 37~42세, 45세가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새로운 세대규모가 작아지는 양상은 20년 후인 2030년에 더욱 심화된다. 2030년에는 14세 인구가 398,576명으로 30만 명대에 접어들게 되고

0세 인구는 348,204명에 불과하게 된다. 이때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연령대는 60세로 842,127명이다. 2010년에 베이비붐 세대에 이어 한 연령층에 70만 명 이상의 세대규모로 한국 사회를 지탱했던 성인세대들이 2030년에는 장년층과 고령층에 접어들게 된다. 그리고 2030년에는 평균적인 한 연령층의 규모가 30대는 65만명, 20대는 45만명, 10대는 40만명 가량으로 줄어든다.

세대규모의 축소가 가져올 변화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 의료보장 등 노인 복지부담 증가와, 신규 노동력의 부족 문제뿐 아니라 가족 내 관계양상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속적인 세대규모의 축소가 가져올 문제점의 한 예로는 결혼긴장을 들 수 있다. 2010년처럼 결혼적령기 연령이 남자 32세, 여자 29세로 유지된다면 적령기 남성은 자신들의 인구규모보다 작은 여성 인구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적령기 남녀끼리만 결혼이 이루어진다면 2030년에는 적령기 남성중 18%가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10년을 넘어가면서 곧이어 발생할 결혼긴장 문제는 2020년경 잠시 완화되었다가 이후엔 다시 지속적으로 발생하리라 예상된다.

결혼긴장 문제를 가져올 연령대는 장래인구추계 결과중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연령대이다. 이 문제는 출산·사망과 같은 인구요인의 변화보다는 사회의 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장차 결혼연령 규범의 변화 내지 완화, 국제결혼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인구가 2019년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장래가구수는 2030년까지는 증가속도는 완화되지만 절대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균가구원수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2010년 2.77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2030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2010년 17,339,422가구이었던 총가구수는 2030년에는 20,468,970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구원수의 감소는 1세대 부부가구, 1인가구와 같은 소가족화 현상과 연결된다. 2010년에 전체 가구 중 1세대부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4%, 1인가구는 23.9%이었다. 2030년이 되면 전체 가구 중 1세대 부부가구는 20.5%, 1인가구가 24.4%가 된다. 1세대 부부가구, 1인가구 모두 고령층에서 크게 증

가가 예상된다.

1세대 부부가구에 비하여 1인가구의 증가는 크지 않은데 이는 연령대별 1인가구의 변화 양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2010년에 전체 1인가구중 22.2%를 차지했던 25-34세 가구는 2030년에는 13.9%로 줄어든다. 절대수치에서도 2010년 917,597가구에서 696,741가구로 줄어든다. 그 대신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1인가구수가 2010년 1,066,365가구에서 2030년에는 2,145,817가구로 두배 이상 증가하게 된다. 2010년 1인가구가 결혼 전 젊은 세대와 고령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2030년에는 고령층 위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래가구추계 결과를 해석함에는 두 가지 지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장래가구추계 결과는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외국인은 제외되어 있다. 이는 기준인구로 사용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가 내국인을 기반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결혼을 통해 구성된 결혼이민자 가정 등 다문화가구를 제외한 분석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둘째, 장래가구추계의 단위는 가족이 아닌 가구라는 점이다. 가족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무관하게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이다. 이에 따라 가구의 유형과 가구원수에는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된다. 가구추계를 해석함에 있어 가족과 다른 가구의 특성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IV

시나리오기법과 가족의 미래

- | | |
|-------------------------|----|
| 1. 시나리오 기법 소개 | 87 |
| 2. 인구가족구조 시나리오 기법 수행 결과 | 98 |

1. 시나리오 기법 소개

가. 시나리오 기법의 정의와 특성

일반적으로 미래 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형태의 계량 모형들은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의 외삽(Extrapolation)’에 의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형들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고려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반면에 시나리오 기법은 환경의 질적 불연속적 변화도 체계적으로 포함하여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시나리오 기법의 마지막 단계, 즉 최종 목표는 도출된 시나리오별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 그 실용성이 높다. 아울러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경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주관적이고 질적인 지표를 포함시키는 가능성이 고려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시나리오 기법은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정의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의 정의는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일관성과 논리성을 갖춘 상태에서 제시하는 것”이다(Porter, 1985). 이는 시나리오 기법이 미래를 예측할 때 하나의 사건이 아닌 복수의 사건의 조합을 전제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두 번째 방식의 정의는 ‘무언가 미래에 결정을 하기 위해서 미래에 변화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도구’라고 시나리오 기법을 정의하고 있다(Schwartz, 1991). 이는 시나리오 기법이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도구적 속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기법은 ‘발생가능한 미래의 모습들을 상상하게 해주는 숙련된 전문적 방법론’으로도 정의된다(Schoemaker, 1995). 이는 시나리오 기법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관련 분야의 소수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시나리오 방법론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밀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생산과정에서 참여자들의 대화, 논쟁, 토론을 중요시 한다.

물론 최종적으로 시나리오 개발자들은 중요 요소들을 서로 결합시켜 주는 줄거리(plot)나 논리적인 구조를 선택한다. 특히 이 과정 속에서 시스템의 각 영역에서 미래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중심으로 두 세 개의 대안적 미래들을 타진하게 된다.

이렇게 시나리오 기법은 단일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미래(not a future, but futures)를 제시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시나리오 기법에서 가정하는 미래는 하나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는 단선적 예측이나 규범적으로 바라는 비전과는 다르다. 시나리오 기법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 가능한 여러 상황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하여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첫 번째 성과는 하나의 상황만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risk)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 변화의 폭과 주기가 빨라지고 미래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중요한 강점이다. 두 번째 성과는 시나리오 기법은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다양한 상황에 대비시킬 수 있다. 이를 통해 강점과 약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식, 자원 이동 기법 등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시나리오 기법을 적용하여 우리의 미래의 모습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만약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데 인력과 자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순서를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면에서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 연구와 전략 연구를 연계시켜 주는 고리의 역할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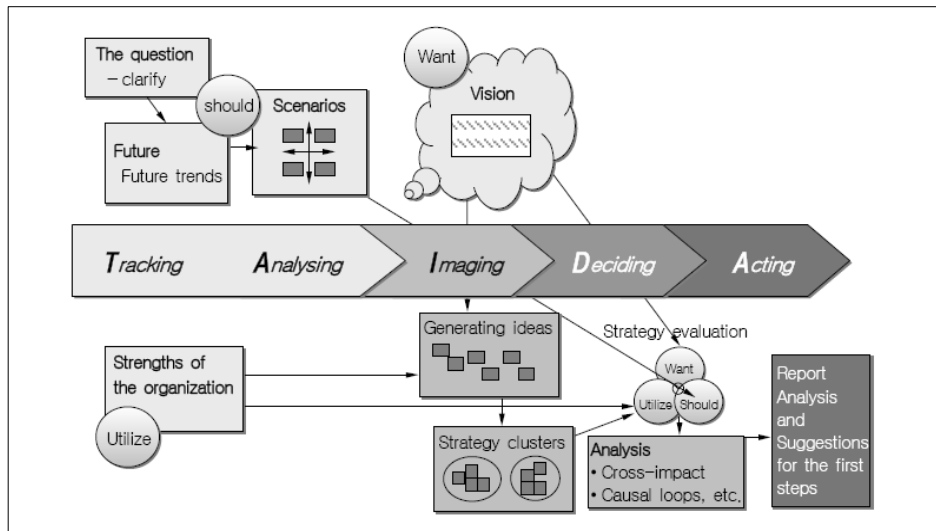
나. 시나리오 기법의 종류와 소개

1) T.A.I.D.A.

스웨덴 Kiros Future 연구소의 T.A.I.D.A. 시나리오 기법은 미래 예측과 의사결정과 관련된 다섯 가지의 절차 속에 포함되어 있다(Lindgren and Bandhold, 2003; 최항섭 외, 2005). 구체적으로 미래 예측과 의사결정 과정은 ①추적(tracking), ②분석(analyzing), ③상상(imaging), ④결정(deciding), ⑤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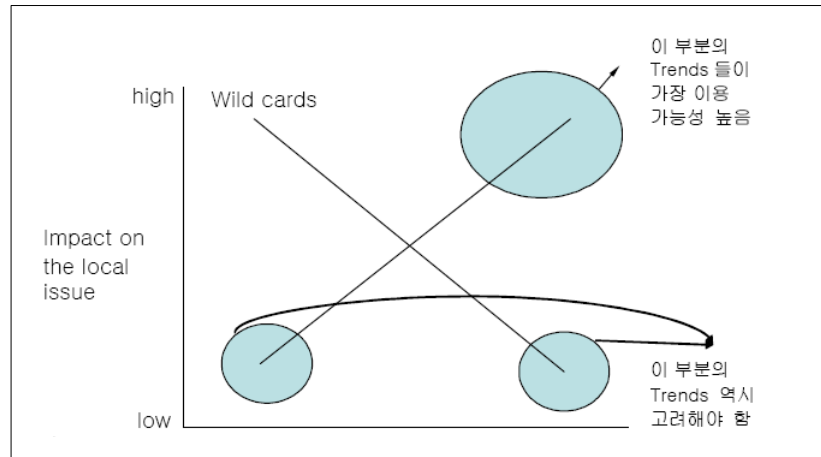
동(acting)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시나리오 기법의 적용은 바로 추적과 분석이라는 두 단계와 관련이 깊다([그림 IV-1] 참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추적 (혹은 경향 추적) 단계에서는 ‘밖에서 안을 보는(outside-in)’ 작업을 주로 하게 된다. 이러한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거시적 동인(driving forces)’을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추적 단계에서 핵심작업은 주된 쟁점과 관련된 여러 경향(trend)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경향은 현재를 기점으로 가까운 과거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추세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경향은 유형화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유형화에서 두 가지 차원을 주로 사용한다. 첫 번째 차원은 트렌드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이고, 두 번째 차원은 미래의 쟁점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이다. [그림 IV-2]는 이러한 유형화 작업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자료: Mats Lindgren and Hans Bandhold, 2003, 『Scenario Planning: The Link Between Future and Strategy』, p.93

[그림 IV-1] T.A.I.D.A. 진행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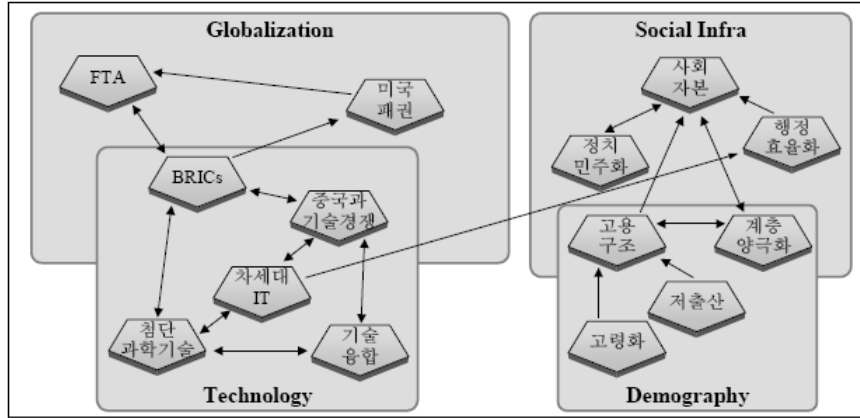


자료: Mats Lindgren and Hans Bandhold, 2003, 『Scenario Planning: The Link Between Future and Strategy』, p.58

[그림 IV-2] 경향 도출을 위한 유형화 작업

둘째, 분석 단계에서는 주로 시나리오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추적 단계에서 경향을 도출하고 유형화를 수행하고, 분석 단계에서는 이러한 경향 사이에 존재하는 일종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관련 경향 중에서 가장 중요하여 다른 경향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적이고 거시적인 동향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적인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경향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관련성은 인과 고리(causal loop)를 통해서 파악하게 된다. 인과 고리는 전형적인 인과관계를 묘사한 그림과 유사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중요하고 다른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을 마치 외생변수처럼 위쪽 혹은 왼쪽에 배치한다. 반대로 다른 경향으로부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은 마치 내생변수처럼 아래쪽 혹은 오른쪽에 배치한다. 물론 이 과정은 단기간에 완결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완성되어야 한다([그림 IV-3] 참조).



자료: 최항섭, 음수연, 전미경,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2006: 154

[그림 IV-3] 인과 고리: 2030 미래한국예측 사례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서 도출된 시나리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와 관련이 깊다. 먼저, 상상 단계에서는 사실상 시나리오 작업이 마무리 된 후, 이를 정책적 혹은 전략적으로 어떻게 시나리오들을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 때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거나(insanity level), 현실에 너무 가깝지 않은(under-stimulating level) 중간 수준, 즉 달성하기에 불가능하지 않으면서 도전해 볼만한 수준(barrier-breaker)이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결정 단계에서는 어떤 전략을 실행할 지를 결정하며, 행동 단계에서 전략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나 적용 정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BASIC

BASIC은 ‘기업전략에서 Batelle 사의 시나리오 투입작업’(Battelle Scenario Inputs to Corporate Strategy)을 의미한다. 이 기법은 무엇보다도 핵심 변수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보다는 여러 변수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기법은 기업의 입장에서 시장과 고객의 판단력에 기초하여 장기적이고 우발적인 대형 사고에 관한 정보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Huss and Honton, 1987).

BASICS도 여러 단계를 과정을 겪어서 결과를 산출한다. 크게 ‘시나리오 작업+교차분석+컴퓨터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BASIC 기법 역시 스웨덴 T.A.I.D.A. 시나리오 기법과 마찬가지로 ‘트렌드 도출’과 트렌드를 토대로 한 ‘시나리오 도출’방법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T.A.I.D.A. 시나리오 기법과 BASIC 기법의 차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경향을 도출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 방식을 위스콘신 대학에서 발전된 라운드 로빙(round-robin) 방식으로 진행한다. 둘째, 경향을 조합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일정 수준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BASICS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예측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정의와 구조, 그리고 영향 범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변수(descriptor)를 정하고 각 변수값에 대한 초기값을 지정한다. 교차 영향 행렬 표(cross-impact matrix)은 이러한 변수 사이에 관계를 하나의 표로 구성한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연구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은 낮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건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⁹⁾

후스와 혼통(1987)이 제시한 국방 분야의 BASICS의 적용 예를 살펴보면, BASICS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은 만약에 군항공기 제조업자들이 미국 정부의 스텔스 폭격기 투자 규모에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어떻게 BASICS를 활용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스텔스 폭격기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정한다. 이를 위하여 델파이 조사, 문헌 연구, 전문가 조사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이러한 요인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 범위를 확정하여 각 변수와 변수값을 정한다. 물론 각 변수는 서로 배타적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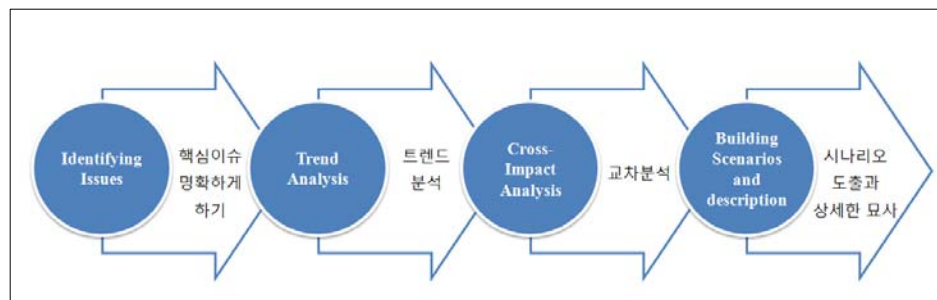
이렇게 정해진 변수와 변수값은 전문가들에 의해 확정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변수의 정의, 중요성, 배경 지식, 최근 동

9)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은 다양한 형태의 변수, 조건들을 바탕으로 하는 특정한 수학적 혹은 통계학적 모형이 있을 때, 그 모형의 결과가 변수와 조건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혹은 얼마나 변하는지를 평가하는 분석이다(이명진, 1998).

향을 고려하여 교차영향을 평가한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교차 행렬을 개발하게 된다. 예를 들면, 전체적인 미국 국방비 규모는 전략핵무기운반차량(strategic nuclear defence vehicles: SNDV)의 수와 연결하여 교차행렬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차행렬을 통해 행과 열에 상호관련이 깊은 변수를 배치하여 상호 영향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러한 가능성은 질적 차이나 순위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주로 정도를 나타내는 양적인 척도로 표현한다. 만약 10개의 디스크립터(변수)가 3가지 상황(변수값)을 포함하고 있다면 행과 열에 배치한다고 할 때, $10 \times 3 \times 2 = 60$ 총 60개의 가능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다. <표 IV-1>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 표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 BASICS 교차분석

		미국 국방 비용 (GNP 대비)		
		9-13% GNP	6-9% GNP	3-6% GNP
미국 전략 핵무기 운반 차량 수	> 2,400	2	-1	-2
	2,000 - 2,400	1	0	-1
	1,700 - 2,000	-1	0	1
	< 1,700	-2	-1	2



자료: Planning Review, 1992; Gill Ringlandm 1998, Scenario Planning: Managing For the Future, p.195.

[그림 IV-4] BASIC 진행 과정

3) MICMAC

MICMAC(Matrice d'impacts croisé Multiplication à un classement) 은 프랑스 국립예술과학원에서 개발한 시나리오 기법이다. MICMAC 역시 미래 예측의 대상에 영향을 미칠 거시적 동인과 경향을 도출하고, 추출된 거시적 동인과 트렌드들의 변화 모습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다른 시나리오 기법과 유사하다. 아울러 시나리오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따라서 Battelle 사의 BASIC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MICMAC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주제의 변수의 특정한 경향을 찾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한다. 둘째, 이렇게 수집된 자료는 상호영향분석에 투입된다. 이 과정에서 변수 간 영향 방향과 강도는 전문가가 결정하게 된다. 셋째, 상호영향분석을 통해 얻어진 구체적인 경향의 조합 즉 다수의 시나리오를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다수의 시나리오를 좀 더 가능성이 많은 시나리오로 압축한다(최향섭 외, 2005).

4) The Futures Group의 미래연구 방법

The Futures Group은 주로 국제정치 및 방위산업을 연구하는 국제전략정책연구기관으로 특히 글로벌 방위업체들의 미래전략 프로젝트를 연구한다. 이 기관에서도 미래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는데 전형적인 시나리오 도출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The Futures Group의 시나리오 기법 역시 연구대상에 영향을 미칠 여러 변수들을 도출하고, 그 변수들의 미래 가능성을 추출한다. 그리고 이를 조합한 후 이에 따른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이 시나리오 기법의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초점을 정한다. 다른 시나리오 기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미래를 연구하기 보다는 매우 구체적인 주제와 영역을 정하게 된다. 이렇게 주제가 명확하게 정해지게 되면, 관련 변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단계

에서는 거시적인 동인을 정하게 된다. 특히 The Future Group의 거시적인 동인은 다른 시나리오와 달리 미시적인 사건보다는 거시적인 동인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앞서 구한 거시적 동인의 조합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거시적 동인의 모든 조합이 시나리오로 구성되지만, 전문가들의 토의를 통해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비논리적인 시나리오를 제외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나리오가 정해지게 되는데, 특히 The Future Group의 시나리오 기법은 막연한 미래보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명시한다는 특징이 있다(최항섭 외, 2005).

5) KITAIP

앞서의 시나리오 기법이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것이었다면, KITAIP (KISDI-Tracking trends-Analysing factors-Imaging futures Process)은 KISDI에서 개발한 것이다. KITAIP은 ‘텔파이 기법’과 ‘시나리오 기법’의 특징을 결합한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텔파이 기법은 일반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제하는 일련의 조사방법을 말한다. 주로 미래 연구의 적용에서는 ‘질적·구조화된·간접적 상호작용 미래연구 방법론’의 하나로 널리 이용된다. KITAIP는 이러한 텔파이 조사의 결과를 시나리오 기법에서 기초가 되는 경향별 영향력, 경향 간 인과 고리를 설정할 때 사용한다(최항섭 외, 2007).

KITAIP 수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주요 경향 도출과 분석 과정이다. 여기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의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칠 변수를 도출하는 것과 그 변수들의 최근 5년 전부터 향후 5년 후까지의 변화 트렌드를 포착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미래예측의 대상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영역의 변수들을 텔파이 조사를 통해 50~100여개 정도 도출하게 된다. 여기에서 수집된 변수를 특정 이슈의 미래변화에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불확실한지에 대해 3점 또는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분류한다(<표 IV-2> 참조).

〈표 IV-2〉 주요 변수 분류 및 도출 방식

불확실성 정도				
낮음	중간	높음		
	A	B	높음	영향력/중요성수준
		C	중간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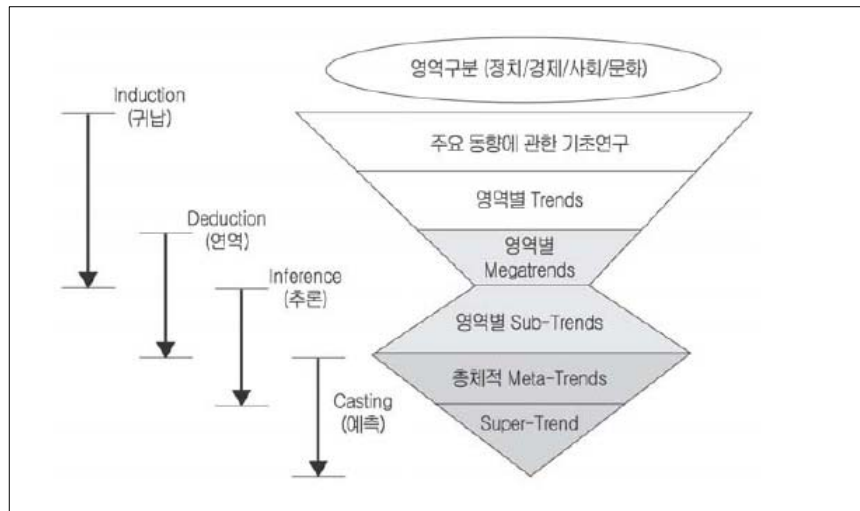
자료: 최항섭 외. 2007. p.55.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경향 중에서 거시적 동인(driving forces)이 되는 경향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거시적 동인은 미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환경을 말한다. 거시적 동인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거시적 동인 분석은 거시적 동인들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을 통과하여 미래의 어느 시점까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찾는 것이다. 특히 KITAIP은 이 과정에서 트렌돌로지를 적용하는데, 이는 질적 요인분석법 원리에 준거한 탈집락화(de-clustering)-재집락화(re-clustering) 절차를 통해 영역초월적인 보편적 경향, 영역을 가로지르는 횡단적 경향,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적 경향을 살펴보는 것이다([그림 IV-5] 참조).

세 번째 단계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주요 변수를 선택한다. AHP기법은 계층화 분석법 또는 이원비교방법 등으로 불리는데, 변수를 두 개씩 매치를 시켜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게 한다. 아울러 수들의 수가 많아서 선택에 혼란을 줄 때, 이를 두 개씩 비교함으로써 인지적 오류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경향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영향관계 분석을 한다. 이때 두 가지 방식의 상호영향관계 분석기법을 적용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연구자가 기존에 획득한 자료를 행렬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 사용되는 행렬은 일반적인 상관관계 계수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하게 상호작용 행렬은 ‘변수 X_i 의 사건이 일어날 경우, 변수 X_j 의 사건이 일어날 것에 얼마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그 조건부 확률을 살펴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변수 x_i 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수 x_j 가 발생할 확률에 대해 일반적으로 5가지의 척도가 사용하여, 상호작용 행렬의 세로 열에는 발생할 것을 가정한 변수군을, 가로 열에는 변수 x_i 가 발생했을 때 x_j 의 발생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군을 배열하는 것이다 (<표 IV-3> 참조).



자료: 최항섭·김문조·이명진·김희연. 2007. p.90.

[그림 IV-5] 트렌돌로지(trendology) 연구절차 개요도

<표 IV-3> 상호영향관계 분석표 예시

영향을 줄 / 영향을 받을	변수 x_1	변수 x_2	변수 x_3	변수 x_3
변수 x_1		+2	+1	-2
변수 x_2	-1		+1	0
변수 x_3	+2	0		+1
변수 x_3	+2	+2	-1	

자료: 최항섭·김문조·이명진·김희연. 2007. p.90.

상호영향관계 분석에서 꼭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만을 사용하는 것은 아

니다. 양적 자료 분석을 통해 상호영향관계 분석을 실시할 수도 있다. 질적인 자료를 양적인 방법으로 분석하기 위해 변수를 ‘사건’으로 설정하고, 각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2~3개로 정리하여 ‘변수값’지정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미래 도출과 전략제시를 한다. 이 단계에서도 몇 개의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2 방식, N개의 변수 조합 방식, 미래 맵핑 방식이 있다. 2×2 방식은 미래의 이슈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현 시점에서는 그 변화의 방향이 어디로 갈지 대단히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 2개(A로 갈 확률 50%, B로 갈 확률 50%)를 선정하고 선택된 2개의 불확실성을 토대로 시나리오 4가지를 도출한다. 반면에 N개의 변수 조합 방식은 미래의 이슈변화에 핵심적 영향을 미칠 N개의 변수들을 도출하고, 각 변수들이 미래에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예측하여, 이를 토대로 미래상을 만드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미래 맵핑 방식은 요인도출→변수조합→시나리오 생산이라는 기존의 미래예측방법론이 고정된 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법론이다. 미래 맵핑은 시나리오 작업이 단순히 미래의 상들만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나리오 상황에서 미래에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일어나길 희망하는 일들이 무엇인지까지 도출한다. 이 방법은 정책을 수립 시 시나리오의 추상성을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

2. 인구가족구조 시나리오 기법 수행 결과

가. 시나리오 기법 수행 틀

일반적 계량 모형들이 기본적으로 ‘과거로부터의 외삽(Extrapolation)’에 근거한다. 반면에 시나리오 기법은 불확실성이 내포된 불연속성(Discontinuity)을 고려하여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객관적인 자료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의 다양한 형태의 주관적이고 질적인 지표를 포함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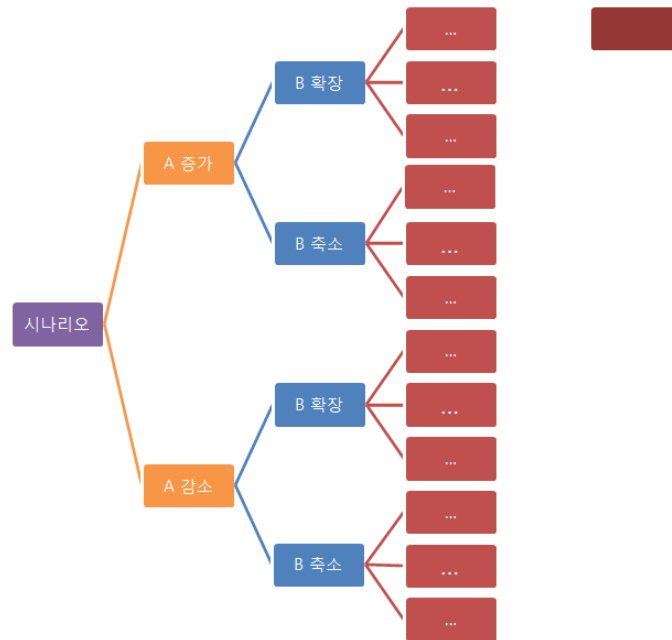
여기에서 인구가족구조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시나리오 기법은 기본적으로 선행 기법에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단계를 따르고자 한다. 즉

연구자와 전문가들의 논의를 기반으로 주요 관련 변수를 도출하고, 이 변수 사이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자료를 보다 광범위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확보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기초값으로 삼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여기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일종의 베이지안 시뮬레이션으로 전문가들의 선택과 예측이 기초값으로 투입되고 ‘우연’이라는 속성도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시나리오를 정리하고 좀 더 가능성이 높은 몇 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다음 표는 이러한 시나리오 기법 수행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표 Ⅳ-4〉 인구가족구조 예측을 위한 시나리오 기법 수행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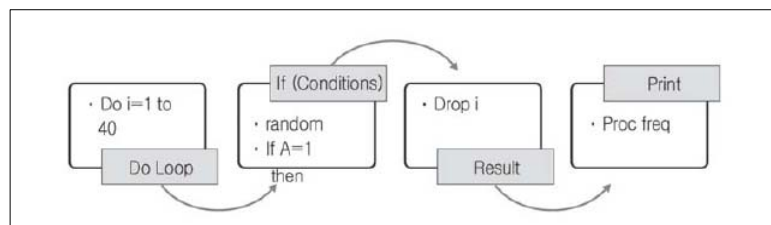
항 목	작업 내용
기초자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하고자 하는 주제에 대한 정의와 구조를 설정 -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 - 불안정성 예측 기초 지표 목록 작성
전문가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예측 지표 확정 - 중요 예측 지표 간 순위 및 중요도 확정 - 중요 예측 지표별 경우/상황을 판별
자료 정리 및 시뮬레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측 지표 간 상호영향행렬 완성 - 시뮬레이션 실시 (연구진)
시나리오 정리	최종 시나리오 선택

마지막 단계에서는 연구진에 의해 시뮬레이션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림 Ⅳ-6]과 같은 시나리오 기법 산출물이 제시될 예정이다.



[그림 IV-6] 시나리오 기법 산출물

이러한 시나리오 기법은 앞서 언급한 KITAIP과 유사한 방식을 채택한다. 다만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초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AHP가 아닌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회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론 상호연향행렬을 만들기 위한 기법과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논리는 유사하다. [그림 IV-7]과 [그림 IV-8]은 이러한 상호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논리 관계도와 분석 프로그램의 예를 제시한다.



자료: 최항섭·김문조·이명진·김희연. 2007. p.97.

[그림 IV-7] 상호영향관계 분석을 위한 논리 관계도

```

data sp;
    do i=1 to 40
        X1=rantbl(0, 0.300, 0.500, 0.200);
        if X1=1 then X2=rantbl(0, 0.140, 0.180, 0.060);
        if X1=2 then X2=rantbl(0, 0.040, 0.160, 0.100);
        if X1=3 then X2=rantbl(0, 0.160, 0.140, 0.020);

        if X1=1 and X2=1 then X3=rantbl(0, p, p)
        if X1=1 and X2=2 then X3=rantbl(0, p, p)
        if X1=1 and X2=3 then X3=rantbl(0, p, p)
        if X1=2 and X2=1 then X3=rantbl(0, p, p)
        if X1=2 and X2=2 then X3=rantbl(0, p, p)
        if X1=2 and X2=3 then X3=rantbl(0, p, p)
        if X1=3 and X2=1 then X3=rantbl(0, p, p)
        if X1=3 and X2=2 then X3=rantbl(0, p, p)
        if X1=3 and X2=3 then X3=rantbl(0, p, p)

        * 여기서 변수 X3의 발생 상황의 경우의 수는 2로 설정을 하였다
        result=trim(X1||X2||X3||X4||X5)
        output
        end
        drop i;
    run

proc freq data=sp;
    table result;
run

```

자료: 최항섭·김문조·이명진·김희연. 2007. p.99.

[그림 IV-8]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예시)

나. 전문가조사와 시뮬레이션 결과

1) 가족환경변화 영역과 가족환경변화 요인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요인을 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는 가족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영역과 그러한 변화와 관련이 깊은 가족변화 요인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정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2011년 9월과 10월 사이에 닐슨코리아컴퍼니에 의해 이루어졌다. 관련 연구진에 의해 질문지가 완성되었고, 인터넷 조사를 통해 전문가 96명의 유효 답변이 수집되었다.

먼저 가족환경변화의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표 IV-5>에 제시되어 있다. 1순위는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2순위는 가족

구성방식, 3순위는 가족의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의식주 등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의례, 가족의식이나 가치, 가족주거 및 생활환경, 가족구성방식,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 가족관계와 이웃 혹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가족구성방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과 가족의식이나 가치, 가족의례, 가족주거 및 생활환경,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 가족의례, 가족관계, 이웃 혹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로 나타났다. 3순위는 가족의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과 가족구성방식, 가족의식이나 가치,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 가족주거 및 생활환경과 가족관계, 이웃 혹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순위를 모두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가족환경변화의 영역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영역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순위에 가중값 3, 2, 1을 각각 적용하였다. <표 IV-5>의 마지막 열은 이러한 식을 반영한 최종 합계를 보여준다. 물론 모든 영역을 다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합계의 분포를 고려할 때 상위 3개 영역을 선택하였다. 합계에 의하면, 가장 큰 변화를 보여주는 가족환경변화 영역은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 가족의례(명절, 제사, 결혼 등), 가족의식이나 가치로 나타났다.

〈표 IV-5〉 가족환경변화 영역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	24.0	14.6	15.6	116.8
가족의례 (명절, 제사, 결혼 등)	22.9	10.4	17.7	107.2
가족의식이나 가치	18.8	14.6	14.6	100.2
가족구성방식	10.4	24.0	15.6	94.8
가족주거 및 생활환경	12.5	13.5	9.4	73.9
가족의 기능이나 역할	7.3	11.5	11.5	56.4
가족관계	2.1	7.3	9.4	30.3
이웃 혹은 지역사회와의관계	2.1	4.2	6.3	21.0

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순위에 가중값 3, 2, 1을 각각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중요 가족환경변화 영역을 대표하는 구체적인 하부 영역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족환경변화 영역을 상위영역과 하위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본 결과는 <표 IV-6>에 제시되어 있다. 하위 영역은 일단 가장 높은 하위영역에 평가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변화정도는 4점 척도의 평균값인 2.5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이러한 측정값을 살펴보면,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서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문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3세대의 독립적 생활공간의 주택형태 확산, 단독주거 주택 확산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례 영역에서는 결혼에 있어서 집안끼리의 결합보다는 당사자의 관계로 변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장례식을 치르지 않음, 전통적 방식의 제사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식이나 가치의 영역에서는 부부관계가 부모 자녀관계보다 가족관계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족 내 남녀의 역할구분이 사라짐, 가족의 안녕이 개인보다 우선시 될 것이라는 의견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6> 가족환경변화 요인의 세부영역

상위 영역	하위 영역	평가정도
의식주 등 라이프스타일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문화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698
	주택 내부 공간 설계 기술 발달로 조부모-부모-자녀세대(3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택형태가 확산될 것이다	.625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 방식이 축소되고 단독주택 주거가 확산될 것이다	.562
가족의례 (명절, 제사, 결혼 등)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기보다는 당사자끼리의 관계가 될 것이다	.781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될 것이다	.771
	전통적인 방식의 제사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531
가족의식이나 가치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가족관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781
	가족 내 남녀의 역할구분은 없어질 것이다	.646
	가족의 안녕은 개인보다 우선시될 것이다	.594

주: 하위영역에 평가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변화정도는 4점 척도의 평균값인 2.5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로 측정하였다.

가족환경변화의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과는 <표 IV-7>에 제시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요인이 인과관계 속에서 가족환경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넓은 의미에서 연관성이 있거나 일종의 환경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가족환경의 변화에 대한 요인의 1순위는 인구학적 구조, 2순위는 노동방식 및 근로환경, 3순위는 노동방식 및 근로환경과 여성의 지위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순위는 인구학적 구조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치관, 노동방식 및 근로환경, 여성의 지위와 정치 환경, 생태계 등 자연환경, 국내외 경제와 대외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노동방식 및 근로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성의 지위, 인구학적 구조와 가치관, 국내의 경제, 과학기술, 생태계 등 자연환경, 정치 환경, 대외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3순위는 노동방식 및 근로환경과 여성의 지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과학기술, 가치관, 인구학적 구조, 생태계 등 자연환경, 국내외 경제, 대외환경, 정치 환경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7〉 가족환경변화 요인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합계
인구학적 구조	56.3	16.7	6.3	208.3
노동방식 및 근로환경	9.4	20.8	28.1	97.9
가치관	17.7	16.7	9.4	95.8
여성의 지위	6.3	19.8	28.1	86.5
과학기술	0.0	8.3	16.7	33.3
국내외 경제	1.0	11.5	3.1	29.2
정치 환경	6.3	2.1	1.0	24.0
생태계 등 자연환경	2.1	3.1	5.2	17.7
대외환경	1.0	1.0	2.1	7.3

주: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순위에 가중값 3, 2, 1을 각각 적용하였다.

가족환경변화 요인의 하위영역에 대한 적합 정도는 분석결과는 <표 IV-8>에 제시되어 있다. 가족환경변화 요인의 하위영역은 이주민 수가 1.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고령화(1.17), 혼인율(1.16), 이혼율(1.14), 출산율(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적합 정도의 분포를 고려하여 상위 4개 지표 즉 이주민수, 고령화, 혼인율, 이혼율을 가족환경변화 요인의 하위 지표로 선택하였다.

〈표 IV-8〉 인구학적 구조의 하위영역의 적합 정도

하위 영역	평균값
이주민 수	1.34
고령화	1.17
혼인율	1.16
이혼율	1.14
출산율	1.09

2) 가족환경변화 영역과 가족환경변화 요인

<표 IV-9>는 앞서 선택한 가족환경변화 영역인 라이프스타일과 주요 가족환경변화 요인인 인구구조 관련 변수가 구성하는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이다. 모두 5개 변수가 투입되었으며, 기초값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사용하였다. 조사결과는 총 100회 시뮬레이션을 반복한 것이다. 물론 다수의 시나리오가 산출되었으나, 여기에서는 상위 3개 시나리오만 제시되어 있다. 확률값(혹은 가능성)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상위 3개 시나리오만으로도 대표성은 충분하다. 예를 들면, 제1순위 시나리오의 확률값은 54%에 이른다. 이는 전체 시나리오 종류 중에서 제1순위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54%라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라이프스타일 중에서 가장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정의 음식문화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모든 상위 시나리오에서 가정보다는 외부에서 식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인구구조 관련 변수는 다소 차이가 있다. 1순위와 2순위 시나리오에서는 이주민 수는 증가할 것으로, 3순위 시나리오에서는 이주민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고령화는 모든 순위 시나리오에서 증가할 것으로, 혼인율은 1순위 시나리오에서는 유지되지만, 2순위, 3순위 시나리오에서는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와 3순위 시나리오에서 이혼율은 증가하지만, 2순위 시나리오에서는 이혼율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9〉 인구구조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순위	음식 문화	이주민 수	고령화	혼인율	이혼율	확률값
1	외부	증가	증가	유지	증가	54%
2	외부	증가	증가	감소	유지	18%
3	외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10%

주: 시뮬레이션 100회 실행 결과임.

음식문화: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문화는 점차 축소될 것이다

<표 IV-10>은 가족의례 부문에서 제일 크게 변할 것으로 예측되는 결혼 문화와 인구구조 관련 변수 사이의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1순위 시나리오의 확률값이 49%이르는 것으로 알 수 있듯이 상위 시나리오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2순위 시나리오의 확률값은 12%, 3순위 시나리오의 확률값은 12%에 이른다.

1순위 시나리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결혼문화는 집안보다는 당사자 중심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주민은 증가, 고령화 증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할 것이다. 2순위 시나리오는 1순위 시나리오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유일한 차이는 이혼율이 유지된다는 점이다. 한편 3순위 시나리오는 집안 중심의 결혼문화가 유지되지만, 이민자는 증가, 고령화는 증가, 혼인율은 유지, 이혼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표 IV-10〉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의례의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순위	결혼문화	이주민 수	고령화	혼인율	이혼율	확률값
1	당사자	증가	증가	감소	증가	49%
2	당사자	증가	증가	감소	유지	12%
3	집안	증가	증가	유지	증가	12%

주: 시뮬레이션 100회 실행 결과

결혼문화: 결혼은 집안끼리의 결합이기보다는 당사자끼리의 관계가 될 것이다

마지막 시뮬레이션은 가족의식의 변화와 인구구조 변화 요인으로 이루어진 시나리오에 관한 것이다. 이번 시나리오 시뮬레이션 결과 역시 비교적 높은 확률값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대표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1순위 시나리오에 따르면, 가족관계의 중심이 부부관계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주민은 증가, 고령화는 증가, 혼인율은 감소, 이혼율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2순위 시나리오는 1순위 시나리오와 유사하지만 혼인율만이 유지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3순위 시나리오는 부모 관계가 가족 관계의 중심이 되지만, 인구구조 변화 요인에 대한 예측은 1순위 시나리오와 동일하다. 이주민은 증가, 고령화는 증가, 혼인율은 감소, 이혼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Ⅳ-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의식의 변화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순위	가족의식 (가족관계중심)	이주민 수	고령화	혼인율	이혼율	확률값
1	부부 관계	증가	증가	감소	증가	50%
2	부부 관계	증가	증가	유지	증가	12%
3	부모 관계	증가	증가	감소	증가	9%

주: 시뮬레이션 100회 실행 결과

가족의식: 부부관계가 부모자녀관계보다 가족관계의 중심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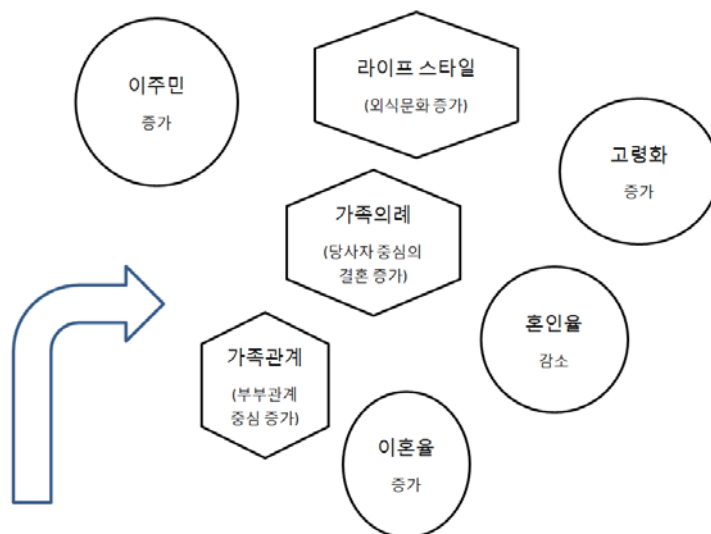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나타난 시나리오를 하나의 종합 시나리오로 종합할 필요가 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결과는 하나의 시나리오로 대체로 수렴되고 있다. 가족환경 영역의 경우 대부분 시나리오가 라이프스타일, 가족의례, 가족의식 등 모든 영역에서 유사한 경향을 예측하고 있다.

인구구조 관련 요인도 방향성에 있어서 거의 유사하다. 이주민수와 고령화에 관해서 대부분 시나리오가 증가경향을 예측하였다. 다만 혼인율과 이혼율의 경우 대부분 시나리오가 감소와 증가 경향을 예측하였으나, 몇 개의 시나리오는 유지라고 예측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혼인율과 이혼율에서 크게 방향성이 차이나는 시나리오가 산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성을 포함하는 다양한 시나리오 제시보다는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단일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IV-9]는 가족환경변화 영역과 인구구조 관련 요인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 먼저 가족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영역은 의식주를 포함한 라이프스타일이다. 외식문화의 증가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 다음으로 변화가 큰 영역은 가족의례 분야이다. 예를 들면, 당사자 중심의 결혼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로 변화가 큰 영역은 가족관계이다. 부부관계가 가족관계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족환경의 변화와 관련이 깊은 인구구조의 변화이다.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이주민은 증가, 고령화는 증가, 혼인율은 감소, 이혼율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주민과 고령화에 관해서 모든 시나리오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순위가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혼인율과 이혼율은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림 IV-9]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족환경의 변화: 시뮬레이션 결과

V

토의와 정책적 제안

1. 토의	111
2. 정책적 제안	115

1. 토의

한국 사회에서 가족은 다른 어느 분야 못지않게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족규모가 축소되어 확대가족보다는 부모 및 친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전형적인 가족 형태를 이루었다. 핵가족화로 의 이행은 가족 내 세대 간 접촉을 줄였으며, 기본적인 규모가 단순화되었다. 가족유형도 바뀌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동으로 인한 1인 가족, 노인 가족 및 독거노인가족, 가족해체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 이주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다. 첫 번째는 사회적 요인으로, 산업화 및 도시화 수준, 교육 수준의 변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등이 있다. 두 번째는 인구요인으로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초혼 연령의 상승 추세 및 낮은 출산력, 기대수명의 증가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규범·가치적 요인은 결혼가치관의 변화(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적인 부분으로 판단하는 것), 자녀 양육에 대한 의식 변화, 부양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들 수 있다. 즉 현재 한국은 과거에 비해 다양한 형태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향후 한국 사회의 인구와 가족 구조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먼저 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례로 일본의 가족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래 인구와 가족구조를 예측하고자 객관적·주관적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였다. 장래인구와 장래가족구성은 객관적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장래인구는 코호트요인법에 의해 미래의 성별 연령별 인구를 추계하였고, 장래 가족구성은 앞서 산출된 장래인구를 바탕으로 추계하였다.

이러한 객관적인 기법과 동시에 주관적인 기법도 사용하였다. 객관적 인구·가족 변화 예측은 그 동태성과 급격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추계 방법으로 분석할 경우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고, 단정적인 수치만을 제공한다는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관적 방법은 델파이 기법 등을 이용하여 전문가의 예측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방법은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데 약점

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하여 이러한 객관적 방법과 주관적 방법을 혼합하여 적용하고자 하였다. 즉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복수의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 산출된 각각의 시나리오는 발생가능성을 확률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유사한 인구구조 변동 경험을 가진 일본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향후 국내 인구구조 변동의 방향성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일본 사회의 가족환경 변화 역시 수직적으로는 ‘저출산·고령화’와 수평적으로는 ‘가족의 다양화’라는 뚜렷한 경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어느 사회보다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둘째, 코호트요인법을 사용하여 장래인구추계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인구는 2019년경 48,834,814명으로 정점을 이하고 이 후에는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47,861,035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피라미드는 1960년 경에는 밑변이 넓은 피라미드형이었으나 2010년은 저출산에 따른 유소년층 감소의 영향으로 청장년층의 비중이 큰 중형태를 띠고 있다. 2030년 인구피라미드는 거대한 고령층의 인구가 특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에 가장 큰 연령코호트는 남녀 공히 60세로 남자는 409,678명, 여자는 432,450명으로 예상된다. 2010년이 청장년층 위주의 사회였다면 2030년은 장년층과 젊은 고령층 위주의 사회로 재편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결혼긴장’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의 결혼적령기 연령((남자 31~33세, 여자 28~30세)과 부부 간의 나이차(3세)가 지속될 경우 2015년 적령기 남자인구는 1,074,275명인데 반하여 여자인구는 861,213명에 불과해 적령기 남자인구 중 20% 가량이 짝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결혼긴장은 2020년 잠시 완화되었다가 2025년엔 적령기 남자인구의 13%, 2030년에는 18%가 짝을 못 찾는 것으로 다시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이후에도 결혼긴장은 지속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결혼긴장 현상은 무엇보다도 가족 형성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짝을 찾으려는 남자인구 사이에 경쟁이 강화되고, 외부로부터의 여자인구의

유입 즉 결혼이주, 남성 1인 가구의 증가도 예측이 가능하다.

인구의 변화는 그 절대크기 변화도 중요하지만 연령별 구성비가 달라지는 인구구조 변화도 중요하다. 2010년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35-44세 집단으로 전체의 17.2%에 달한다. 15세 미만의 유소년층은 16.2%인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층은 11.3%이었다. 2030년에 다가갈수록 유소년층 인구비중은 감소하고 고령층 인구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게 된다. 2030년이 되면 유소년층은 11.8%로 줄어든 반면 고령층은 23.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양비의 변화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에 유년부양비가 22.4%로 노년부양비 15.6%보다 더 컸고 전체 부양비는 38.0%이었다. 2015년 경에는 노년부양비는 증가하지만 유년부양비가 더 빠르게 감소하여 전체 부양비는 오히려 소폭 감소한 37.5%를 기록하리라 예상된다. 이후 유년부양비는 18% 부근에 정체되나 노년부양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36.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30년 전체 부양비도 54.4%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그 증가폭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장래가구수는 2010년 17,339,422가구에서 2020년까지는 해마다 약 20만 가구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증가세는 해마다 10만 가구 규모로 둔화되어 2030년에는 20,468,970가구가 될 것이다.

가구당 가구원수도 2010년 2.77명에서 2030년에는 2.3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가구원수 감소는 부모나 자녀가 없이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부부가구나 1인 가구 같은 소가족 가구수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세대 부부가구는 2010년 2,671,616가구에서 2030년 4,190,729가구로 두배 가까운 증가가 예상된다. 1인 가구도 2010년 4,142,165가구에서 2030년에는 5,000,120가구로 백 만 가구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세대 부부가구는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많이 발견된다. 2010년에는 1세대 부부가구 중 65세 이상 가구가 39.1%였던 반면 2030년에는 5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처음부터 자녀가 없이 지낸 경우 보다는 성년이 된 자

녀가 분가한 후 부부만 남게 된 가구들이 상당수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0년에 1인 가구는 65세 이상에서 1,066,365가구가 존재하였고 동시에 25-34세 집단에서도 917,594가구가 있어 고령층과 기혼 전 젊은 청년가구에 1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인 가구의 절반이상이 이 두 집단에 해당되는 셈이다. 2030년에 다가갈수록 전체 1인 가구 규모는 증가하지만 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이 되면 전체 5백만 1인 가구 중 65세 이상이 42.9%에 달하고, 55-64세 1인 가구까지 더하면 그 비중은 절반이 넘는 59.3%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구추계가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 시나리오 기법은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혼합한 주관적인 접근법이다. 전문가 조사 결과는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기 위한 기초값을 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가족과 인구관련 전문가 96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조사가 이루어졌다. 시뮬레이션은 이러한 기초값을 기반으로 다수의 시나리오를 산출한다.

전문가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통한 시나리오 기법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무엇보다도 미래 가족환경의 변화와 관련된 요인으로 인구구조 관련 변수가 선택되었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선행연구 혹은 인구추계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하다. 전문가가 선택한 인구구조 관련 주요 변수는 이주민, 고령화, 혼인율, 이혼율이다.

그리고 가족환경의 변화는 몇 가지 영역에서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표적인 영역은 라이프스타일, 가족의례, 가족의식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음식문화이다. 가족의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결혼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가족관계의 중심이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비교적 소수의 시나리오로 수렴한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는 이주민의 증가, 고령화 증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가족환경 중에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음식문화에서 나타난다. 가정이 아닌 외부에서 식생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족의례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결혼의례이다. 집안보다는 결혼당사

자를 중심으로 하는 결혼의 비율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가족의식 중에서 대표적으로 변할 것은 가족관계의 중심이다. 부부 중심으로 가족관계의 중심이 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요약해 본다면 미래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가족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보다 다양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성은 다른 한편에서 기존 가족의 경계의 축소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존 가족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지원을 대체하기 위한 조직, 제도 등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2. 정책적 제언

장래 인구와 가구 추계 결과에 따른 정책제안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그 첫 번째 측면은 총인구수의 변화이다. 두 번째는 연령구조의 변화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구구조의 변화이다.

한국의 총인구는 향후 십년 내에 감소세로 바뀌고 이후 감속 속도가 점차 빨라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고도성장 시대에서 현재는 성장의 속도가 늦춰지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인구감소가 시작되면 국민총소득이 마이너스 성장하는 시대가 올 수 있다.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의식전환이 요구될 것이다.

특히 총인구수 변화 관련 두 가지 지점에 주목해야 한다. 첫째, 총인구수가 감소세에 접어들더라도 부양부담이 큰 노령층 인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령층의 직업, 연금, 건강, 여가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노령층 취업률은 높은 편이지만 이는 자영업 비중이 높고, 노후보장이 미비한 탓이 크다. 일할 수 있는 노령층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총인구의 변화 속도가 완만한 시기에 인구감소 사회로 적응준비를 마쳐야 한다. 변화 속도가 빨라진 이후에는 대응이 어려워진다. 2010년 48백만이었던 우리나라 인구는 2019년 48.8백만으로 정점이 되고 2030년에는 47.8백만으로 2010년 수

준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이다. 향후 20년 총인구의 변화의 속도가 빠르지 않을 동안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에도 주목해야 한다. 2030년이 되면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연령대는 60세로 84만명 규모로 예상된다. 반면에 지금의 출산율이 유지될 경우 한해 출생아수는 30만 명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한 연령층의 규모가 30대에서는 65만 명, 20대에서는 45만명, 10대에서는 40만명 규모로 줄어든다. 사회의 중심축이 50-60대로 바뀌는 것이다. 사회 전반적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역동성은 언제나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수가 부족해 경쟁력을 잃은 대학을 노장년층의 재교육기관으로 전환시켜 고령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연령별 인구구조에서 남녀 인구의 균형 여부도 중요하다. 과거 남아선호에 따른 출생성비 불균형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 곧 혼인연령에 도달하게 된다. 이는 결혼긴장이라는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 문제는 2020년경 잠시 완화되었다가 이후 다시 심화되리라 예상된다. 출생아수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금처럼 남자와 여자가 평균 3살의 나이차가 유지된다면 결혼긴장은 계속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우선 여성의 혼인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취업이 결혼생활과 상충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또한 결혼긴장은 남녀의 적정 혼인연령차이라는 규범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남성의 사회진출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남녀의 사회생활 시작 시기를 맞추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내국인의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제결혼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도 필요하다. 성비불균형은 혼인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국내유입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외국인과 자연스런 만남과,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가정을 배려하는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구 측면에서 변화에 따른 정책제안이다. 전체 가구 수는 총인구수와 달리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부부만으로 구성된 1세대 부부가족이나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소가족화의 영

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1인 가구는 연령대별도 나누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기준 90만 가구를 넘어선 25-34세 가구는 2030년에는 70만 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반면에 노년층 1인 가구, 특히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주택 등 관련 정책도 증가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노년 1인 가구에 초점을 맞추어 주택이나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살펴본 가족환경과 인구구조의 변화도 유사한 정책적 대안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가족의 라이프스타일과 다른 유형의 라이프스타일이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가족의례나 가족의식도 결혼당사자나 부부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고령화 증가, 혼인율 감소, 이혼율 증가라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볼 때 그 함의가 보다 뚜렷하다.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비전형적인 가족’이 증가하고 가족의례, 가족의식에서 비전형적인 부분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주민의 증가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어쩌면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의 안정성이 낮아질지도 모른다. 그 만큼 보다 수평적이고 다양한 관계에 기반하고 기존 가족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개인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을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고용과 복지를 기반으로 한 결혼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출산이라는 재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율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최근 사회 불평등의 흐름을 고려해 볼 때, 지금 농촌 남성의 결혼문제가 저소득층 남성의 결혼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불평등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고용과 보상에서 불평등 축소와 고용의 유용성 확대,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확대는 전체적인 성차별 시정에 효과적일뿐만 아니라 결혼과 육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혼인율과 출산율의 양적인 증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향상도 중요하다. 미혼남녀의 결혼뿐만 아니라 기존부부의 임신부터 출산, 나아가서 자녀의 교육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 마디로 말해서 혼인율 저하와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인구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과 연결되는 문제이다. 교육, 노동, 복지가 통합되어 여러 가지 경로에서 지원하고 다

수의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주민의 증가는 더욱 이러한 필요성을 더욱 크게 한다. 경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다소 그 경향이 줄겠지만, 결혼시장에서 성비 불균형은 당분간 결혼이주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국제결혼 부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정책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각종 행정지원 등 각종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민 센터나 문화 센터에서는 노년층과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정지원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행정지원 체제는 이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다수를 차지하는 미래에는 이들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심리상담, 사회 연결망 확충을 통한 감성적 지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 노년층이 1인 가구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가족의례, 가족의식의 변화에 따른 각종 문화와 여가생활 관련 정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형적인 가족으로 보는 부부와 자녀에 초점을 맞춘 각종 예산, 정책, 프로그램을 조정해야 한다. 대신에 노년층이나 미혼, 비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정부 정책만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기업을 포함한 사적 영역의 노력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환경의 변화에 따른 디자인, 시설 배치 등 장기적이고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영역이다.

참고문헌

- 강란혜(2009). 다문화 사회에서의 일본의 「다문화보육」. **한국보육지원학회지**, 5(2): 72-90.
- 고명자(2007). 전후 가족변동과 노인부양 문제. **일본어문학**, 33: 333-348.
- 공병호(2002). 일본의 저출산율에 대한 정책 고찰. **한국여성교양학회지**, 9, 35-54.
- 권태환 · 김태현 · 최진호(1995). **한국의인구와가족: 1990년인구센서스결과를 중심으로**. 일신사.
- 권태환 · 박영진(1995). **가구구조와 가족형태**.
- 김두섭 · 박상태 · 은기수 편저(2002). **한국의 인구 I, II**. 통계청.
- 김두섭 · 김정석 · 송유진 · 최양숙(2005). **가족구조와 관계의 변화 및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김두섭 · 이명진(2007). 국제결혼부부의 사회인구학적 상이성과 결혼안정성. **한국인구학**, 30(3): 33-56.
- 김명중(2006). 인구감소시대에 진입한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 **국제노동브리프**, 4(1): 70-79.
- 김승권(2001). 인구 및 가족정책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보건복지포럼**, 62: 16-30.
- _____(2005). **인구전환기의 한국 사회 가치관 및 가족변화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오남(2006). 여성 결혼이민자의 부부갈등 미 학대에 관한 연구: 사회문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8: 33-76.
- 김정석(2003). **가족 및 가구 변화.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발표 논문**.
- 김정진(2010). 국가별 다문화 가족정책의 비교. **복지동향**, 18-23.
- 김태현(2006). 장래인구추계를 위한 사망률 예측. **한국인구학**, 29(2): 27-51.
- _____(2010). 우리나라 인구전개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의미. **연금포럼**, 37:4-11.
- 김현진(2004). 고령화의 사회·정치적 영향-한국과 일본의 경우. **사회연구**, 7: 81-97.
- 김형석(2002). 가구주율법에 의한 장래가구추계. **조사연구**, 3(1)
- 김혜영 외(2007). **비혼 1인 가구의 가족의식 및 생활실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모선희(1999). 노인과 가족- 흔들리는 가족, 외로운 노인. 김익기 외. **한국노인의 삶**. 81-122.
- 민현주 · 김종숙 · 김난주 · 하갑래(2008). **사회서비스 분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Ⅱ 여성인력공급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동성(2008). 일본 과소지역에서의 ‘국제가족’의 형성과 지역사회의 대응: 야마가타현의 사례분석. **한국문화인류학**, 41(1): 129-165.
- 박경숙(2003).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변화. **한국의 인구 및 주택 심포지엄 발표 논문**.
- 박재간 · 모선희 · 원영희(1996). 노인생활실태 및 정책방향- 저소득층 노인을 중심으로. **노인복지정책연구**. 4권, 한국노인문제연구소.
- 백진아(2007). 한국기혼여성의 가족경험. **담론** 201, 10(3): 241-269.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 설광언 · 최경수 · 윤희숙 · 유한옥 · 김태종 · 송준혁 · 조운영(2006). **경제사회 여건변화에 대응한 사회정책방향**. KDI.
- 설동훈 · 서문희 · 이삼식 · 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송유미·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진출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1(1): 27-61.
- 송태민(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100-116.
- 송태민, 이중순(2010).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황과 대책. **보건복지포럼**, 169: 100-116.
- 송혜림 · 성미애 · 박정윤 · 진미정(2009). 경제위기와 가정: 가족의 일상과 대안.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차 가족정책포럼**, 8-49.
- 신윤정(2009). 일본의 “새로운 저출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104-115.
- 안현미(2007).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 저출산정책의 함의-육아·개호휴업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0: 311-338.
- 양순미(2006). 농촌국제결혼부부의 적응 및 생활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농촌사회학**, 16(2): 151-179.
- 여성가족부(2005). **여성가족통계연보**.

- 우해봉(2009). 한국 사회 인구추계의 정확성과 시사점. **조사연구**, 10(2): 71-96.
- (2010). 확률적 인구 추계. **한국인구학**, 33(1): 161-189.
- 유성호(1996). 노인과 성인자녀의 별거를 결정짓는 변인: 그 이론적 탐색. **한국노년학**, 16(1): 51-68.
-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복순·정운태·이훈희(2010).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청주지역 어린이집 부모를 중심으로-. **사회혁신연구**, 1(1): 37-59.
- 이삼식(2007). 2006년 출산동향 분석과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134, 70-86.
- 이선주·민무숙·신현옥·이태정(2009).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Ⅲ: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과 다각적 협력체계 증진방안**. 여성정책연구원.
- 이원경(2010). 일본의 외국인정책 변화와 “다문화공생정책”. **지역사회연구**, 18(4): 133-153.
- 이유진(2010). 일본의 외국인 재류관리 제도와 지원책에 대한 연구-2000년대 후반의 시책과 제도개정을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31: 1-30.
- 이재분·박균열·김갑성·김선미·김숙이(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결혼이민 부모 출신국 언어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이정남, 윤철재(2010). 일본의 고령자 보건의료 및 복지정책의 현황특성에 관한 연구-2000년대 고령자 의료·복지정책의 전개를 중심으로-.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지**, 16(3): 57-67.
- 전광희(1992). 일본사회의 고령화 문제-도전과 과제. **동국사회연구**, 1, 79-107.
- 정기룡(2010). 일본의 고령사회와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문화적 분석. **일본연구**, 43: 39-60.
- 조현미(2009). 일본의 ‘다문화공생’ 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49-463.
- 최준욱, 전병목(2003). **인구구조 변화와 조세·재정정책(I): 조세정책의 세대간 재분배 효과를 중심으로**. 조세연구원.
- 차홍봉(2007). 저출산·고령화의 전망과 노인에 관한 사회복지법제도의 과제. **한림법학 포럼**, 18: 90-115.
- 최항섭, 강홍렬, 장종인, 음수연 (2005). **미래 시나리오 방법론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향섭, 음수연, 전미경. (2006). **디지털사회의 미래예측 방법론 연구**. KISDI 연구 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향섭. (2007). **미래연구방법론**. KISDI 이슈리포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향섭, 김문조, 이명진, 김희연. (2007). **미래예측방법론**. 21세기 한국 메가트렌드 시리즈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향섭, 이명진. (2009). **미래예측방법론을 활용한 디지털 컨버전스의 미래연구**. 디지털 컨버전스 기반 미래연구(I) 시리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통계교육원(2011). **장래인구추계의 이론과 실무**. 통계청.
- 통계청(2006a). **경제활동인구조사(1989~2005)**. 통계청.
- _____(2006b). **인구동태통계연보(2005)**. 통계청.
- _____(2007a). **장래인구추계(2005~2050)**. 통계청.
- _____(2007b). **장래가구추계(2005~2030)**. 통계청.
- _____(2008a). **“2008년 보건·가족부문 사회조사”결과**. 통계청.
- _____(2008b). **2008 고령자 통계**. 통계청.
- _____(2010). **한국의 사회동향 2010**. 통계청.
- 한영혜(2007). 일본의 글로벌화와 공교육의 변화: ‘다문화공생교육’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76: 365-398.
- 함인희(2008) “가족제도의 다원화와 미완의 양성평등.” 발표문집,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한국 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2): 한국인의 삶의 생활 변화. **한국 사회학회 논문집**: 5-35.
- 황해범(2006). **저출산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출생아수 감소원인 분석 및 대책방안 연구**. 한남대학교 행정정책대학원 석사논문.
- Attali, Jacques.(2005) “Monogamy: Here Today, Gone Tomorrow.” *Foreign Policy*, September/October 2005.
- Bell, M., J. Cooper, and M. Les.(1995). *Household and Family Forecasting Models: A Review*. Commonwealth of Australia. Canberra.
- Bell, Wendell.(1997). *Foundations of Futures Studies: History, Purposes, Knowledge*,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Biles, Jonem, Meyer Burstein and James Friders.(2008). “Introduction.” in Biles, Jonem Meyer, Bursstein and James Friders(ed). *Immigration and Integration*

- in Canada: in the Twenty-first Century*. Montreal and Kingston: School of Policy Studies, Queen's University.
- Bongaarts, John and Griffith Feeney.(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4(2): 271-291.
- Bongaarts, John.(2002). "The End of the Fertility Transition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8(3): 419-443.
- Coonts. S. J.(2005). *Marriage, A History*. USA: Penguin Group.
- Fukawa.(2011). "Household Projection and Its Application to Health/Long Term Care Expenditures in Japan Using INAHSIM-II." *Social Science Computer Review*. 29(1): 52-66.
- Fries, J. F.(1980). "Aging, Natural Death, and the Compression of Morbidit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3:130 - 35.
- Gary, S. Becker.(1997).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in Julian L. Simon(ed.), *The Economics of Population: Key Modern Writings, volume 2*, Cheltenham, UK, and Lyme,NH; Elgar, 1997.
- Godet, Michel.(2001). *Creating Futures: Scenario Planning as a Strategic Management Tool*, London: Economica.
- Glenn, Jerome.(2002). *Introduction to the Futures Research Methods Series*, AC/UNU Millennium Project Proceeding.
- Goldsetein, Joshua R., Tomas Sobotka, and Aiva Jasilioniene.(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35(4): 663-699.
- Huss, Willian R. and Edward J. Honton.(1987). "Scenario Planning: What Style Should You Use?" *Long Range Planning* Vol. 20. No. 4.: 21-29.
- Japan Aging Research Center.(2003). *Aging in Japan*.
- Kaneko, Ryuichi, Akira Ishikawa, Futoshi Ishii, Tsukasa Sasai, Miho Iwasawa, Fusami Mita, and Rie Moriizumi.(2009). "Commentary to Population Projections for Japan."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7(1): 1-46.
- Kohler, Hans-Peter, Francesco C. Billari, and José Antonio Ortega.(2004). "The Emergence of Lowest 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28(4): 641-680.
- Lee, Ronald D. and Lawrence R. Carter.(1992). "Modeling and Forecasting U.S. Mortality."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7(419): 659-671.

- Lee, Ronald D. and Shripad Tuljapurkar.(1994). "Stochastic Population Forecasts for the United States: Beyond High, Medium, and Low."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89(428): 1175-1189.
- Lindgren M. and Bandhold H.(2003). *Scenario Planning: The Link Between Future and Strateg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Morgan, Charlie V. and John P., Hoffmann.(2007). "International Marriages in Japan: A Prefecture-Level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of the Family*. 33(1): 157-182.
- Japan Aging Research Center.(2003). *Aging in Japan 2003 OECD*. Health Data.
- Jun, Kwang-Hee and Seulki Choi.(2010).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of the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 in South Korea Concerning Super-Low Fertility Patterns: A Case Study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3(2): 85-111.
- Nagase, Nobuko.(2006). "Japanese Youth's Attitudes Towards Marriage and Child Rearing." Rebick, Marcus and Ayumi Takenaka,(ed) 2006. *The Changing Japanese Family*. Routledge.
- OECD.(2009). *Society at a Glance 2009*.
- OECD.(2010). *OECD Factbook 2010*.
- Ogawa, N.(2003). "Japan's Changing Fertility Mechanisms and its Policy Respons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 89-106.
- Ogilvy, James A.(2002). *Creating Better Futures: Scenario Planning as a Tool for a Better Tomorrow*,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Olshansky, S. Jay and A. Brian Ault.(1986). "No Access The Fourth Stage of the Epidemiologic Transition: The Age of Delayed Degenerative Diseases." *The Milbank Quarterly*. 64(3): 355-391.
- Philipov, Dimiter and Hans-Peter Kohler.(2001). "Tempo Effects in the Fertility Decline in Eastern Europe: Evidence from Bulgaria, the Czech Republic, Hungary, Poland, and Russ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17: 37-60.
- Preston, Samuel H., Patrick Heuveline and Michel Guillot.(2001). *Demography, Measuring and Modeling Population Processes*. Blackwell Publishers.
- Rebick, Marcus and Ayumi Takenaka.(2006). "The Changing Japanese Family", Rebick, Marcus and Ayumi Takenaka,(ed) 2006. *The Changing Japanese Family*. Routledge.

- Ringland, Gill.(1996). *Scenario Planning: Managing for the Future*,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 Ringland, Gill.(2002). *Scenarios in Public Policy*, Chichester, England: John Wiley & Sons.
- Regalia, Ferdinando and Jose Rios-Rull.(2001). “What Accounts for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 Households?” *mimeo*, University of Pennsylvania.
- Retherford, Robert D, and Naohiro Ogawa.(2005). “Japan’s Baby Bust: Causes, Implications and Policy, Response”, Population and Health Series. No. 118.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Revised version in Fred. R. Harris(ed) 2006. *The Baby Bust: Who Will Do the Work? Who Will Pay the Taxes?* Boulder, Colorado: Rowman and Littlefield.
- Schoemaker, Paul J.(1991). “When and How to Use Scenario Planning: A Heuristic Approach with Illustration.” *Journal of Forecasting*. Vol. 10: 549-564.
- Shostak, Arther.(2003). *Viable Utopian Ideas: Shaping a Better World*, New York: M.E. Sharp, Inc.
- Van der Heijden, K.(1996). *Scenarios: The Art of Strategic Conversation*, New York: John Wiley.
- Wonnacott Ronald J. and Thomas H. Wonnacott.(1991). *Statistics: Discovering Its Power*. New York: Wiley.
- Zeng, Yi, James W. Vaupel, and Wang Zhenglian.(1999). *Household Projection Using Conventional Demographic Data*. *Population Development Review*, Supplement. 59-87.
- Zey, Michael G.(2000). *The Future Factor: The Five Forces Transforming Era*(2nd Edition),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s
- 內閣部(2005). 小児化白書.
- _____(2004). 小児化白書.
- 內閣部(2005b). 社會意識に 関する世論調査
- 總務省(2006). 多文化共生推進.

Abstract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and Its Impact on Family Environment in Korea

Myoung-Jin Lee
Seul-Ki Choi

Korean society has undergone many changes resulting rapid changes of family environment. This study explored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and its impact on family environment around 2030s. For this purpose, we used two different methodologies: population projection and scenario planning. First of all, the results of population projection are as follows: (1) total population is expected to decline. Furthermore, its decreasing rate will be larger; (2) if fertility rates remain low, the proportion of the aging population will rapidly increase; (3) the past imbalance of sex at birth will cause imbalance of sex at marriage market; and (4) single-member households will become the major category of households. Especially, female-single-member households will rapidly increase. Scenario planning provided similar results. Immigrants will increase. Aging and divorce rates will

increase while birth and marriage rates will decrease. These changes of population structure are believed to be related with the following change of family environment: (1) lifestyles including clothing, food, and housing cultures are expected to change the most; and (2) family rituals and family consciousness will rapidly change. To prepare these types of future, the study proposed the expansion and improvement of the policies of care service, insurance, and job for aging population. Extended polici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are necessary to cope with the problem of sex imbalance at marriage market. Central government as well as local governments should give more considerations to single-member households.

2011 연구보고서-5-3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가족환경변화

2011년 9월 28일 인쇄

2011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최 금 숙

발행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대)

ISBN 978-89-8491-446-9 94330

<정가 13,000원>

978-89-8491-442-1 94330 (세트)